

농農 說說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

Content

머리말	04
-----	----

I. 오피니언 리더,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

01 이어령 문화평론가	08
02 정세균 국회의장	12
03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
04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18
05 영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20
06 조정환 前육군참모총장	22
07 박학용 문화일보 논설위원	25
08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8
09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30
10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	32
11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34
12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36
13 임은주 안양FC 단장	38
14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40
15 최불암 배우	42
16 백종원 한우 홍보대사	44
17 오세득 닭고기 홍보대사	46
18 남 선 BBS 경제국장	48
19 황해창 헤럴드경제 부국장	50
20 박상용 CBS 경제부 선임기자	52
21 이주엽 CPBC 정경부장	54

II. 직접 듣는 정책 34선

1 미래성장산업화의 기반 구축 :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춧돌을 놓다'	
01.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60
02. 축산 관련 분야 수출 확대	64
0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68
04. 약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72
05. 농식품 수출 확대	76
06.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산업화	80
07. 스마트 팜 보급 확산	84
08.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88
09. 도시농업 활성화	92
10. 곤충산업 육성	96
11. 종자산업 활성화	100

2	농가소득안정 : '가벼워진 어깨, 잘 사는 농촌'	
12.	농업의 6차산업화	106
13.	농촌관광 활성화	110
14.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114
15.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규제 완화	118
16.	쌀·밭 직불제 확충	122
17.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126
18.	부정청탁금지법 대응	130
19.	친환경농업 육성	134
3	농촌활력 제고 : '신명나는 농촌, 웃음꽃이 활짝'	
20.	농촌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	140
21.	농협사업구조 개편	144
22.	농어촌상생기금 운영	148
4	유통구조 개선 : '신선 농산물, 방방곡곡 달려간다'	
23.	디자인에 기반한 지역개발	154
24.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산	158
25.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162
5	식량안보 : '안정적인 먹을거리, 제2의 국방'	
26.	쌀 관세화 추진	168
27.	식량자급률 제고	172
28.	쌀 수급안정	176
29.	ODA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180
30.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184
6	'소통과 협력을 통한 농식품산업·농촌 발전'	
31.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190
32.	정부3.0 3년 연속 중앙부처 1위	194
33.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198
34.	경영체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	202

III. 농특! 農talk!

1	농심 (農心)	208
2	신토불이 (身土不二)	218
3	한마디 한마당	220

머리말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입니다.

5월에 찾아오는 대표적 절기인 ‘소만(小滿)’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우리 농업계에서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자 한 해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과 현장의 노력에 힘입어 여러 가지 성과도 거두었으나, 우리 농업·농촌에는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개방화,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최근에는 쌀값 하락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에는 기회의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근 농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하여 식품, 의약, 생명, 신소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확산되면서 농업이 새로운 일자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농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농정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자료집 ‘〈농설(農說)〉,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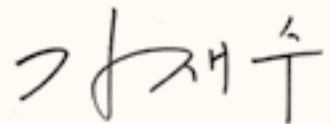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께 우리 농식품산업의 현주소를 묻고, 다양한 경험, 응원과 격려, 정책 제언 등 소중한 의견들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온 전통산업이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성장동력이 될 미래산업입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라듯이, 우리 농업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농식품산업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농정,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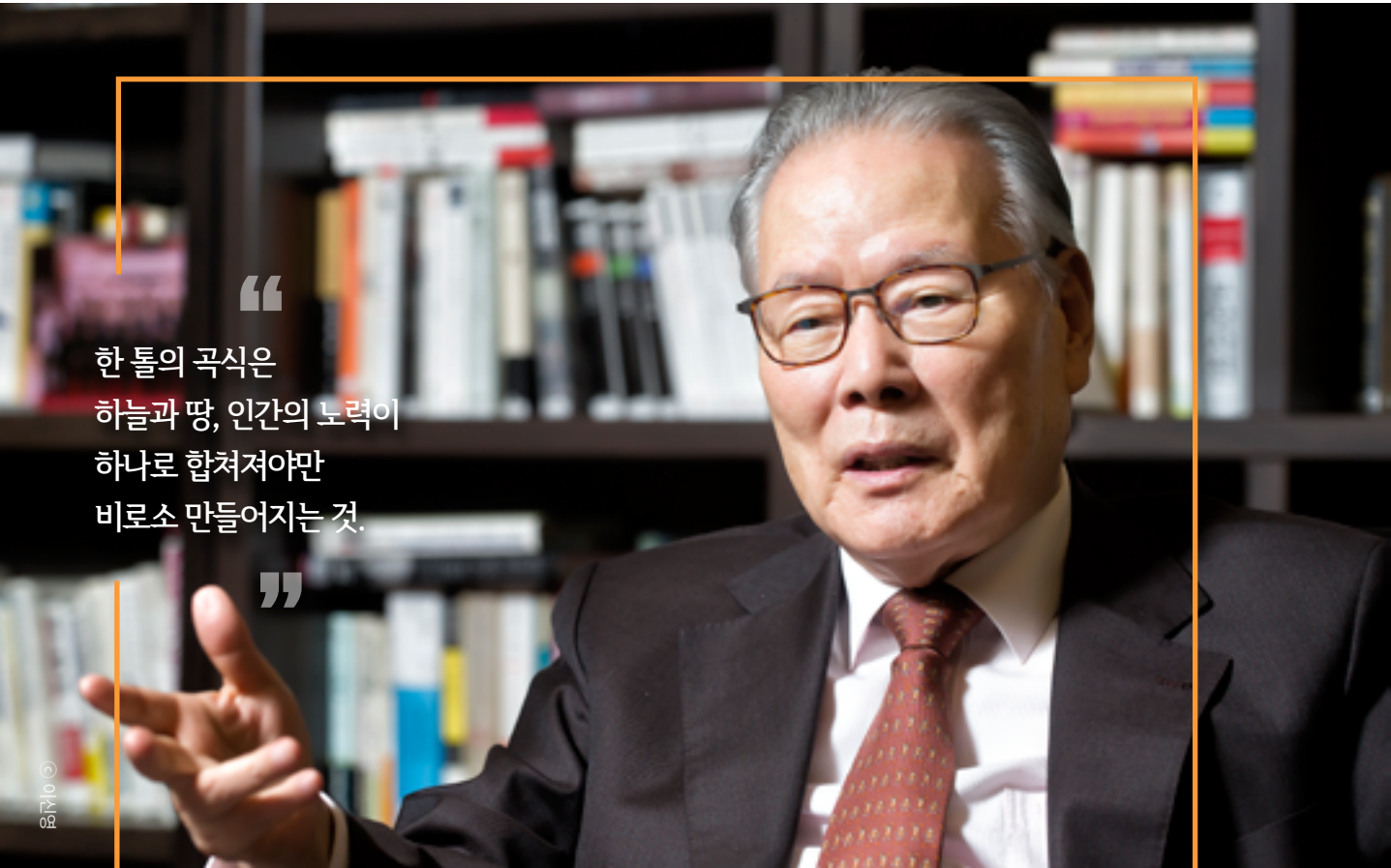


2016 경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박재준 "농부들의 삶"



I

오피니언 리더,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



“
한 톨의 곡식은
하늘과 땅, 인간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
”



이어령

이 시대의 석학을 꼽을 때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 달리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대표 지성인, 이어령 선생이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총명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사색하며 지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농업에 대한 고견을 부탁했을 때, 생명에서 인공지능까지 시대와 범위, 철학과 상식을 넘나드는 설명으로 신(新)농업을 설명했다.

소속

문학평론가
(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주요약력

2008 (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2001~2015 중앙일보 고문
1999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1990 초대 문화부 장관
1988 88서울올림픽 문화행사 기획
1966~2014 이화여대 문리대 석좌교수
1934 충남 아산 온양 출생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화두다.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이 현실화, 대중화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말이다. 자, 인공지능이 도입된 자동차가 나왔다. 이것은 최신 자동차일까? 아니다. 자동차를 개혁해서 만든 또 다른 기계다. 완전 자동화된 차가 나오면 운전 능력이 없는 아이도,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차를 배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다가올 신(新)농업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상이변을 예측하거나, 작물의 상태에 따라 일조량을 조절하는 것들 말이다.

이전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농업이 경쟁력을 잃었을 때, 다른 농업 선진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계화 덕분이었다. 특히 미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의 전 생산양식을 기계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농업기술은 산업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의 AI 시대에도 언제나 새로운 문명과 공존하며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포드는 원래부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농기구인 트랙터 엔진을 개발하려고 한 사람이다. 당시 그 동력으로 전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농촌의 트랙터는 전기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드는 가솔린에 집중한다. 가벼운 가솔린 엔진은 조그마하면서도 빠른 속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알맞았다. 포드는 결국 트랙터의 가솔린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 포드는 처음부터 승용차 개념보다는(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동력으로 엔진을(내연기관) 연구하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승용차가 된 거다. 거기서 알다시피 모든 새로운 기술은 항상 농업기술과 연결이 된다.

AI도 산업시대 때의 포드가 한 것처럼, 농촌의 기계화로 미국은 공업국가라기보다 농업국으로서 세계에 힘을 갖게 되는 거다. AI 시대에 AI 기술로 또 미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인터넷,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차원이 다른 농업기술을 가지게 될 거다.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에 가져올 변화가 궁금하다.

3D프린터와 드론, 빅데이터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로 전염병을 예측하고,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3D프린터와 드론이 농사를 대신 짓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농업이 가능해지면서 혼자서 농사짓고 자급자족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로 보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일례로, 정치도 경제도 평등화를 못했지만 기계만이 평등을 실현했다. 엘리베이터를 떠올려보라. 건강한 청년이든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든 엘리베이터를 타면 10층까지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을 농사에 대입해보면 앞으로 농사에 대한 모든 경계가

없어지고 도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농사는 단순히 육체노동만을 의미했다. 또한 땅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소와 육체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농사꾼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농지를 관리해주니까 농터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쇼핑을 하고, 유목민처럼 여행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농사방식이 이렇다. 미국의 농사는 이미 정보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화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연구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는 대학교수도 농부가 될 수 있고, IT전문가도 농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AI가 인간의 많은 노동을 대신해 주면 인간은 남을 즐겁게 해주고 더불어 사는 이상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만 아는 사람은 AI 시대가 오면 못 산다. 왜? 그런 경쟁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다.

육체적 능력에 평등을 가져온 엘리베이터처럼 인공지능도 또 다른 의미의 평등을 가져온다는 건가. 인간과 인공지능은 상생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서양은 끊임없이 자기를 낳아 준 근본을 부정하고 더 새로운 것을 갈구하며 변증법적 발전을 해왔다. 동양은 아니다. 효(孝)를 해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이다. 곤충이나 동물 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뜯어 먹으면서 생을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 그게 생식의 법칙이다. 모체는 항상 희생하도록 돼 있고 자식 때문에 죽도록 돼 있다. 이게 진보고 진화고, 역사의 발전인데 유독 인간, 그중에

서도 유교만이 내리사랑이 아닌 올려사랑으로 본능을 조절했다. 특히 이런 효를 실천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이었다. 전쟁 중에 한국에 쳐들어온 일본 장수가 총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먼저 챙기는 자식을 보고 크게 감명받아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유명한 사례도 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저 무력으로 천하를 휘둘러 수 있던 시기에도 우리는 효를 가르치고 어질 인(仁)을 마음에 새기라 했다. 또 한편으로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고 해서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본능을 거역하는 동시에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대단한 노력이다.

이런 것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실리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함께 공생하며 그것을 효자로 만드는 능력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알파고가 그 많은 도시를 쳐두고 서울에서 바둑을 둔 게 아니겠나. 자 여기서 결론 하나가 나온다. 자식, 그러니까 생명자본에 가치를 뒤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자본이란 무엇인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 금융자본과 다른 것으로 생명자본주의는 생산이 아니라 생식, 생명에 직결되는 것들이다. 생명자본주의는 의료(건강), 교육, 육아, 출산, 양육, 복지, 공감과 감동(한류), 행복, 문화예술(창조적인 것),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다 자본화 되는 것들을 뜻한다. 종래의 산업주의에서 제일 투자를 안한 분야다.

산업자본이 생기기 이전의 자본은 전부 생명자본이었다. 생명을 물질자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의 원래의 기본인 것이다. 옛날 자본은 다 생명자본이다. 쉽게 말해 새끼 치는 거다. 하나를 투자해서 두 개, 세 개를 얻는 것이 자본이다. 하나만 넣어서 하나만 나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없다. 소를 맡기고 나중에 보면 소가 새끼를 낳는데 황금을 맡기고 나중에 보면 황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농부에게서 나올 겁니다.

과학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금이 불지 않는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지만, 그게 새끼를 치는 것은 아니다. 재 생산되고 실제로 증식하지 않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진짜 자본이 아니라 가짜 자본이라는 거다.

현재의 모든 기준은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 아톰(ATOM, 원자)에다 둔 것인데 이제 곧 아톰의 핵심인 양자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양자는 모든 것이 다 포개어져 있다. 그래서 생과 사,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다. 원자에서는 물질과 비물질이 나누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0과 1로 계산하는 지금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된다. 생각해봐라. 어떤 공간에 두 마리 쥐를 두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라 하면 여기저기 한참을 다녀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 쥐를 백만 마리 뿌려놓으면 그 중 한 마리가 1초도 안돼서 빠져나가게 돼있다. 이게 양자시대다. 양자시대가 오면 그때 비로소 색즉시공이니 유무상통이니 하는 비논리적인 개념이 이해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래의 식량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식량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부 인공 계란, 인공육 얘기뿐이다. 현재는 식물에서 인공 계란을 만든다거나 섬유로 육질과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즉 육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채식육을 육식으로 만드는 얘기다. 이런 걸로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생명자본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과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가능하

다. 그래서 지구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지구의 음식이란 건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거다.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과 A-Life(Artificial Life)를 시뮬레이션하면 인간이 못 먹는 식물이 식량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 식량원이 개척되는 거다.

왓슨은 벌써 레시피를 만든다. 지금까지 인간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맛이 없다고 생각한 것들도 전부 찾아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단적인 예가 쓴맛이다. 원래 자연의 생물 유전자는 쓴 걸 못 먹도록 되어있다. 모든 종자들이(풀 같은 것)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쓴맛을 낸다. 동물들이 못 먹는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의 기호품은 전부 쓰다. 커피, 갓김치처럼, 아이들 못 먹는 어른들의 기호식품화, 즉 유전자에는 없는 맛. 이게 대단한 거다. 인간이 만든 식품이다. 자연은 못 먹는 걸 인간이 먹는다. 인공계란이나 인공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인간이 못 먹는 것으로 얼마든지 식량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기호품인 커피도 옛날에는 못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는다.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AI와 A-Life가 만나 시뮬레이션 하면 현재는 못 먹는 식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쓴맛은 빼고 단맛이 들게 한다든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자연 자체의 식품이 달라지는 거다. 똑같은 껌, 콩이라도 달라지는 거다. 지금은 쌀만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100년 후의 껌은 어떻게 진화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게 A-Life다. 인공생명으로 100년 후의 콩을 만들 수 있다.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생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도킨스가 하려고 했던 거다. 이것이 결국 인류의 위기라고 말하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다.

미래 농업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미래에는 원예식 정밀농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서양만 하더라도 넓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우리는 땅이 좁으니 최대한 그 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생각해보면 서양의 농사법은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것밖에 못한다. 그건 정밀농업이 아니다. 우리 농촌은 예전부터 정밀농업을 행해왔다. 작은 땅에 평당 수확률이 가장 높은 벼를 심고, 그것도 모자라 이모작으로 2배의 수확물을 쥐어 짜냈다. 이런 정밀농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닌 말로 내 집 옥상에서도 충분히 자급자족하고 살 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은 방 안에서도 콩나물을 기르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도시의 방 안에서 농사짓는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기술이 넓은 농지에서나 유용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집안에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상상해봐라. 벽에 걸린 액자형 화분에서 콩나물이 돋아나는 모습을. 이게 우스워 보이냐?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이것이 유행해서 집집마다 콩나물을 기른다고 해보자. 서울의 콩나물만 다 모아도 지금의 몇 만 배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넓은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농업보다 집안에서도 가능한 원예식 정밀농업이 성장할 것이다. 마트에 가지

않아도 신선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생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집안의 환경을 정화하는 다목적 가치로서 실내농업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라는 말이 있다. 본인이 농사지으면서 정작 자기는 사다 먹는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어도 토마토 주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먹는다. 이것은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사람들이 고기를 잡지만 자기들은 생선 통조림을 사 먹는 꼴이다. 그 동네에 유명한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도 그 지역 호텔에서 먹는 오렌지는 저기 멀리 지구 한 바퀴 돌은 곳에서 생산한 오렌지인 것이다.

자급자족 외의 농산물은 빅데이터 등의 인공지능으로 과잉생산 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전농업이 가능해지면 농업 보험도 들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옛날처럼 귀어짜내듯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다. 옷도 자기가 디자인해 만들어 입고, 농산물도 직접 재배해 먹는다, 3D프린터로 집도 스스로 짓는다. 의식주를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먹고, 놀고, 쉬는 거지. 석기시대 때도 하루 일하면 이틀을 놀았다. 오늘처럼 일하는 시대가 없었다. 이런 게 미래의 그림인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 인공지능을 대입하니 자꾸만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신 농업은 결국 먹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인간은 먹지 않고는 못 산다. 지금 먹지 않고 일하는 기계가 우리 세상의 90%를 차지한다. 왜 마차를 증기기관차가 대신하게 되었나? 증기기관의 연료인 석탄이 말의 사료보다 싸게 먹혔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말 한 마리를 키우는 데는 여덟 명의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과 같은 식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계화에 의해서 영국에서 수송에 사용되는 100만 마리의 말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노동자를 위한 식량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고 차가 생긴 것이다.

인공지능이 실현되면 농업형태가 서구와



달라질 것이다. 트랙터로 갈아엎는 산업화된 농업은 없어지고 원예처럼 꾸꾸고 좁은 곳에서도 충분한 식량이 재배되는 정밀농업이 이뤄질 것이다. 그때가 비로소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자연친화적인 세상이 된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자리를 뺏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다.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농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도시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후방지인 농촌이 없으면 도시는 빈 껍데기다. 따라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연의 효자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고 땅에 흙이 없으면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곡식과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곡식은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 톨의 농산물이 가진 의미가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이유다. 농업은 철학이다. 노자는 사람은 흙에 의지해 살고(인법지), 땅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지법천), 하늘은 그 도리에 따르는 것이고(천법도), 그 도리란 자연 그대로의 길을 가는 것(도법자연)이라고 했다. 결국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자연이라는 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혁신은 자연과 생명을 가장 잘 아는 농부들의 머리에서 나올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단한 이유

는 인간이 가르쳐 준 것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딥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딥러닝 기술은 과학자 제프리 힌튼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힌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어도 무서울 게 없다. 중국의 13억 인구가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사람 한 명이 지구를 들었다 놔둘 데.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인제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나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왜냐,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콩이 어떻게 생기는지, 콩에 이것을 섞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전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연계를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과학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생체모방기술(biomimicry)이라고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인간의 기술로는 산불을 막지 못한다. 불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그마한 곤충 하나가 20~30km 밖에서도 근처에 불이 나는 걸 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아 뵈다가 천적들이 불에 타 죽고 없어진 터에 알을 낳기 때문이다. 참, 세상은 알수록 신비하다. 그리고 보면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주의 질서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나? 그냥 알아내서 설명했을 뿐이다. 결국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까이서 마주하는 농부야말로 다음 세대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
농사를 지으며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 했던 것처럼
국회 텃밭을 통해
소통과 협치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세균

평소 친근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온 ‘균블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농업·농촌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농심(農心)을 이해하고자 의원들과 국회텃밭을 가꾸고, AI를 극복하고자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사람이었다. 농업·농촌의 부흥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정세균 의장과의 인터뷰를 한 면에 담았다.

소속
국회의장
제20대 국회의원
(무소속, 서울 종로구)

주요약력
2016.06~現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제16대 국회~現
제20대 국회 국회의원(6선)
2006.02~2007.01
제9대 산업자원부장관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내 또래 지방 출신이면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나 또한 유년시절을 전북 진안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보냈다. 학교에 가는 대신 모를 심기도 했고, 모를 심다가 거머리가 달라붙어 고생한 적도 있다.

그 당시 농촌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일을 하고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이면 항상 동네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곤 했다. 돌이켜 보면 늘 따뜻한 기억뿐이다.

농촌에서 체험한 공동체 문화를 재현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하나 있다. 국회 안에 텃밭을 만든 것이다. 국회 헌정기념관 앞쪽에 국회 텃밭을 조성하고 의원들 30여 명과 함께 가꾸는 중이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듯,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애정으로 밭을 돌보고 있다. 직접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면서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자 하는 게 텃밭 모임의 기본 지향점이다. 농심(農心)을 이해하는 데에 이만한 활동도 없는 것 같다.

겨우내 청보리가 심어져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한 해 농사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동네 사람들과 모내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텃밭을 매개로 여아가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현대인 대부분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 도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농촌의 가치는 무엇이며, 농촌에 다시 활력이 넘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오늘날, 농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넘어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농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많아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 논 농업이 흉수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비가 많이 내려도 논마다 물이 고여 흉수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농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데 나는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탈농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상실한 상태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니 농업

인구가 2016년 249만 6천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더구나 65세 이상 고령 농업 인구 비중은 1949년 농업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 40.3%(100만 5천여 명)로 급증한 반면, 20세에서 49세의 젊은 농업 인구는 1970년 30.5%(440만 4천 명)에서 2016년 18.7%(47만여 명)로 크게 감소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농업 분야의 인재, 즉, 청년농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농은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와 농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일례로 '1만 청년농 양성' 등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해 대책을 마련하되 교육 및 정착지원, 영농기술 지원, 정착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안전망 등 다각도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청년농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꾸준한 정보교류와 정책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에게 농업도 미래 유망 직업이며 안정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AI 발생 직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을 보였다.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정부나 축산 농가는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가.

2016년 11월 해남과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7년 2월에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AI 발생으로 닭 등 가금류 3,787만 수(사육대비 약 20%)가 살처분됐는데 닭의 경우 산란계 36%, 산란종계 51.5%가 살처분 돼 약 1,200톤 정도의 신선란을 수입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반면 일본도 2016년 말부터 AI가 발생했으나 2017년 3월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약 167만 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는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일률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와 차이를 보인데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I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2003년 이후 6번째 AI가 발생했으나 14년이 지난 지금도 대응방법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 일본의 AI 대응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방법과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컸다.

먼저 컨트롤타워의 유무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 방역이 실시된다.

두 번째는 위기경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AI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의 4단계로 돼있어 경보 결정 및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의 유지와 발전이 대한민국을 나아가게 합니다.”

발령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일본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될 시 바로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세 번째는 AI 의심신고 후 확진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우리는 AI 의심신고 다음날 확진 판정이 나지만 일본은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감염 조치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감염 농가 500미터 이내에도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감염 농가에 대해서만 24시간 이내에 살처분한다.

일본의 AI 대응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외국의 다양한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AI나 구제역 등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사육 대책 연구, 백신 준비, 2차 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늘 준비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산물 소비 위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만 당장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다소간의 혼란은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의 85%가 찬성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점대문화와 불공정한 사회현상을 해소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화훼나 한우,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일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해당 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의견이 있고 이미 10여 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와 정부, 권익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청취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체는 고통도 나누고 행복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선도적으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 정부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저렴하고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엔 큰 도움을 줬다. 정부 또한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농업은 종합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활력의 상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축산물 판매 위축, 쌀값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AI와 구제역 등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현재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소득은 60%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농가 소득 대책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스마트 팜 보급 확대, 수출 활로 개척 및 종자·생명산업 등의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정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을 우리의 생명 산업, 식량안보 산업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농촌 관계자들에게 힘이 될 만한 격려를 한다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농업의 시대가 오고 있다. 농업을 선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특히 농업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스마트 팜 보급, 종자·생명 산업 등은 모두 차세대 농업인들이 끌고 나가야 할 주요 핵심과제들이다.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농촌을 찾는 젊은 인재들이 많아지고 우리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기에 농민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소중한 직업이다. 농업에서 희망의 불씨가 커질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의 희망도 커진다. 농민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농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농촌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수준에 맞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농촌을 다양한 문화의 보고이자 여가, 교육의 장으로서 거시적인 관점의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헌법과 제도로 이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약력

現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前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前 김영삼대통령 정무비서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식(食)’이다. 먹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하다. 이제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갖춘 나라는 음식을 통해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성장했고, 전체 소득 또한 경제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마당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자면 여전히 많이 모자란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유통·소비되는 체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먹거리’를 접하려면 먼저 그러한 먹거리가 생산돼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그때만 임가응변으로 가축 사육 농가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AI 사태로 6개월 정도 온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AI가 창궐하게 된 이면을 보면 처참한 수준의 사육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움직임 공간도 없는 케이지 안에 닭을 가둬놓고 마치 알을 낳는 기계처럼 사육한다. 그렇게 생산된 알과 고기가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꼭 생산자만의 책임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의식 부재 등이 얽히고설킨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해야 한다. 생산자가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되, 그것이 제값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국회에서도 친환경 사육과 먹거리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AI 발생 이후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 사육장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존의 사육장들도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농식품부가 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여전히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번 AI로 인해 문제가 된 닭이나 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육 가축, 심지어 작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과 건강한 농촌, 농업을 위한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10년 뒤 중국 시장과의 대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의 FTA에 따라 우리 농산물 수출 시에는 저관세를, 중국 농산물 수입 시에는 고관세를 매긴다. 이는 농가의 반발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특별 요구를 했고 그것을 중국이 양해해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조건이 단 10년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10년 뒤부터는 중국 농산물이 저관세로 수입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농산물이 많아질 텐데 과연 우리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 즉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문제가 여러 과제 중 한 가지가 아니라 특별히 고민하고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이다.

친환경 먹거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비상사태 발생 시 자급 가능한 식량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2015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4%정도다.

“식량생산은 농촌과 농업이 가진 기능의 일면일 뿐, 무궁한 가치를 보고 거시적 농정을 펼쳐야합니다.”

반면 주식인 쌀은 100%이상 남아돈다. 이는 쌀의 과잉공급뿐만 아니라 소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쌀 소비량은 136.4kg정도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그것의 절반인 61.9kg에 불과하다. 그 대신 빵, 국수 등에 이용되는 밀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축산식품의 소비는 크게 늘었다. 그런데 밀은 국내 자급률이 2016년 기준 1.2%밖에 되지 않는다. 돼지고기 역시 수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식량 안보에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전쟁이 나거나 외교 문제로 식량 공급 루트가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곡물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

국내에서도 식량을 어느 정도 생산해 비축하고 쌀 생산은 줄이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량 안보의 여러 측면을 만족시키는 농정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농지를 줄이고 모자라는 것은 수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식량안보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다. 꼭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세계 곡물 시장은 이미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가격 조정시 불평등한 제안을 해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밀을 10%라도 자급할 수 있다면 그런 메이저들의 압력에 10%만큼은 버틸 수 있다. 절대적 수입 농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식량 안보 문제를 넓게 생각해야 한다.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쌀 수급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쌀값 폭락과 쌀 생산 과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쌀 생산조정제다. 쌀 생산을 조금 줄이고 그 공간에 수입 작물 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곡물을 심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부 식량 시장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은 남북 간 관계가 경색돼 쉽지 않지만, 통일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국가 전체 경영 차원에서 꼭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잉여 쌀을 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나면 우호 무역 형태로 조금 더 저렴한 값에 쌀을 파는 식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쌀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그저 ‘농지를 줄여라’ 정도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다. 농지를 줄이는 대신 쌀농사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더라도 쌀 생산성이 좋아서 충분히 현재의 작황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제3세계에 대한 원조 물량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50~60년대를 원조로 살았는데 이제 값야아 될 때가 아닌가. 그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도리이자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나눠줄 충분한 곡식이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식적으로 부정청탁과 뇌물이라면 돈 봉

투가 오가거나 외제 고급차 혹은 값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경우나 해당되지 않거나 꽃, 특산물이나 수산물에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다.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은 19대 국회가 1년을 끌고 오다가 통과된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겪게 될 농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부족했던 아쉬운 출발이었다. 농민들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해 봐야 소득은 부족하고 경영비는 커져만 갔는데, 격려는 못할망정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백만 원까지도 간다는 고가의 선물세트 같은 것은 제외하더라도 농산물 자체는 대상에서 빼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농정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크게 봤을 때 농사를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한다. 어떤 선진 국가도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 한 국가가 온통 도시와 공장으로 덮인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나아가 농촌·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식량 생산은 농촌·농업이 가진 무궁한 가치의 일면에 불과하다. 국가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기지, 우리 고유의 전통과 다양한 문화의 보고이자 여가, 교육, 치유의 장으로서 농촌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창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을 계기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새헌법에 담겨야 한다. 여기에 따른 법률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농업의 비중 또한 더 커지고 존중되길 바란다.

농업은 가장 건전하고
신성한 산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김장환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원로목사)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기 전까지 때마다 모를 심어야 했던 농촌 소년이었다. 선교를 시작했을 때도 직접 재배한 고무마로 자비량(tentmaker) 선교에 나섰을 만큼 농업에 애착이 컸다. 김장환 이사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

극동방송 이사장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주요약력

2000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
1988 명지학원 명예이사장
국민일보 이사
1979 극동방송-아세아방송 사장
1973 한국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통역
1966 한국 십대선교회 회장
1960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1959 목사 안수
미국 기독교사회 한국 대표
1958 밥존스신학대학교 학사·석사

대표적인 종교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유년시절에는 농민학교를 다니면서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들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국민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살던 곳도 경기도 수원의 작은 농촌마을이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면서 쫓다. 모내기도 했고, 모내기하다가 거머리에도 뜯겨봤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수원 농민중학교에 입학했다. 그 곳을 졸업하면 당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수원 농림학교(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나는 시험을 쳐서 수원 농림학교에 합격했고 임과, 농과, 원예과 등 다양한 학과 중에 임과를 선택했다. 유독 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취향은 변치 않아서 나와 관계를 맺은 회사나 교회는 모두 나무가 많다. 극동방송의 사옥에도 테라스가 마련돼 있고 철쭉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지금 사무실에도 관상용 나무들을 곳곳에 뒀다.

학교에서도 농업을 전공하다보니 정말로 농사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다. 일주일에 두, 세 시간 있는 실습시간에 대한 추억, 장학관이 오는 날에는 더욱더 열

심히 실습을 하라고 호통치던 선생님의 모습, 비싼 비료 대신 인분을 퍼 담아 배추 밭에 뿌렸던 기억까지. 여러 가지 기억이 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농사일 중간에 받아먹던 새참의 맛이다. 아침 일찍 나와서 농사일을 돕고 있으면 오전 10시~11시쯤 새참이 나온다. 그걸 먹고 다시 오후에 힘내서 일하다 보면 2시~3시 사이에 또 새참이 나온다. 그렇게 챙겨 먹고 일하다가 해질녘쯤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해 먹는 거다. 아무튼 농사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했다.

농림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농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종교인이 됐는지 궁금하다.

6.25가 터지면서 모든 상황이 변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당시 최고의 직장으로 떠오른 것이 미군 하우스보이다. 나는 하우스보이로 일하면서 미군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것이 미국 유학의 계기가 됐다. 평생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미국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그것이 나를 종교인의 길로 인도했다.

물론 종교인이 됐다고 해서 농업을 멀리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농업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신학을 배우고 와서 선교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농사를 통한 자비량 선교였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병아리 200마리를 사서 계란과 닭을 팔아 그 돈으로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아리 대부분을 도둑맞으면서 양계는 포기하게 됐고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포도 과수원이었지만 그 역시 토질이 맞지 않아 포도 농사에 실패했다.

세 번째로 시도해서 성공한 것이 바로 고무다. 3000평 밭에서 마흔 가마 정도를 재배했다. 덕분에 그걸로 자비량 선교를 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에 있을 적에도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다. 미국은 방학이 매우 긴데 약 3개월 동안의 방학 동안 양계장의 달걀을 한판에 채워 넣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다. 유학 중에도 농촌과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한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농촌의 가치와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농민이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농촌과 농업이 많이 축소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나는 직업 중에서도 가장 건전한 직업이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도리어 먹을 것을 생산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일조한다. 게다가 농사라는 것은 물과 흙, 햇빛과 같이 자연의 힘으로 일궈나가는 것이 아닌가.

옛그저께 잠시 강원도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도로 옆으로 뾰족이 솟아오른 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저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작은 부락에서도 도시처럼 정치권에 관심이 많을까.

도시의 사람들은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다. 정치에 따라 이권이 좌우되니 늘 관심을 집중한다. 남의 교육과 학교, 직장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육식과 질투로 인해 괴로워한다. 인구 절반이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이다.

옛날에는 농사가 참 바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첨단 농기계와 발전된 농업 기술 등으로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귀촌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보다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도시의 자리를 젊은 이들에게 내어주고 기성세대들이 귀농해서 여유롭게 살게 된다면 세대 간, 도농 간 갈등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앞으로의 농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농업·농촌이 발전하려면 실제로 농업·농촌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실무에 능한 사람이 수장이 돼야 어떤 때에 지원하고, 어디를 개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지시할 수 있지

않을까. 농업·농촌에 필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농정이다.

우리나라는 땅덩이는 좁지만 개간해서 쓸 수 있는 산들이 정말 많다. 여러 규제로 인해 묶여 있는 산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농가의 수익 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사과나무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북쪽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연구해서 어딘가 사과 재배 적지인지, 각 과실수의 재배 적지와 적합한 재배기술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귀농인들에게 제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협동조합 및 귀농인 테마 마을 조성 등으로 귀농인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첫째로 정부에서 농업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산들이 죄다 군사 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있어서 개인들이 산을 갖고 있어도 개발을 못한다. 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허락을 다 받아야 하니.

둘째로는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꾸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간혹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때 실행했던 정책들을 몽땅 없애는 경우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던 때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허허벌판에 국가기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이 많다.

이것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농식품부장관도 임기를 정해놓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하면서 기존 정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정권에 따라 휘청거리지 않는 견고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진심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고,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농정을 펼치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농촌과 절은 현대인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농촌이 가진 자연과 풍경, 분위기를 높이 평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



영배스님

영배스님은 농촌을 아끼고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농촌은 누군가의 추억을 품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가 태어나며, 누군가의 고향이다. 절이 아무 이유 없이 안정감을 주듯, 농촌도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영배스님은 농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약력

- 2015.5.30~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 2014.12~
불교신문사 사장
- 2006.5~2009.6
제35대 동국대학교 이사장
- 2002.10~2004.10
중앙총회 총무분과 위원장
- 1998.11~2000.10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 1998.3.21~1998.10.12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 1996.12.24~1997.11.20
(재단법인) 불교방송 상무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찰은 청정지역이다. 통도사만 해도 낙동강 물줄기의 끝에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바라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싶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때론 벌려고 가는 게 아니다. 청정자연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다.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농촌 역할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농촌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다. 즉,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들과 생명들을 해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말이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사람은 행복해진다. 아름다운 농촌을 보면서 노인은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종달새나 반딧불이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현실에서 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안타깝다.

2016년,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산사에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와 건강한 식재료로 선보이는 사찰음식도 한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농업·농촌 관광사업의 다각화 및 경쟁력 증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앞선 해외 선진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몇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행동하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말이다.

템플스테이의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형 템플스테이도 있지만, 자율적인 휴식형 템플스테이도 있다. 공양(식사)시간, 예불시간 등을 알려주고 자유롭게 명상을 하거나 산책하는 등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수 있다. 앞으로는 템플스테이도 고객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템플스테이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해야 한다.

사찰을 찾아온다는 것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기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와 산속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 깔끔하고 담백한 사찰음식 등이 그것이다. 해외의 템플스테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여행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불교계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에서도 막중한 소임을 맡아 온 걸로 알고 있다. 농업·농촌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화두가 있다면 무엇인가.

모두가 어려운 시대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무원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무직은 이미 포화상태다. 반대로 농촌의 농가들은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만큼 손이 부족하다. 도시생활에만 매달리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도 눈을 돌렸

으면 한다.

젊은 일손들을 끌어 모으려면 농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십시일반으로 영농조합과 같은 지원 단체를 만들고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통도사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스님이 논밭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절은 야콘에서 시작해 연, 매실, 쌀, 감자 등 각종 작물들을 수확해 가공 식품으로 상품화했다. 이렇게 만든 상품은 불교박람회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 등 여러 유통 판로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이 많다. 지역 특성 활용해 농촌을 활성화 시키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사실 우리 농업·농촌의 고질적 병폐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판로와 유통 시스템의 부재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자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좋은 특산물 혹은 특용작물을 생산해내더라도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내가 직접 길렀다'고 말하는 농민에게 농산물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면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가까워지면 이 농산물에 대한 가치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일례로 생산자가 나의 부모이고 나의 고향에서 키워진 농산물이라고 하면 다른 농산물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지 않겠는가.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좋은 특산물과 철따라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했다면 이제는 지역의 힘으로 공정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기술개발을 통한 식품 생산 등도 동반돼야 한다. 하동 보성에서는 녹차 판매가 이전 같지 않자, 녹차뿐만 아니라 다식 등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데 기술을 투자했다. 이렇듯 잘 안되는 작물이나 사장되는 것들은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노력도 필요하



다. 정부는 가공·상품화할 수 있는 기초기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농촌을 유지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작업으로 봐야한다. 농사가 바로 문화고 기술이다. 외국만 보더라도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것이 아니다. 농사기술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문화와 기술과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불교는 살생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멧돼지나 족제비처럼 작물을 해치는 야생동물을 막을 수가 없다. 울타리를 치거나 다른 시설들을 마련해도 산에서 내려와 논밭을 뒤집어 놓아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야생동물의 피해가 잦은 지역에 특별 시설물이나 보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체계적인 귀농 안내를 통해 군 퇴직 간부들이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농촌이 살아나고 군의 퇴직간부들은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



조정환

조정환 전 육군 참모총장은 흐릿해진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현명한 식량안보 정책은 곧 훌륭한 재난 대비책’이라고 언급하며 군을 비롯한 모두에게 각자 역할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법으로 군 퇴직간부들의 귀농 안내와 지원을 통해 양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속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
서울공대 미래안보/전략
기술과정자문위원장

주요약력

2012.10~2013.09
제 43대 육군참모총장

유년시절을 인제군에서 보냈다. 대부분의 가구가 논과 밭에서 생활을 일구던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인제군은 정말 시골이었다. 고구마, 옥수수과 감자를 심어 양식으로 삼던 때라 가끔 친구들과 몰래 서리해 먹었던 개구쟁이 시절이 생각나기도 한다. 주변 사람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고 우리 집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먹을 만큼은 지어먹었다. 그래도 그때를 추억하면 배고픈 기억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미국이 원조해준 옥수수 죽을 받아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70년대 이전의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배고픔 속에 살던 시절이었다.

반면에 지금의 국가적 식량 문제는 옛날과 완전하게 달라졌다. 이제는 배고픔의 시대가 아니고 쌀의 과잉생산이 화두다. 그만큼 농업 생산성은 옛날보다 크게 향상됐고, 쌀 대신 빵이나 국수를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 창고에 묵은 쌀이 넘쳐난다. 군도 그만큼 변했다. 예전에는 병사들이 너도나도 취사병이 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취사병이 3D 직종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그래서일까 과거 대비 ‘식량안보’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사실 식량은 전쟁 필수품이 아닌가. 식량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식량은 옛날부터 전쟁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 물자였다. 주변에 적이 사용할 만한 식량과 물자를 모두 태워버려 적군을 굶고 지치게 만드는 ‘청야 전술’이 성공해왔던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곡 물자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전쟁의 형태가 국지전(제한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전쟁 형태)으로 바뀌기도 했고, 단기전이며, 먹거리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재해 등에 대비하여 권장하는 식량의 적정비축량은 연간 소비량의 17%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여만 톤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소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비축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날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북한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선제타격에 대한 가능성도 더욱 현실화 되는 모양새이다.

즉, 이제는 안보적 관점에서 급변사태 등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최소한 북한의 식량문제가 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 래야만 우리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남한의 곡물생산량은 480만 톤이고 북한은 451만 톤이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2016년 영국의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3명은 영양실조 상태이다. 탈북인의 증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실적으로 양곡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은 곡물생산량



중 90%인 432만 톤이 짧다. 여기에 빵, 육류 등 다른 먹거리도 충분하다. 남한의 1인 1일 양곡소비량은 1970년도에는 520g이었으나 2015년에는 196g으로 감소해 왔다. 거기에 반해 북한 쌀 생산량은 200만 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옥수수가 대부분이며 남한처럼 다른 먹거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이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양곡을 제때에 지원해야 한다. 식량은 북한지역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안보적 관점까지 고려해서 양곡 소요를 판단해야 한다. 1970년도 남한의 쌀 소비량을 고려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고, 또 부족하다면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소요량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면 통화스와프처럼 식량도 주변국과 같이 식량스와프 체계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농촌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 중에서 구제

역이나 AI 등의 가속전염병은 최악으로 꼽힌다. 군에서도 이러한 재난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국방부는 포괄안보를 주요 정책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위협은 늘 군사적 위협이었다. 탈냉전 이후 이러한 군사적 위협은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협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대두된 개념이 포괄안보이다. 구소련이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위기와 같은 국가 내적인 원인 때문에 붕괴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즉, 안보를 군사적 차원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등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대규모 재난이나 테러, 감염병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 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응시스템은 다양하다. 생물이나 화학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전천후 기상과 지형에 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닥쳐도 포괄안보 개념 속에 군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의 위기 대응시스템은 AI, 구제역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서 농촌을 지키는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력과 활동성을 갖고 있다. 지리 정보와 감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밤에도 지역을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격 통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IT분야의 센서, 네트워크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이러한 군의 대응 시스템은 구제역이나 AI 등 여러 재난 및 재해에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AI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이되기 이전에 모든 관련 기관이 신속히 대처해야 된다. 당연히 군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정렬되어 있다 보니 재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AI를 포함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군 시설이 외곽에 있고 평소 대민 지원 등을 나가고 있는 만큼 군과 농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촌 또는 농업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 퇴직 군 간부들의 유입이 하나의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 간부들은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 퇴직한다. 평생 군인으로 외길을 살아온 군인들이기에 퇴직 이후 새로운 제2의 직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퇴직 군인들에게 영농은 매력적인 삶의 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산간벽지 근무 경험이

많아 농업과 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일정 금액의 연금 소득이 있어서 귀농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역하는 군 간부 중 부사관들은 근무했던 지역을 떠나기 보다는 대부분 그 곳에 정착해 자연스레 귀농 또는 귀촌하는 경향이 있다. 장교 중에서도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제군이 “제대 군인 전원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본다. 보다 더 체계적인 귀농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군 간부들의 영농인구 유입 접근성을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군의 활발한 대민지원도 청년들에게 농촌과 농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대부분의 군부대는 군(郡)단위의 농촌지역에 있기에 매년 새로 입대한 25만 명의 젊은이들은 입대하면서부터 농촌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다. 낫이 무엇인지, 쌀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랐던 도시 젊은이들이 대민지원을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벼를 세우며 농촌과 가까워진다. 이런 활동들은 젊은 군인들에게 영농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인과 농촌은 이렇게 불가분한 연고를 갖고 있기에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주는 좋은 상생의 농업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끝으로 농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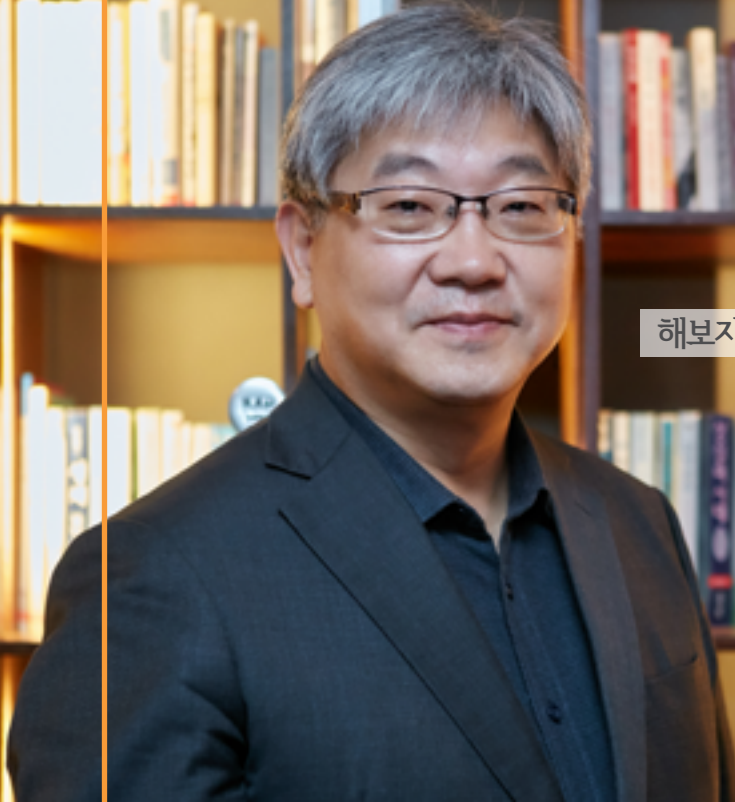
우리는 배고픔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식생활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삼겹살일 정도로 육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며, 과일은 계절이 따르지 않아 사시사철 즐긴다. 또한 도시의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산으로 바다로 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한편 우리 농업도 이제는 좀 더 미래를 지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2차, 3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농업에 대해 많은 보호를 해왔다. 하지만 작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농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인차량과 드론의 상용화, ICT의 융복합 등은 농산물의 생산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으로 맛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소비가 늘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

즉,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품질 고급화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이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여 왔듯이 우리 농산물도 고급화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이 자연환경도 유지, 보존하면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농민의 아들, 딸들이 아닌가?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가치의 선진화된 농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
 농민의 눈물을 닦아 줄 제대로 된 기획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1사1촌 운동’입니다.
 올해로 13년 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박학용

박학용 논설위원은 80년대 말부터 기자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농식품부를 출입, 농업·농촌의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다수의 농촌 살리기 운동을 기획하기도 했는데, ‘1사1촌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의 남다른 농촌사랑을 인터뷰에 담아냈다.

소속

문화일보 논설위원

주요약력

2008.04~2012.04 문화일보 편집국장
 2013.01~ 세계발전심의회위원회 위원
 201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 위원
 2009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

수상경력

2009 동탑산업훈장
 2009 한국참언론인대상(경제부문)
 2006 삼성언론상
 2005 한국신문상
 2005 대산농촌문화당 특별상

기자로 활동할 당시, 농업·농촌 관련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다수의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안다. 한국의 농업·농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개인 얘기라 쑥스럽지만 내가 젊은 시절 기자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약자(마이너리티)를 대변해보겠다는 마음에서였다. ‘힘있는’ 사람은 언론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를 낼 ‘통로’가 많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역olum을 호소할 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언론사에 들어간 후 사회부, 경제부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출입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그 출입처 대부분을 거쳤다. 어떤 출입처는 자원해서 맡기도 했다.

내가 출입했던 사회부의 경찰기자(서민 대상), 보건복지부(노인, 장애인 등), 노동부(노동자) 등이 대표적인 출입처다. 경제부에선 농업·농촌·농민 현안을 다루는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금융권(민생) 등이 그렇다.

농식품부는 통상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출입하는 경제부 기자가 함께 맡는 출입처다. 솔직히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덜 받는 출입처다. 하지만 나는 거시적·미시적 경제 정책 만큼이나 농업·농촌 문제에도 관심



서 황금 들판을 봤느냐”고 묻더니 곧장 이렇게 말했다. “농민의 땀과 눈물이 뻔 들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세상은 삭막해지고 범죄자는 득실댈 거다. 자연경관은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농업이 영원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 Role)’을 일깨우는 평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긴 울림으로 남아 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없는지.

내가 출입했던 2000년 우리나라에서 66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당연히 어느 출입기자도 구제역을 취재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가축 질병이 있는지도조차 몰랐던 기자들이 다수였다. 그러니 특종 경쟁이 치열했던 기사실 안에서 해프닝도 종종 일어났다. 어느 날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구제역 고기를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기사를 대서 특필했다. 구제역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고 있던 기자들과 이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했던 농식품부가 발각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지라 당시 김성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옛날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정설”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기사는 막무가내였다. 외려 “장관이 ‘구제역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후속 기사도 내보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구제역은 영어로 ‘Foot and Mouth’인데 그 기사는 ‘Hand, Foot and Mouth(수족구병)’를 구제역으로 오해하고 기사를 썼다고 한다. 요즘 빈발하는 구제역 기사를 보면 그때 해프닝이 떠올라 쓴 웃음을 짓곤 한다.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김성훈 장관이 들려준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사랑 언급도 기억에 남는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뼈빠지게 내조한 조강지처를 좀 살게 됐다고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 누가 농촌에 남아 식량 주권과 지역사회를 지키겠는가” 박 대통령이 당시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경제 관료들에게 자주 한 발언이라고 한다.

논설위원께서는 지난 2001년 ‘우리 쌀을 살리자-쌀 한 포대 더 사기 운동’과 현재도 진행 중인 ‘1사1촌 운동’을 직접 기획하고 취재했다. 농촌 살리기 운동을 연달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지 않은 날이 언제 있느냐는, 내가 농식품부를 출입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엔 유독 사건이 많았다. 소값 파동,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의 통폐합,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의 통폐합,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한·미 FTA 본협상 시작 등이 이때 일어난 일들이다. 쌀 소비급감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던 2001년 9월 당시 ‘우리 쌀을 살리자-쌀 한 포대 더 사기 운동’을 기획하게 됐다. 3개월여 간 펼쳐진 이 운동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불릴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켜 동참 기관만도 정부부처와 기업, 사회단체 등 379여개였고 이들이 구입한 쌀만도 28만여 포대(28kg들이 기준)에 달해, 당시 시세로 14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도농상생 운동인 ‘1사1촌 운동’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궁금하다.

1사1촌 운동은 경제부장, 편집국장 재임 시절 개인적으로 보람도 크고 열정도 많이 쏟은 기획이다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경제부장직을 맡은 직후인 2004년 1월은 한국과 칠레 간 FTA 협상이 한창이었다. 데스크도 말고 했으니 농민의 눈물을 닦아 줄 제대로 된 기획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 고민의 산물이 ‘1사1촌 운동’이다.

먼저 그 기획 아이디어 안을 들고 전 장관님인 김성훈 상시대 총장님과 허상만 전 장관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더니 “이전에도 그런 유사 운동이 있었지만 관(官)주도이거나 전시성이 짙어 실패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진정성을 갖고 전국 최대 농민조직인 농협중앙회와 함께 열심히 하면 잘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내친 김에 곧바로 당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님을 만났더니 “우리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

이 컸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본적지인 고향(충북 영동)마을에 자주 들르면서 보고 느꼈던 우리 농촌의 열악한 실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농업·농촌 관련 취재활동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선기자 시절 농식품부를 5년 가까이 출입했지만 사실 농촌 현장을 취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도 농촌 문제를 고민할 때 늘 떠오르는 농업인이 있다. 그는 WTO 농업협상이 한창이던 2000년 9월 취재차 파리를 방문했을 때 우연찮게 단독 인터뷰를 했던 뉘 귀오 프랑스농업경영자총연맹(FNSEA) 회장이다. 지금도 그의 수북한 턱수염이 눈에 선하다. 유럽농민의 대부였던 그는 내게 대뜸 “오면

“중요 현안들을 대충 얼버무리며 살아갈 수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난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깨 ‘농촌사랑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참이었다”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반기시더라. 그래서 탄생한 게 1사1촌 운동이다.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8,000여 쌍이 넘는 기업, 단체, 정부기관 등이 농촌마을과 결연해 돈독한 교류의 정을 꾸준히 나누고 있다니 뿌듯하다.

‘1사1촌 운동’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기 때부터 각 진행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한 것이다. 전국 최대의 농촌 네트워크 조직을 가진 농협중앙회는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궁합이 잘 맞는’ 기업과 농촌 마을을 잘 매치해 ‘윈-윈’의 토대를 만들었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한몫했다.

정부는 이 운동이 민간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방에서 조용히 정책적 지원을 했다. 문화일보는 기업과 농촌이 이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다양한 기획물을 발굴했다.

이 운동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개념과 연계했다든지, 기업 CEO와 마을 대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나의 농촌사랑기’ 등과 같은 고정 물을 장기간 연재했다든지, 운동 초기부터 수년간 3면과 2면에 관련기획을 종합지 사상 유례없이 고정 배치했다든지 등이 그런 예다. 종전의 농업 캠페인은 기업이 농촌에게 주기만 하는 일방향이었는데 이 운동은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이라는 점도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부농들’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

책이 제시한 부농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 책에는 전 장관인 정운천 국회의원의 ‘참다래 생산·유통’ 성공 분투기와 현재 매출 7조원에 9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김홍국 하림 회장의 ‘닭 가공식품 사업’ 성공 비결도 담겨 있다. 이렇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28명의 ‘스타농업인’의 산 역사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네 가지 성공 행동 강령을 꼽자면 ‘품질로 승부하라. 문화와 서비스를 접목하라. 새로운 제품 개발이 관건이다.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라’이다.

요즘 추진 중인 농정에 대해 조언 한마디 해달라.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금은 농업혁명이 절대 중요한 시대이다. 농업 혁신이 없으면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6차 산업화로 전환하려는 농식품부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농업을 생산(1차)·가공(2차)·서비스(3차)산업과 융합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일 게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 확충,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 등도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관철하려는 농정이 더러 가볍고 얇아 보일 때가 있어 안타깝다. 상생협력추진본부 하나 달랑 만들고 식품업체와 상생업무 협약(MOU)이나 맺은 뒤 ‘할 일 다 했다’는 식이어서 곤란하다.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주력하기보다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농정’에

매달린다는 일간의 지적도 농식품부 관료들이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제언을 한다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회장은 2년여 전 서울대 강연에서 ‘젊은이들이여, 농대(農大)로 가라.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농업은 가장 유망한 산업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업의 미래는 밝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농업·농촌 관여자들이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해야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언젠가 칼럼에서 한국 농업에도 ‘5적(敵)’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심에 눈이 멀어 ‘농업·농민 사수’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정치인, 문제가 터지면 농민 눈치만 보며 어영부영 땀질 처방만 하는 공무원, 농업을 경제 가치로만 환산하는 외눈박이 경제학자, 손에 흙 한번 묻힌 적 없고 잡풀 하나 뽑아본 적 없는 얼치기 농경제학자, 운동권식 투쟁을 일삼거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농민단체이다.

물론 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치인, 공무원, 농민 운동가, 학자들도 많다.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분야에 서든 각 현안들을 우리끼리 대충 얼버무리며 살아갈 수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라도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농업·농촌 난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함께 그 해법도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갈 길이 뻗히 보이는데 자꾸 우회하면 당장은 편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농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

이제 농촌은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촌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것입니다.

”



박성택

농촌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ICT가 합쳐져 스마트 팜을 이루고, 아이들 대부분이 도시에 태어나면서 ‘농촌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기회삼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중소기업과 농촌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하 대표이사 사장

주요약력

2015.07~ 중소기업연구원 이사장
2015.05~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2015.02~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13.02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유년시절을 농촌에서 보냈다고 들었다. 그때 그 시절의 농촌 풍경이 궁금하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뛰어놀던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봄에는 달래, 냉이, 취나물 등 싱싱한 나물과 풀을 뜯어먹었고 4월에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라 새집에서 새알을 몰래 꺼내 먹었던 추억이 있다.

여름에는 안성천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놀았다. 가을은 단풍이 물들고 곡식과 과일이 익는 농촌 특유의 풍요로움이 좋았고, 겨울에는 들판과 산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눈싸움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은 마음이 아련해지거나 복잡할 때 고향이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위안을 받고 있다. 명절 때나 동네 큰 잔치가 있으면 꼭 찾아가는다.

오래된 친구는 내가 고향집에 들를 때마다 꼭 된장, 고추장을 챙겨준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웃 간에 정이 넘치고 추억이 깃든 곳에 기에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곳이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 및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농업과 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제언한다면.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간 혁신과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1차 산업(농림수산업), 2차 산업(제조·가공업), 3차 산업(서비스업)을 복합한(1×2×3=6) 6차산업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 농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도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 선호하는 채소 등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농식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대한민국 할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4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해외 바이어 100명을 초청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중동·동남아 시장 개척단 파견 등 판로를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금 시기는 농업과 중소기업이 유통, 수출, 종자, ICT, 6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식품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 '스마트 팜 확산', '6차산업화'는 중소기업과 농촌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장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당 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

탁금지법은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날리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0월 102에서, 2017년 2월에는 94.4로 하락했다. 피해가 가장 큰 화훼와 외식업체들은 평균 20% 넘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69.7%가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 중 70.8%가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응답한 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명분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은 3만·5만·10만 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화훼 등 피해가 큰 농수산물물은 금액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으로 있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에서는 충북 보은의 장채리 마을과 1:1 결연마을을 맺고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1사 1촌 결연 활동은 도농 상생의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12년 7월 장채리 마을과 결연 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지원에 나섰다.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마을 방문 농촌 봉사활동은 농번기 일손 돕기를 비롯해 오래된 주택의 전기수리 및 어르신들의 이·미용, 한방진료 등을 제공해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시 장채리 마을의 특산물 판매 코너를 마련해 대추, 무말랭이 등 마을의 특산품을 알리는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판로 개척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중앙회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1사 1촌 결연 활동(충북, 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지원활동과 더불어

직거래 장터 행사와 홈페이지, 사내 그룹웨어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활용해 농촌의 판로개척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한다.

국내 식품 관련 정책은 농식품부, 해수부(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통한 식품산업 진흥, 미래부(식품 분야 연구개발), 식약처(식품 안전) 등으로 분산돼 있다. 관계 부처의 업무 분산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원'을 설치해 농식품 산업 진흥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농촌에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밀짚모자'라는 공동브랜드를 통해 수확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농촌이메니티 체험관광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을 재해석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이런 모든 노력과 관심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농촌과 농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농민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

특히 연인과 부부, 가족들이 시골장터를 찾아 농촌 특유의 문화와 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동안 가려졌던
농업의 진가가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



송종국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농업의 현 상황을 변곡점으로 표현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의 농업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당시의 그들과 달리 글로벌 농업시장개방이라는 위협이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주요약력

- 2014.09~ 제13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 2013.0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 2013.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 2013.04~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농촌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는.

농업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식량을 생산하는 전통적 역할에서 생명산업, 에너지산업, 소재산업, 의료산업으로까지 역할이 커지고 있다. 농업의 후방산업인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농자재 등도 성장하고 있고, 식품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농업 전방산업도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 반면에 수입 농산물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생산방식으로는 부가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ICT를 접목하고, 후방 산업인 종자나 농기계, 농자재 산업 등의 연계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 이후의 유통과 소비를 통합하여 국가 푸드시스템을 진일보시키는 것도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시기적으로도 변화하는 중이다. 어느 나라 농업이든 식량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생산주의 농업으로 성장한다. 그러다 점차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생산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농촌이

가진 기능, 그러니까 환경부터 경관 유지, 문화 보전 등의 차원을 말한다. 유럽의 농업은 이미 생산에서 다원주의로 넘어갔다. 정리하면 모든 농업은 생산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농업생산 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산업에서 지역정책으로 바뀌는데 우리 농업은 그 변곡점에 있다.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로서 오늘날 농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면.

농업 관련 교육기관을 다녀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실 내에서의 기술 개발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문제는 농업이 기술로만 발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환경적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논지 농사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설 위주의 농업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기술력과 시장도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좋은 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농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강소 농업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농수산대학 등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영세 농가들이 강소 농가로 성장한다면 전체 농업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과 ICT의 접목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또한 ICT 투자비용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ICT를 접목한다는 것은 곧 시설농업의 지능화, 자동화를 뜻한다. 기계와 시설이 지능화되면 모든 부분에서 최적화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람이 일일이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을 ICT로 해결할 수 있다. 땅에 알맞은 종자를 고르거나 짝을 띄울 때 적합한 일조량 등을 ICT로 최적화할 수 있으니 생산물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수확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마련으로 현장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 상품적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 일단 전국에 LTE 기간망이 설치돼 있으니 그것부터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가 ICT를 이용하는데 소극적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농촌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시다. 신기술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들의 자식 세대에서는 기술 접목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농민의 80%는 자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규모가 있는 선도농들은 IC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기 투자가 없는 80%의 농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기술농으로 흡수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농업과 농식품 분야 창업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각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혁명, 즉 인공지능이 핵심이다. 사람이 기계를 통해 단순노동에서 벗어난 것처럼 앞으로는 사람의 사고와 판단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산업을 재편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생산과 유통, 소비에 걸친 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 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 이곳은 도축된 지 5일 미만의 돼지고기를 판매하는데 '즉시 생산'과 '신선 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 업체는 즉시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재고 없는 공장을 구축하고 주

문 즉시 생산하며 초 신선 제품을 상시에 공급 가능하게끔 유통망을 확보했다. 또한 신선 페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선주문, 후결제)을 개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신선 페이는 서버에 무게를 입력하면 고기 무게만큼의 가격만 계산된다.

앞으로 오게 될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 유통, 소비의 통합 시대다. 해당 업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된 농업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에서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통합되는 혁신을 겪을 것이다.

결론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를 전망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기술 축적은 상당한 수준인 데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바로 옆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농업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농업은 여러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현재의 농업은 노동집약적이다. 또한 생산과 유통, 소비가 단절돼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생기고 공급자 중심으로만 기술이 혁신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은 노동이 아닌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이 양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요자 주도의 산업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인재들이 농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농업이 발전하고 혁신하려면 농업·농촌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
재해를 입어도 다시 시작하고,
모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은 오롯이 농민의 편에서
마련돼야 합니다.



성대규

농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어디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 농사다.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피해를 복구하고 함께 해결해줄 보험이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농업보험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그 누구보다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보험개발원 원장

주요약력

現 제 11대 보험개발원 원장
前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前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경북 영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다. 그 시절을 회고했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전인 1985년 초까지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서 살았다. 그 시절에는 좋은 농산물은 시장에 팔고 남은 농산물을 식구들이 먹는 농가들이 많았다. 밤에는 쌀보다는 보리가 많이 들어 있었고, 자동차보다는 경운기가 길을 누비고 다니던 시절이다.

지금은 농촌도 도시 못지않다.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가 많아 이차선 도로에 주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다. 다만, 어린이와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농가소득이 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농사를 생각하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 중학생 때 어머니와 금호강 고수부지를 일귀 배추와 무를 심은 적이 있다. 그런데 늦은 장마 때문에 수확 직전의 무와 배추가 모두 썩어 내려갔다. 농사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

농업만큼 재해에 민감한 것도 없다. 그래서 관련 보험의 마련도 중요하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금융정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생각하는가.

농촌을 위한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보험과 농업자금지원이라 생각된다. 농업보험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격 하락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보험', 각종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장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 때문에 한 순간에 가꾸 온 작물을 모두 잃게 될 때의 허탈함을 달래 주는 보험인데, 나 또한 수해로 농작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농업·농촌은 환경·사회적 특성상 재난·재해에 취약하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체계와 관해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큰 타격을 입는다. 재난·재해 대응체계는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복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농업정책보험은 사후복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의 기본은 '사전예방 대응체계의 조성'과 '정비'다. 사후복구에 대한 정책방안이 마련돼 있더라도 근원적인 재난·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제도가 위험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농가에서 위험경감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정책보험에서 신규 방제기술·시설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개발·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앞으로 농업정책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책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 및 사업경비 지원, 거대 손해에 대해 국가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이 적용되는 등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보험이다.

농업정책보험은 농가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개정된 농업법(Farm Bill)에 따라 전체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농작물보험 관련 예산이 증가된 것도 농업정책보험이 그만큼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보험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그동안은 대상작물 확대 등 보험 주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면 향후에는 품목별, 지역별, 농가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해 개별농가에 보다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험개발원이 농업·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적 가치를, 농촌은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농업·농촌 발전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 모두에게 활기를 전해주는 원동력이다.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근원적 가치를 보전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농업정책의 특성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항상 누군가의 불만을 깊어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보험개발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농업정책보험의 제도 및 요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와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만큼 앞으로 농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보험의 상품 개선과 보험요율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당국이 우리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창길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촌에서 자라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후 외국에서 농업경제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해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명실상부 ‘농업전문가’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주요약력

- 2016.06~ 제14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2017~ 한국농업경제학회 부회장
- 2016~ Global Club(세계농업경제연구기관장 협의회) 운영위원
- 201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기후변화식량안보 전문가
- 2013~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장

최근 게재된 신문 칼럼에서 ‘농업은 농산물 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가치란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설명해 달라.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로 농촌지역과 농업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됐다. 특히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감소는 도·농 간 그리고 농가 간의 이층 격차를 확대시켜 농촌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을 비롯해 전통보전,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교육, 치유 및 체험 등이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이다. 산업화와 개방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긍정적 기능들을 활성화 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가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2015년 기준 2,600개 표본 농가에 대해 소득, 부채, 자산 등

을 자세히 조사한 자료다.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으로 이뤄진 농가소득인데, 2014년 대비 6.5% 증가해 약 3,7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약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농간 소득격차의 원인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쌀 가격 하락으로 쌀 농가의 소득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구성요소, 연령별·품목별 소득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2013년 명목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2014년 1.0%, 2015년 6.5%의 연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쌀 농가의 소득하락에 대해 정부 직불정책이 발동해 소득 보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지지하고 있고 겸업 등 농외소득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단위 6차산업화, 로컬푸드 등의 정부 정책은 소규모 고령농가에게 소득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농격차 역시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30대 축산농가의 소득은 오히려 도시근로자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자영업자 기준 40~50대 모두 농가 소득과 도시가구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청장년층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토지사용, 농촌정주여건 등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고 은퇴를 앞둔 고령농의 농업자산에 대한 유통화가 이뤄진다면 청장년층이 유입돼 농가소득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6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더불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2016년 국민의식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데 동의했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9%)이 동의했다.

다만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정체상태에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농업·농촌의 높은 가치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민 중 30% 내외의 정도가 농업·농촌 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파악돼 농업·농촌의 가치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홍보해야 할까? 도시민들이 농촌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보다 좋은 홍보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온라인 환경을 생각하면 농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도시민의 홍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파악된다. 이를 고려해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쌀 수급불안, 가축질병 발생 등 최근 농업 분야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악재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기 위해 현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쌀변동직불금 ‘퍼주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쌀 수급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축산업, 나아가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간 우리 농업은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됐고, 80년대 말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피해보는 농업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환경과 생산안전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한 결과, 지금의 쌀 공급 과잉과 가축질병이 나타났다.

현재는 국민의 생활 여건과 수준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농산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문화 등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를 원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예전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농업·농촌의 가치를 유지하고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행복을 제공하고 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민지지 차원의 정당한 대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그동안의 대표적인 실적들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들이 궁금하다.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단’을 지난 3월 구성했다. 4월에는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발족했다. 연구단과 포럼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과 농촌에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한편, 생산·유통·소비·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리 농업·농촌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원은 새 정부가 농정 틀을 짜는데 필요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올해에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최근 농정 이슈인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화, 다원적기능, 농식품안전성, 직불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생존은 결국 먹고사는 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 Good Neighbors



이 일 하

그의 바람은 우리 인류 모두가 생존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이 국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촌 전문가들이 국제구호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이 굿 거버넌스로 이어져 마침내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소속
 굿네이버스 이사장

주요약력

2016.07~ 굿네이버스 이사장
 2013.07~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촉위원
 2013.0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09.10~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굿네이버스는 지금까지 여러 구호활동을 펼쳤다. 특히 식량부족 국가에는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자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동안의 성과가 궁금하다. 우리 단체는 큰 흐름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펀드, 또 다른 하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한 네트워크다. 실제로 우리는 국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여러 대표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북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굿네이버스는 북한에 가장 지원을 많이 한 단체 중 하나다. 북한의 핵심사업이었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 500마리를 지원하고, 양계 사업의 기반을 닦는 등 축산업 부분에서 확실한 도움을 줬다. 이런 경험들은 이후 국제 농업기술 보급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 국제사업에서는 품질이나 종자에 대한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것 외에도 유통시스템을 마련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썼다. 남수단에서는 옥수수 조합을 만들어 재배한 옥수수를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르완다에서는 커피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나갔다. 실제로 르완다 커피의 경우 공

정무역 개념으로 한국에 수입해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마련했다.

기부 등 일시적인 지원 외에 장기적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 참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반대로 정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다. 명절마다 벌어지는 동네축제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들이 많았다. 농촌을 활성화시키려면 과거 농촌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를 살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눠먹고 같이 즐기고, 함께 하는 문화가 재건되어야 한다.

실제로 문화 사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문화 이전에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다. 해외원조 사업은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의미다.

우선 한 사람과 한 아동의 결연을 위해 아이들을 모으고 이 아이들에게 기부하면 교육과 먹거리가 제공된다고 캠페인을 펼친다. 후원자가 모이고 기부금이 발생하면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마을 재건에 나선다. 굿네이버스가 25년간 집중했던 구호 사업의 내용이다. 자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에 나선 것은 최근 5~6년 사이의 일이다.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함께 ‘아침밥 기부 캠페인’을 추진했다. ‘아침밥’이 가진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아침밥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다. 부모

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아침밥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침밥을 포함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생존이다. 가능하면 모두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먹는다는 것이 곧 생존임을 직시하면 이를 위한 정책이나 전문가들의 육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라는 단체가 있는데 다 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농촌 전문가들이 유엔(UN)에 진출해 세계의 식량 문제를 개선했다. 굿네이버스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의 농촌 개발사업만 7년 동안 했다. 한국의 경험, 한국인의 능력으로 전세계 35개 국가의 400만 명에게 도움을 줬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단체들의 협력으로 일궈낸 셈이다.

적극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농식품부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농업전문 NGO 포럼을 만들고 굿 거버넌스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농촌개발협력위원회 같은 단체가 생긴다면 농촌개발사업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또 해외 농촌 지역으로 구호사업을 갈 때 이러한 네트워크가 함께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굿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덧붙이자면, 자선활동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대로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굿 거버넌스가 탄탄해야 한다.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이권에 내둘리지도 않도록 민간 대표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굿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민간 대표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

농촌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진정성 있는 고향 홍보가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짜 영웅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은주

첫마디부터 “저는 농업을 잘 모릅니다.”로 시작한 임은주 안양 FC 단장은 그 첫마디가 무색하게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소비자로서 농산물에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 시골 출신의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고향을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소속
안양FC 단장
더 임 글로벌 대표이사

주요약력
2017.02~
안양FC 단장
2016.11~
더 임 글로벌 대표이사
2007.02~
한국 여성 최초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강사

최근 농민신문에 ‘농민이 국가대표다’라는 칼럼을 통해 농민과 농업, 농촌지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밝혔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나는 서울 태생이지만 함께 운동을 하던 동료들 중에서는 농촌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농촌의 생활을 느껴왔는데, 최근 여러 모임을 통해 농촌의 현실들을 알게 됐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제값에 팔리지 않는 등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들 했다.

나는 일본에서 포닥(포스트 닥터)을 했는데 그곳의 장인정신이 좋았다. 일본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일본은 장인정신문화가 발달해 유행에 상관 없이 한 가지 일을 지속하거나, 젊은 세대들이 부모대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 물론 농촌의 많은 어른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내 자식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식들을 도시로 내보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나. 이제는 귀농·귀촌한다고 해서 힘들게 농사짓지 않는다. I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판매 활로를 만

들고 훨씬 더 세련되게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대를 이어 농사짓는 젊은이들이 생길 수 있다. 전통이 생기면 사무직과 도시로만 몰리던 청년들의 실업률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최소한의 정책이나 살아나갈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농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지금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다. 농산물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농정은 몇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말 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지식에 기대어 그들만의 정책을 하려 한다. 고생하고 부딪히는 것은 농민들이다. 농식품부는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있는 부처 아닌가. 그 누구보다 농민들의 편을 들고 그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현명한 농정이 필요하다. 축구를 할 때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 최고의 수비수에게 공격을 하라고 하면 절대 골 못 넣는다. 농식품부도 자기의 역할을 잘 파악해야 한다. 남들에게 답을 묻지 말고, 농부들에게 직접 답을 물어야 한다. 일례로, 농산물 중에서도 수익이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돈은 안 되지만 필수로 생산해야 할 곡물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이제 완전히 상업화된 중국에서도 가장 보호하는 것은 도시민이 아니라 농민이다. 우리나라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다. 농민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부 외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국민들은 그 농산물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농촌과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아이디어 혹은 참고할 만

한 사례가 있다면.

혹시 집에서 먹는 쌀이 어디 브랜드인지 알고 있나? 사실 대부분이 잘 모른다. 요즘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한 세상이다. 고급화 된 쌀, 가성비가 높은 쌀처럼 쌀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농산물 마케팅도 정말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뭐든지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나부터도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알게 된 농민에게 직접 사 먹는다. 그분은 작물을 심고, 재배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SNS에 공유한다.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받아보니 품질도 좋아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있다. 이런 식의 SNS, 구두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도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해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의식이 장기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이다. 농산물도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질 높은 상품들이 생산될 것이다. 정부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민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얼마 전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도농 공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들었다. 콘서트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실 이번 콘서트는 이미 다 마련된 틀에 참여만 한 정도다. 이런 콘서트가 농촌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이런 콘서트를 농촌 출신의 스포츠 스타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 모교에 가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롤모델이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농촌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농촌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 뜻을 갖고 함께한 농촌 출신 스포츠 스타들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명 스포츠 스타가 여러 행사에서 자신의 고향을 언급한다던가, 지역 행사에 참여해 출신 지역의 특산물과 명소들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 이슈를 만들어야지 미디어도 주목하고, 실제 농산물 거래도 더 활발해진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스포츠 스타를 활용해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현장에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생하는 이장님들을 불러와 관광을 시키는 정도로는 더 이상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답달인 모범생을 넘어
고정관념을 깨는 모험생을 양성하는 것,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대의 슬로건입니다.



이남호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은 대학이 키워야 할 인재는 정답달인 모범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탐구할 줄 아는 ‘모험생’이라고 강조했다. 농생명 분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는 그의 노력은 멀지 않은 미래에 성과를 볼 것이다. 그의 말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이들은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요약력

現 전북대학교 총장

2017.01~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2016.03~

대교협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2014.07~

한국식품연구원 지방이전 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북도는 지역특성상 많은 농생명 관련 기관과 연구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대학교 역시 농생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이 활발하다고 들었다.

전북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아 농생명 분야와 탄소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생명연 바이오소 재연구소, 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농생명 관련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우리 전북대 역시 생명과학과 의·치·수의학 분야는 물론 고분자 나노·화학 분야 등 학제 간 융합·협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통전염병연구소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을 보유한 LED-농생명융합기술 연구센터를 비롯해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8개 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농생명 분야 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대학 농생명 분야가 세계적 수준의 학문 분야로 도약하고, 전라북도가 세계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 적극 투자한 만큼 인재 육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세대 인재육성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여파로 사립대들은 기초 및 순수, 보호 학문을 포기하는 대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나 응용 학문 분야를 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에 거점 국립대들은 국립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 및 순수학문 분야, 사회적 수요가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보호학문 분야,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첨단 이공계 분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 등을 골고루 육성하고 있다.

농산업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생대를 보유한 사립대를 찾기 쉽지 않다. 대신 거점 국립대학엔 거의 모든 대학이 농생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 말인즉, 거점 국립대학들이 융·복합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간과 기계가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장기적 비전 마련과 획기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대학교는 우간다의 마케레레 대학과 협약을 맺고 마케레레대 축산·수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농업 개발협력은 주로 관개와 식수 개발, 전기 등 기초 인프라 제공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원조에서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원조로 전환해야 하고, 그 역할을 대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과 우리 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도 그런 취지였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농축산 분야 산업과 농생명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우리 대학 역시 농축산 분야 연구와 인력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마케레레 대학 축산·수의대 학생

들은 우리 대학이 우간다 현지에서 운영하는 농업지도자연수원에서 1년간 리더십 교육 등을 받은 후 전북대학교에서 2년간 이론 수업은 물론 농축산업 현장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과의 협력 사업은 물자 지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환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캠퍼스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대학 캠퍼스 텃밭은 여느 텃밭과는 다른 점이 있다. 지역민의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을 취하지만, 대학 구성원의 경우 직업별, 전공별로 안내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 텃밭에는 여러 전공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비롯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행정직원과 다양한 지역민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언제라도 텃밭에 가면 교수와 학생, 직원, 지역민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보직교수와 텃밭 분양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대학과 지역민이 통(通)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다. 전북대 캠퍼스 텃밭이 소통의 공간이자 융합의 공간인 셈이다. 이 공간에서 이공계 학생은 인문계 교수와 소통하며 인문학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학이 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농생명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전북대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보조자를 넘어 경쟁하게 되는 사회다. 이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답만 맞히고 시키는 일만 잘 하는 모범생보다 현재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하며 스스로의 일을 찾는 모험 인재가 필요하다. 우리 대학도 달을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문샷 싱킹’처럼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는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모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자전거 한 대로 미국 대륙 6천 킬로미터를 횡단한 학생, ‘투르 드 프랑스’ 등 세계 3대 프로 사이클 대회 코스를 모두 완주한 학생,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으로 저개발 국가를 돌아보고 직접 책을 쓴 학생, 실코드를 걸으며 동서양 문화융합의 현장을 체험한 학생, 중국의 운동주 시인 역사 왜곡 사실을 사진으로 담아낸 학생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남다른 생각과 실천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조리법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해 자연스럽게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최불암

수십 년을 ‘국민 아버지’로 살아온 배우가 있다. 그는 여전히 푸근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고향을, 어떤 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밥상을 소개한다.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과 이토록 잘 어울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 배우 최불암과 우리 농촌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소속
배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 주요약력
- 2013.08~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홍보대사
 - 2013.04~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홍보자문위원
 - 2012.05~ 경기도 살리고 농정 홍보대사
 - 2012.05~ 귀농귀촌 100인 자문단

그동안 ‘전원일기’나 ‘한국인의 밥상’처럼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농촌을 다녔다. 농촌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한국인의 밥상’을 촬영하면서 전국 팔도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매번 농촌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젊은 사람이 없다. 동네를 다니다가 한 예순 살이나, 일흔 정도 된 사람을 만나면 너무도 반갑다. 거의 80~90% 이상이 여든이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길에 다니는 노인들을 붙잡고 나이가 어찌 되시냐 물었을 때, ‘예순다섯 살’이라고 대답하면 ‘어유 젊다~’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놀러 왔나 싶을 정도다. 그만큼 농촌이 고령화됐다. 고령화가 됐다는 것은 노동력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허리가 90도로 굽은 노인들이 밭 갈고, 논매는 것을 보면 참 고맙고 신통하다. 우리 노인네들이 힘들게 심고, 키워서 재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사실 수입을 하는 게 훨씬 쉽겠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돈이 되는 어촌에서는 간혹 젊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농촌에서도 수익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농촌에서도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 혹시 특별한 농산물이나 마케팅으로 지역을 활성화한 경우를 알고 있는지.

전남 구례에 가면 쭈부쟁이로 만든 빵과 과자를 판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 방송 촬영차, 구례에 갔더니 이상하게도 50세, 60세 정도의 젊은 여성들이 많기에 대체 이곳에서 뭐하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신 분들이더라.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은 쌀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분들도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라 쭈부쟁이라는 쭈 비슷한 나물을 재배해 이걸로 과자나 케이크(머핀)를 만들어 팔고 있더라. 쭈부쟁이를 말려서 분말로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국수를 뽑거나 빵, 쿠키를 굽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해 판매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또 너무 맛있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입소문이 나고 있다. 매년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더라.

앞으로 많은 농촌들이 이런 수익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독특한 작물을 재배하든지, 기존의 농산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홍보해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도 돈 벌려고 농촌을 찾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촌 및 농산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 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요즘에는 쌀부터 과일, 고기까지 모든 게 수입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훨씬 차별화된 경쟁력이 우리 농

산물에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가 '쌀을 소비합시다.'라고 했을 때 전국민이 쌀 소비에 나서서 시대가 아니다. 정부에서 '뭘 좀 어떻게 합시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정부 정책에 마냥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농촌이 활성화하려면 각자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면 구례의 쭈부쟁이처럼 자기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나 그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쌀의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가 문제 되고 있다. 쌀 소비를 늘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지만 국민들의 식성이 서구화되고 음식 시장이 개방되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마르고 날렵한 몸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탄수화물, 즉 쌀을 멀리하는 사람도 증가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쭈부쟁이 사례처럼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나 요리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해야 한다. 학계와 정부에서도 쌀 소비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다. 동아시아 최초의 조리서인데 스스로 개발한 음식이나 조리법,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처럼 정부나 학계가 나서서 쌀에 관한 음식디미방 책을 만들어야 한다. 쌀의 알려지지 않은 효능과 새로운 조리법 등을 연구해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다시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한다. 땅만 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엇을 생산해야 우리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인가를 말이다. 그러려면 수많은 연구와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구례의 쭈부쟁이 사업도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다. 쉽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젊은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찾아오는 농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한다.



“
모든 산업의 근본이자 기반인 농업,
우리 아이들에게 농업이 가진
귀중한 가치를 알리고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합니다.
”



백종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한우 홍보대사가 됐다. 그는 늘 그렇듯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리법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한우 부위를 소개해 한우를 제대로 알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법을 전수하며 국민들의 집밥을 책임졌던 백종원을 만나봤다.

소속

-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 더본재팬 대표이사
- 더본차이나 대표이사
- 더본아메리카 대표이사
-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

주요약력

- 2017.01~ 한우 홍보대사
- 2016.04~ 저소득층 아동복지
비영리 단체 ‘위스타트’
홍보대사
- 2016.01~ 예산군 홍보대사
- 1994.01~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우선 한우 홍보대사를 맡게 된 계기와 소감이 궁금하다.

한우(韓牛)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게 부담도 되지만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한우 홍보대사가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우를 알리는 것 외에도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심과 안심에 한해서만 구이용으로 먹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아쉽다. 한우 홍보대사로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알릴 생각이다.

한우 홍보대사로서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되는 우리 한우만의 장점이 있다면.

동식물은 자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이 키우는 사람의 정성이다. 우리 농가에서 정성으로 키우는 소는 해외에서 수천만 마리씩 키우는 소하고는 맛과 영양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우는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이지 않나.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할 때 더 많이 찾게 된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줄 초기 이유식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때 한우를 참 많이 활용했다. 아이 이유식 재료뿐만 아니라 한우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즐겨 먹는 식재료다. 일단 한우 자체로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의 재료로도 다방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뼈로는 사골을 우려낼 수 있고 지방과 근육은 각 부위별로 맛과 질감이 달라 용도별, 취향별로 선택해 즐길 수 있다. 한우가 오랫동안 고급 식재료로 인정 받아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한우 소비를 위해 최근 외식업계 트렌드와 연관시킨다면.

1인 가구의 증대로 혼자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식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혼밥’, ‘혼술’은 외식산업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다. 게다가 점차 혼자 밥 먹는 문화가 익숙해지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혼밥을 콘셉트로 한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다. 일찍이 혼자 밥 먹는 문화가 발달했던 일본에서는 일반 가정식부터 구워먹는 고기까지 다양한 메뉴를 1인분으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혼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혼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우 식당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4명 이상의 대규모 모임 층의 고객을 상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3명 이내의 소규모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혼밥,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다 퀄리티 있는 분위기와 맛을 찾아가면서 혼자 또는 소규모로 한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우를 소량으로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구제역, 가격 등으로 위축된 한우 소비를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사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이라 구제역 때문에 한우 소비가 위축된다는 뉴스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소비 위축을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본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한우 앞다리살, 보섭살 같은 저렴한 부위를 활용한 레시피가 많이 알려지면 오히려 가격 부담으로 한우를 자주 먹지 못했던 분들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우 대중화에 나서는 것이다.

홍보대사로 활동한 예산군의 ‘예가 정성’이 ‘20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각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이 전국에 알려지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역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좋은 건 소비자가 먼저 찾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신선한 상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예가정성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하면서도 브랜드를 만들고 알리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예가정성’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알렸다. 현재는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발을 넓혔다.

그간 위스타트 홍보대사 활동이나 예산군과 체결한 MOU(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명문 학교 및 특성화 학교 육성 협력)등을 미뤘을 때, 아동 복지와 미래 인재교육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농업·농촌 분야의 미래인재·청년농 양성에 대해 제언한다면.

IT 산업만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근본이자 기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IT 산업 육성 못지않게 농업·농촌 분야의 미래인재, 청년농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요즘 초등학교에 IT 관련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 농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치고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를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 식재료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 및 식생활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있나.

한우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지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구워 먹는 건데 보통 구이용하면 등심을 떠올린다. 그런데 한우 앞다리살, 보섭살 같이 가격은 저렴하면서 육향이 나 식감은 좋은 부위가 많다. 이런 다양한 부위에 따른 조리법 개발에 일조해서 많은 분이 다양하게 우리 한우를 즐기는 데 앞장서고 싶다.



“
 농업과 외식업의
 콜라보레이션,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속에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



오세득

맛있고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좋은 식재료를 찾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각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오세득 셰프 역시 이러한 점을 착안해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하는 관계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다.

소속

친밀 오너 셰프, 요리연구가
 고려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부 특강교수

주요약력

2015.11~ 닭고기 홍보대사

직접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돼지와 닭을 사육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007년부터 국내 파인다이닝 셰프로는 거의 최초로 국내 산지에서 난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을 프렌치 다이닝에 접목시키는 이른바 ‘팜 투 테이블’ 방식을 오늘날 많은 셰프들에게 보편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는데.

2011년부터 제주도에서 영농조합원으로서 녹차를 재배하고,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한 바 있다. 항생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방목해 기른 돼지와 닭들을 직접 레스토랑에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생산한 고기는 맛도 좋고, 인간에게 건강적으로 훨씬 더 도움을 준다. 또 프렌치 셰프였지만 수입 식재료에서 탈피해 국내산 식재료를 썼던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모두 수입 식재료를 쓰는 데, 나까지 써야 하나란 생각이 든 것이다. 서양에서도 자신을 나라에서 나는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재료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국내 식재료를 조금씩 넣어 만들기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 재료가 80~90% 비중까지 차지하는 때인 만큼 우리 땅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들로 최상의 요리를 선보이는 파인다이닝이 많

아저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그만큼 농촌과 친숙하고, 산지 곳곳은 물론 다양한 재래시장도 많이 다녔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면.

농가에선 매일 밤잠 설쳐가며 열과 성의를 다하는데, 마케팅이나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 어렵게 키운 식재료가 대접을 못받는 게 제일 아쉬웠다. 또 레스토랑은 식자재를 쓸 때 대중적인 재료 외에 희소성 있는 재료도 필요한데, 이때는 대량생산이 아닌 소규모 고품질의 맞춤형 생산방식으로 키운 식재료가 필요하다. 지방을 다니면서 이른바 '강소농'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의 식재료가 갖는 장점이 많은데, 시장에선 대량으로 생산되는 작물 때문에 묻히고, 잊혀지는 작물과 식품들이 많은 게 아쉬웠다. 제주도의 천다리 식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 지역에선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슬로푸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존하고 또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닭고기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나.

2년 동안 해왔고, 닭고기를 많이 쓰면서 좋은 점을 알리는 중이다. 닭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높은 육류인데, 단백질함량이 높고 감칠맛이 탁월하며, 가격도 저렴한 매우 효율적인 육류다. 종교나 지역을 막론해 어느 나라에서나 먹는 고기이며, 우리 민족에게도 예로부터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육류이자 보양의 의미로 매우 친숙해 민화에도 많이 등장한다. 또한 다른 육류 요리에 비해 손질이 쉽고 조리 시간이 빨라 요리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재료와 잘 어울려서 조림, 구이, 닭곰탕, 삼계탕, 닭볶음탕은 물론 여러가지 동서양식 요리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지난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홍보대사로서 전할 말과 우리나라 닭고기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 시장에 유통되는 닭의 경우엔 정부의 검증을 한 거친 닭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좋고, 만의 하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의 경우에도 70℃ 이상에서 조리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국내산 닭고기만의 장점으로는 기본적으로 냉장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냉동 유통되는 수입 닭에 비해 신선하고, 맛을 위해 약간의 숙성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까다로운 검사를 거친 후 시장에 판매되므로, 수입산보다 가격은 좀 더 나가지만 훨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임에는 틀림없다.

고려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부에서 강의 맡아 후진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미래의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편인가.

일단 이 일을 진정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만 선택하란 이야기부터 한다. 몇 년 전부터 셰프가 마스크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 직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는데, 화려한 면만 보지 말고 절대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라고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후엔 대중성을 지향할 것인지 예술성을 지향할 것인지를 택하라고 한다. 대중적인 메뉴를 판매하는 곳은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예술적인 파인다이닝을 추구한다면 실력은 물론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택하든 한번 택했다면 이것으로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을 들려준다.

셰프로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이나 힘이 될만한 조언을 한다면.

상품성이 떨어진 못생긴 채소나 과일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못생긴 무나 당근 같은 것들은 상품성이 없다고 버려지기 마련인데, 깍두기를 담고 볶음밥에 넣는 재료의



모양을 다듬을 때 조금 불편한 것 밖에는 없다. 오히려 약을 쳐서 키워 예쁘게 나온 것들보다 약을 많이 치지 않았다는 증거라 우리 몸엔 더욱 좋을 수 있다. 또 레스토랑의 경우엔 못생긴 채소를 더 보기 좋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대량의 식자재를 소비하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 이를 써주면 4-5년 전 양파 파동 때처럼 대규모 위기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때 정책적으로 알려 전국 식당에서 양파를 조금씩만 더 소비해주었다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산자와 정부, 식당과 레스토랑 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 채소의 경우 원물만이 아니라 볶은 양파, 볶은 당근 등 한 번 가공된 채소를 만들어 파는 것도 많은 식당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농가와 잦은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사이즈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쓰기 편하다'는 이른바 재료의 스펙을 알려주면 농가에선 그에 맞춰 맞춤 제작을 해주면 좋다. 또한 고려담, 청리담 등 희소하고 전통적인 품종의 닭들을 비롯해 소규모 고품질 재배로 키워지는 슬로푸드들이 직거래 농가 활성화로 더욱 늘어나서 다양한 프리미엄 식재료를 소비자가 맛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생산자와 레스토랑 셰프 간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탄탄히 하는 작업입니다.”



남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의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남선 BBS 경제국장은 유년시절, 시골 할머니 댁의 풍경을 회상하면 여전히 미소가 지어진다고 말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농촌이 만든다는 남선 국장을 만났다.

소속
BBS(불교방송) 경제국장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도시에 태어난다. 도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릴 적 농촌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방학으로 기억된다. 충북 산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가 야밤에 또래들과 수박 서리를 간 적이 있다. 서리 중에 원두막에서 밭을 지키던 주인에게 들켰다. 수박 한 덩이 옆에 끼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사전에 계획된 퇴로와 역할분담이라는 치밀한 작전 덕분에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수박주인에게 붙잡혔다. 수박밭 주인은 아침 일찍 용의자 검거에 나섰고 우리의 작전을 주도했던 두목 형이 잡혔다. 고구마 줄기 위이 듯 나도 잡혔다. 전날 서둘러 왔기에 현장을 모른다면 오리발을 내밀려 했으나 증거가 너무 분명했다. 급히 도망치다 수박 밭 한 칸에 퇴비용으로 모아 두었던 오물을 밟은 것이 화근이었다. 나름 작전을 마치고 목욕을 하고 잤지만 운동화에 묻은 냄새까지 인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결국 할머니가 나서서 배상과 함께 사과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있는 나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그러곤 혼자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많은 양의 수박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나이 들어 자식들과 함께 고향을 갈

때 차창으로 그 때 그 냄새를 가끔 맡는다. 그 때면 할머니가 주신 수박과 당시의 무용담이 기억나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나에겐 귀중한 추억이지만 자식들에게 사건의 전말은 끝까지 알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현 농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상대를 이해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농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도시에 있는 사람만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는 없다. 도시에는 농촌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 있고, 농촌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균형을 맞췄을 때 대한민국의 국론결정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에 아이들과 젊은 층이 모여 살수 있어야 한다. 지금 농촌은 아이들은 고사하고 젊은이도 절대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50년 넘은 시골 초등학교는 속속 폐교되고 돈을 위해 바다 건너 온 이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돈 버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이 한창이지만 돈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살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왔으면 한다. 돈을 위해 모인 집단은 항상 범죄와 같은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 그리고 돈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썰물과 같이 사라진다.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지와 사회 현안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소통망이 먼저 마련됐으면 한다.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여러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한다면.

2년 전으로 기억된다. 농촌 어른신의 목욕탕 건설 사업을 농식품부가 시범으로 정해 추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시범 사업은 선거와 시범 기간이 끝나자 예산담당 부처에서 본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들었다. 기존의 다른 예산이 이로 인해 변화가 있을까 우려한 농식품부도 강하게 밀



어 붙이지 못했다. 단지 기자들에게 일정 부분 여론 형성을 부탁하는 정도로 대응했을 뿐이다. 예산 편성 효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목욕탕 혜택을 본 농촌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도시로 올라와 감사 데모라도 해야 하는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더욱 탄탄히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과 물가 그리고 식품 산업 육성 등에 방점을 두는 것 못지않게 농촌 삶의 현장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농정의 경우 증권이나 금융, 대북문제 등 정치적 사안 보다는 폭발성이 적다. 따라서 정확히 알리고 자세히 알렸을 때 정책의 효과가 나온다. 혼란 없이 정책의 효과를 조속히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득과정을 공개하고 발표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시점을 지정한 후 미리 자세히 설명해 정확한 보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나오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 등도 보완해 발표시점에 추가하면 정책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급히 발

표하면 정책 대상자인 현장도 당황하고 기자들도 시간에 촉박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사가 나온다. 특별한 정책 이외에는 사전 브리핑제를 활성화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하자면.

농업은 국민생존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산업화 시대에 일정 부분 위축돼 예산 배정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인간 삶의 근본인 먹거리를 해결하는 부처라는 자부심을 갖고 진취적 자세로 타 부처를 당당히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의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책 보다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진취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을 통해 안전하고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인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부서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R&D 투자를 늘려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모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먹거리를 통해 인간의 육체를 책임지고 자연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범위한 아젠다를 가진 부처가 어디 있는가.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디자인과 6차산업의 내실화로 농업·농촌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황해창

‘농촌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황해창 헤럴드경제 부국장의 말처럼 농촌은 농산물 생산지라는 한계를 넘어 문화적, 환경적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다원적 기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의 말처럼 농촌이 농촌다운 모습으로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소속
헤럴드경제 부국장

그동안 농업·농촌을 방문한 경험이나, 유년시절을 포함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추억이 있는지 궁금하다.

1970년대 초중반 당시 ‘새마을 운동’에 여념이 없던 마을 어른들을 돕겠다며 매주 일요일 아침(새벽)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마을 대청소를 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학교에서 권장한 것이긴 했지만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비비고 나와 집 앞부터 골목골목, 마지막엔 마을 입구 정자쉼터까지 빗자루로 쓸었다. 또 이곳저곳 쓰레기도 줍고 잡풀도 뽑았다. 아마도 칭찬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다. 마을 발전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언론인으로서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촌 디자인과 6차 산업의 내실화다. 우선 농촌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난개발이 심각하다. 농촌을 개량하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그곳의 본질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하나의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조사는 뒷전이고 그저 유행하는 주제를 끼워 맞춰 진행하는 식이다.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힐링'이라는 주제로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느라 마을 어귀를 허물고 길을 만들어 조경을 다듬는 데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지만 무명의 학자나 비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검증 없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 부작용을 키우는 경우다.

농업(agriculture)이 agri(땅, 밭)와 culture(경작, 문화)의 합성어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농업은 분명히 문화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농촌이 단순히 농산물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휴양·오락·관광 등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자연환경은 한번 헤집어 놓으면 되돌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이 잘 된 곳은 우수 사례로 선정해 이들 지역을 꾸준히 관리하는 한편, 사례집 배포 등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수사례 선정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이 사업은 특정 정부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고 여러 중앙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평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 고쳐야 할 점이나,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추진 과정, 성과 등을 설명할 때 관련한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과 현장의 연결성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SNS가 일반화되면서 독자들, 특히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소비자들)이 직접 정책에 접속하는 시대이다. 특히 정책 보도 자료는 보다 알기 쉽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게 좋다.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잘 파악하면 답이 보일 것이다. 또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농업인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상기 질문 이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이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자면.

농촌의 미래와 성공 여부는 농촌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농촌을 농촌답게 되돌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이제는 비료(질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유기농법도 활성화 하자는 거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으면 재해 저항성이 커지게 되고 자생력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로써 쌀 적정생산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잉생산은 쌀값 하락을 불러 농민의 마음만 멍들게 한다. 더구나 세금으로 쌀 수급을 조절하는 낭비와 소모적인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녹색혁명이 수훈갑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질소비료로 수확량을 늘리



고 농약으로 사람이 대신 병해충을 막는 구조를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산에 나서야 할 때이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생각보다 단순할 것일지도 모른다. 농촌을 농촌답게 만드는 것,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과 신선한 현지 농산물, 지역색이 강한 독특한 음식들과 마을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도시생활에 지쳤거나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충분히 발전되고 성장할 것이다.



농촌 환경이 개선돼
싱싱한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상용

박상용 CBS 경제부 선임기자에게 농촌은 어린 눈에도 보일 만큼 ‘시리도록 맑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시처럼 공장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농촌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농촌다움’은 무엇일까.

소속
CBS 경제부 선임기자

유년시절을 포함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는지.
어린 시절 농촌하면 누구나 외할머니댁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더라. 나 역시 외가댁이 있던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농촌 마을이 눈에 선하다. 뒤에는 작은 산이 있고 앞에는 비교적 큰 폭의 개울이 흐르던 그림 같은 시골마을이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장구치며 올갱이(다슬기)와 피라미를 잡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겨울에는 썰매와 얼음 배를 타면서 온종일 놀다가 모닥불에 젖은 옷을 말리던 기억도 마치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의 우리 농촌은 그만큼 시리도록 맑고 깨끗했던 것 같다.

오늘날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는다면.
당장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이 주요 현안 아닐까. 또한 소비량에 비해 너무 많이 생산되는 쌀의 과잉공급 문제도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배추와 양파, 고추, 돼지고기,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급 불만에 따른 유통시장의 혼란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있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안에 대해 농업계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통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린 시절 농촌의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어디서든 푸른 산이 한눈에 들어왔고, 논과 밭은 생명들로 가득했다. 마을 곳곳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향기를 뿜어냈다. 그야말로 생명이 가득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은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철제 공장들만 가득하다. 농촌 환경이 가진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싶다.

앞서 지적인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프랑스와 스페인, 일본 등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농촌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촌마을에 굴뚝 공장이 난립해 이곳이 농촌인지 산업단지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이는 정부가 개발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발을 마구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경관사업과 농촌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회지풍의 기기묘묘한 펜션과 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경관 조성으로 농촌의 따뜻하고 포근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그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특히 아무런 특색도 없는 농축산물 가공

공장들의 철제 창고가 농촌마을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농촌의 환경 가치를 크게 해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을 농촌답게 보존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지역 디자인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가 정책 홍보나 국민소통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서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홍보는 물론이고 정책홍보도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부처인 동시에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정기인사 등을 통해 국장과 과장 등 업무 담당 직원이 바뀌면 정책도 변하면서 홍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단발성 홍보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농업과 농촌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야 할까.

2017년 3월 7일자 뉴욕포스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온 적이 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며 한국의 건강한 식생활을 소개한 기사였다. 영국의 의학저널인 '더 랜셋(The Lancet)'에 발표된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 2030년대 출생할 선진국 35개국의 남성과 여성 인구의 기대 수명을 예측했는데, 그 결과 한국인 남성은 84세, 여성은 90.8세



로 남아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다. 기사에서는 이 같은 한국인의 장수비결이 김치와 비빔밥과 같은 한식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주 기분 좋은 기사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음식과 식재료가 우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9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 중심, 성장 위주의 삶을 살면서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로 이런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부처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농민들이 싱싱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에 힘썼으면 한다.



“
인재가 모여야 발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인생을 걸고
꿈을 실현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주엽

이주엽 CPBC 정경부장은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해 아주 사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취재를 통해 농업·농촌이 발전하려면 도시와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농업·농촌 발전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농촌 인프라와 수익창출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속

가톨릭 평화방송·평화신문(CPBC)
정경부장

어린 시절 농촌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출생은 서울 명동이다. 하지만 강원도가 고향인 부친 덕에 어려서부터 방학만 되면 시골 친척 집에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 이상 지내다 서울로 돌아오곤 했다. 특히 강원도 양양에 있는 친척 집은 읍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차가 하루에 2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오지였다. 서울서 아침 일찍 출발해 하루가 꼬박 걸려 이곳에 도착하면 저녁 늦게 나 돼서야 도착이 가능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즐거운 기억이 많은데 시골의 또래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다니며 풀과 나무들을 보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 겨울철에는 눈 덮인 산에서 친척 아저씨들을 쫓아다니며 개구리도 잡고 토끼 사냥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물론 지금이야 대부분이 불법이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이 농촌의 문화이자 놀이였다.

농식품부 담당 기자로서 농업·농촌 관련 여러 취재를 다녔다. 취재를 통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몇 년간 농업·농촌과 관련된 취재를 하며 현장에서 느낀 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의 낙후성이다. 선진국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도시와 농촌의 생활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도시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만 외각으로 나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화려한 도시와는 달리 지방문화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주거나 편의시설 등 생활기반에 큰 차이가 난다면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을 실감한 것이 바로 일본 취재를 갔을 때였다. 일본 농업·농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 농촌은 주거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깔끔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공공시설 등은 지금도 인상적이었다. 다음이 수익구조이다. 농촌에 거주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농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농사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도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농촌에 거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농업 발전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업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필요한 때이다.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농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농업은 지금처럼 전문적인 분야이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통신 분야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농식품부는 농업의 주무부처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다시 말해 농업을 단순히 기르는 농업이 아니라 돈이 되고 미래를 지향하는 농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과 유통을 철저히 분업화시키고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농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농협과 경쟁을 통해 농민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던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보다 더 분화돼 있는 농업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농식품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알리려면 어떤 식으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지.

사흘 동안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있다. 물론 불편하겠지만 다른 대체 수단도 있을 테고 정 안되면 걸어서라도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사흘을 굶으면 건디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폭동까지 날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 말은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의 역할도 축소됐고 부처의 힘도 작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아니라 농민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며 욕안 먹는 방안에 주력해오고 있다. 당연히 약자인 농민 편에 서는 언론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인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홍보성 보도자료 위주의 생산을 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언론은 홍보성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성 기사를 자주 내놓은 것을 더 선호한다. 농식품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언론 홍보를 단순 홍보가 아닌 정책을 알리고 지적받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부처도 힘이 생기고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된다.



끝으로 농식품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재가 모여야 발전이 있다. 지금처럼 단순한 사실일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발전이 있듯이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고 농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농촌을 과거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패자가 아닌 승자가 농업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인식과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상당히 애를 써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귀농·귀촌 운동 등을 통해 도시와 농업·농촌 간의 거리를 상당히 좁힌 것 같다. 이제부터는 이런 구조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생활도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됐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 농업·농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6 경관사진공모전 대학생 우수상 수상작
윤현열 "전북 정읍 구절초 공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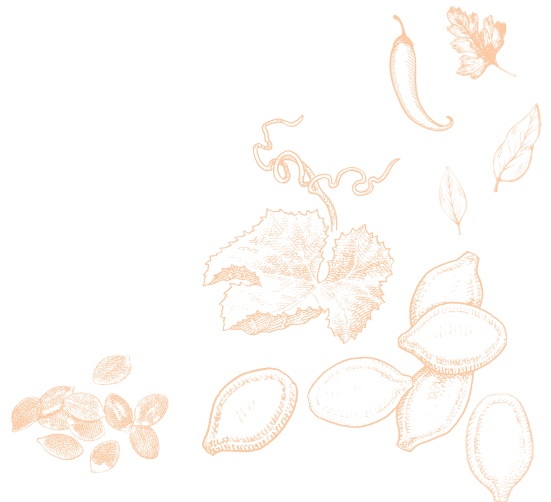
직접 듣는 정책 34선

- 1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춧돌을 놓다
- 2 가벼워진 어깨, 잘 사는 농촌
- 3 신명나는 농촌, 웃음꽃이 활짝
- 4 신선 농산물, 방방곡곡 달려간다
- 5 안정적인 먹을거리, 제2의 국방
- 6 소통과 협력을 통한 농식품산업·농촌 발전

1.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춧돌을 놓다

01.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02. 축산 관련 분야 수출 확대
0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04. 악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05. 농식품 수출 확대
06.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산업화
07. 스마트 팜 보급 확산
08.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09. 도시농업 활성화
10. 곤충산업 육성
11. 종자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우리 농축산물, 전략적 검역협상 통해 세계로!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은 물론, 농산물 소비마저 감소되고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검역정책과 정병곤 과장은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책관계자로 나선 (주)태우그린푸드 조규용 상무 또한 국내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역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책입안자

정병곤

검역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조규용

(주)태우그린푸드 상무

신규수출 시장을 개척하고자 전략적 검역협상을 내세웠는데요. 정책 추진 배경과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정책입안자 정병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이하 정)

해외의 새로운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검역은 수비'라는 과거의 인식을 전환해 '공격이 곧 최고의 수비'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 검역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식물 병해충 등 동식물 질병의 지속 발생으로 위축된 농축산업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고 한류 확산 및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해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우선 기존 수출 검역협상 체계를 분석해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을 추진코자 과거의 방어 지향적 패러다임을 공격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정부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SPS 협의회'와 다양한 민간 협의체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집, 효율적인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WTO/SPS 위원회와 같은 국제회의와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은 물론, 정상회담과 장관급 면담 등 정부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해 협상을 진척시키고자 했습니다. 중국, 홍콩 등 수출 유망시장에는 직접 찾아가는 현지 검역협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지 검역협상 등 적극적인 협상으로 얻어낸 성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정 2013년부터 '수출 검역협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해오면서 과거에 비해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수출협상 타결 건수는 14개국 21건이지만, 정책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21개국 46건의 수출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중국으로 잘 나가던 우리나라 우유가 갑자기 수출 중단됐습니다. 중국 내 한류와 더불어 신선 우유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 수출이 급증하던 추세였기 때문에 국내 유업계는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수출 재개를 위해 1년여의 기간 동안 중국을 7번 다녀오고 업계와 중국의 현지점검에 합동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5년 6월, 1년 2개월 만에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정책관계자 조규용 (주)태우그린푸드 상무(이하 조)

질문에 대한 답은 자사의 사례로 하겠습니다. 태우그린푸드는 한우의 홍콩 수출을 목표로 정부 및 관련 업체들과 함께 홍콩 수출타진 및 시장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일본산 와규가 kg당 45만 원을 호가하던 때로 이는 한우 수출의 가능성을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시장성 확인을 마친 정부와 업계는 2개 조 전략으로 전환해 정부는 홍콩과 검역협상을 개시했고 업계는 홍콩 수요자와 최초 수입자 모색에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트라는 업체를 만나게 됐고 어렵게 한우 600kg을 주문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바로 그다음 날 한국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의 정병곤 과장 및 과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처음으로 구제역 청정 지역(사도 단위) 개념을 홍콩 측에 제시했고, 이듬해 홍콩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유례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

상을 타결시켰습니다. 이후 자사를 포함한 업계는 탄력을 받아 성실히 상대국 관계자를 상대로 실사를 치렀고, 자사는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역사상 최초로 한우고기의 홍콩 정식 수출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최상등급인 1++등급을요.

한우의 상업적 수출은 홍콩이 실질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우에 대한 현지 시장 반응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또한 수출 확대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조 한우는 마블링과 맛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이미 홍콩 언론 및 전문가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미 베트남과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미 태국에서 와규를 kg당 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입니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홍콩처럼 부분 지역 검역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보하

려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합니까.

정 우선 국내 구제역, 고병원성 시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검역협상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수출이 정상화 되고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고, 상대국 정부 및 수입업체 등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하는 등 민간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역협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동식물 질병 발생으로 위축된 화훼, 축산업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 미국 심미디움·호접란, EU 삼계탕 등 수출 유망 품목 협상 타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중국·일본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국제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중장기적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철저한 품질 관리 노력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 수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현장에서 검역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 홍콩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수출한 쇠고기가 경쟁하고 있으며,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상징성 또한 큰 곳입니다.

이제 막 홍콩 시장에 진출한 한우고기가 고품질 프리미엄 식재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출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내 수출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한우고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수출자 스스로가 한우고기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우의 우수성은 전 세계 축산식품이 모여 있는 홍콩시장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축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점점 한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우를 사랑해주시면 농가와 정부가 일체단결해 축산대국의 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국가가 한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제역이라는 복병에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쌀) 이천남부농협쌀조합, 대표 민중식



국내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시장 진출

- 민·관 합동으로 중국 측 현지조사 대비 철저한 사전점검 및 현지실사 대응('15.12)
- 우리 수출 시스템 소개 및 이천 임금남표 쌀 홍보, 중국 수출을 위해 시설 투자(수출용 포장실 공사, 진공포장기 도입 등) 등 적극 노력으로 수출 개시('16.2월)
- * 쌀 수출액(톤/천 불): ('16) 194/42 → ('17 계획) 500/100

사례 2. (삼계탕) 하림, 대표 이문용



식품기업으로 미국, 중국 등지로 삼계탕 수출 중

- '04년부터 정부와 함께 수출을 추진하여 '14년 미국, '16년에는 중국으로 수출 개시
-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9개국으로 수출 중이며, EU 수출도 준비하는 등 한국 대표 식품인 삼계탕과 한식 문화를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 중
- * 삼계탕 수출액(톤/천 불): ('15) 576/3,158 → ('16) 549/3,087 → ('17 계획) 642/3,600

사례 3. 태우그린푸드, 대표 조규근



축산물 유통기업으로 한우고기를 홍콩으로 수출 중

- 전국 대형 마트와 500여 개의 외식 업체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과 협력하여 '15.11월부터 한우고기 홍콩 수출 개시
- 현지 마케팅, 대형 유통망 확충 등 홍콩 시장에 한우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고급육 시장에 '고품질 한우 브랜드' 인착을 위해 노력 중
- * 홍콩 수출액: ('15) 1톤/6만 불 → ('16) 18톤/160만 불 → ('17 계획) 30톤/300만 불
- ** 홍콩 내 판매가격(천 원/100g, '16.3): 일본 와규 32, 한우 30, 호주산 와규 23, 미국산 14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한 신규수출시장 개척에 대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농축산물을 해외 신규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검역협상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조기 협상 타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중

타임라인

- ’13.6.17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
기능 강화 추진 계획 수립
- ’14.7.24
삼계탕 미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5.2.2
한라봉·천혜향 미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5.4.29
포도 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 :
신선 생과실 최초 중국 수출
- ’15.6.18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수출 검역
협상 타결
- ’15.6.24
우유 중국 수출 재개 협상 타결
- ’15.10.31
한·중 정상회담, 쌀·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조건 합의, 실질 수출을
위한 후속협상 추진
- ’15.11.20
쇠고기 홍콩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6.1.7
쌀 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6.1.11
딸기 베트남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6.4.15
쇠고기 마카오 수출 검역협상 타결
- ’16.5.26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한·중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식품 분야도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노력 필요
 - 검역 분야도 ‘검역은 수비다’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격이 곧 최고의 수비다’라는
자세로 공격적 협상 추진
 - 국내 동식물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위축된 산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류 확산 및
지리적 이점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 ☑ 전략적인 검역협상으로 농식품 수출 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해외 신규 시장
개척 가속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기여
 - 민관 협업으로 유망품목 발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전략 수립, 정상회담·고위급면담·국제회의·
방문 협의 등 공격적 협상 추진
 - * '13년부터 검역협상 타결 실적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집중 추진 중



1) '15.11.20 홍콩 한우고기 수출

주요성과

- 1 검역협상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반 구축**
- 지난 4년간('13~'16) 20개국 대상, 쌀·삼계탕·한우고기 등 국산 농축산물 46건에 대한 검역협상 타결
- 2 거대 중국 시장으로 우리 쌀·삼계탕 수출 길 개척**
- 정상회담 등 노력을 통해 10여 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16년부터 중국 수출을 개시
- 3 쇠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우리 한우고기 수출**
- '15년 홍콩 정부와 쇠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 2000년 이후 최초로 한우고기를 수출하고, 현재 홍콩 고급육 시장에서 자리매김 중
- 4 동남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 '15년 말레이시아로의 국산 할랄 유제품 수출, '16년 베트남으로의 딸기 수출 재개 등 검역협상을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 시장 적극 개척
- 5 민간 소통 강화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수출 활성화**
- 유제품 중국 수출 검역증 신속 발급 서비스 도입*, 소규모 축산물 수출업체 관리수익사 채용조건 완화, 포도·배·사과 등 과일을 중국·미국·대만으로 수출 시 거쳐야하는 검역요건 완화 등 현장 애로 해소
* '14년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 결과 대통령상 수상



보완과제 및 계획

- 1 對 중국 파프리카, EU 삼계탕, 인도네시아 유제품 등 시장성·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 집중하여 전략적 검역협상 추진**
⇒ 국제회의(WTO·FTA/SPS 위원회 등), 양자 협의체, 고위급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검역협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 가속화
- 2 범부처 협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 비관세 장벽 조기 해소 노력**
⇒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연 2회,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를 통해 부처 협업 과제 선정(1/4분기) 및 대응 전략 마련
- 3 민간 협업 강화를 통해 수출 유망 품목 발굴, 품목별 수출 매뉴얼 개발, 민간 협의체 운영 등 지속적인 수출 지원**
⇒ 업계 등 이해당사자 대상 수요조사, 민간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성 있는 품목 발굴, 주요 수출 국가·품목별 맞춤형 검역 매뉴얼 제작·공급
- 4 검역협상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국제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통상 역량 제고**
⇒ 농식품 SPS 지원 서비스 개편 및 WTO/SPS 등 검역·위생규정에 대한 사이버 교육 과정 신설, 통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국내 아닌 세계를 향한 전략 필요할 때, 수출로 K-푸드 시대 연다

미국, 유럽 등 축산업 강국들과의 FTA 확대 및 시장 개방으로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수출 확대가 화두이다.

이에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과 이문용 하림 대표이사가 축산분야의 수출 확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책입안자

최명철

축산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이문용

주식회사 하림 대표이사

축산분야 수출 확대 정책이 있기 전 업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책관계자 이문용 주식회사 하림 대표이사 (이하 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블루 오션이였습니다. 당시 식품산업은 1조 원 미만의 시장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성장산업으로 한 번쯤 열정을 쏟고 싶은 분야였지요. 하지만 당시 육계 사업은 모든 농업이 그러하듯 한탕주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투기사업을 어떻게 하면 미래 블루 오션으로 탈바꿈시킬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수직 계열화 사업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곧바로 농장과 공장, 시장을 연결하는 삼장(三場) 통합 경영시스템을 마련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공장은 양질의 닭고기를 생산해 소비자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하림은 수직계열화 사업의 또 다른 동력으로 2013년 일본을 비롯해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2014년도에는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하고 2016년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수출 310만 달러(2016년 기준)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축산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최명철 농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하 최) 2015년부터 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품목별 수출 관련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한우의 홍콩 수출, 삼계탕의 미국 및 중국 수출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수출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현지실사와 수출 작업장 등록 등 검역협상 시 공동으로 대응하

고 수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2016년 11월,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관세청 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 홍보와 정책 추진, 국가 정상 간 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삼계탕 수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업계에서도 신속히 이에 발맞춰 수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수출에 힘을 보탰지요. 특히 중국 관광객 대상 삼계탕 파티, 중국 바이어 초청 가공업체 방문 등은 바이어를 찾는 기업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최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이 일부 국가들에 편중된 구조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이 미흡합니다. 또한 검역협상, 사육, 개량, 수급 등을 관리하는 특화된 수출 전략이 없고, 축산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담기관(aT)과 축산분야 수출 협의체 간 수출 진흥사업, 검역지원, 품목 육성 등의 정책간 연계도 부족합니다. 축산 관련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新시장 개척 및 주요 창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수출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동물약품이나 사료 등 수출유망품목을 중점 지원하고 검역 여건 개선 시 신선 축산물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분야 수출협의체'를 운영해 수출 애로요인을 발굴하고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여 검역 위생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 원료 생산과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을 통해 수출선도 조지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 현재 하림 삼계탕 제품 중 레토르트 제품(고향 삼계탕)과 급속 동결 제품(즉석 삼계탕) 2종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생과 맛이 뛰어난 급속 동결 제품이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레토르트 제품 한 가지만 수출하고 있어 급속 동결 제품에 대한 수출이 절실합니다. 중국인들은 식감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신속한 수출 협상을 통해 같이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삼계탕 수출국이 늘어나면서 국내 삼계탕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위한 출혈 경쟁으로 저가저급 제품이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품질 및 수출 가격에 대한 표준을 수립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대표 음식인 삼계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이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2014년 미국시장 진출에 이어 2016년 중국시장으로도 수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계탕 세계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검역·검사관 부족이고 두 번째는 이원화된 검역·검사 체계입니다. 농식품부 산하 검역본부 소속인 검역관은 미국과 중국 수출을 위한 도계장 위생 점검을 비롯해 생체검사, 해체검사, 최종 제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 위치한 호남 지역본부에는 검역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 검역관이 전라북도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검역을 진행하다 보니 축산기업들이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

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미국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들까지 있어 검역관에 대한 인력 총원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원화된 검역·검사입니다. 도계라인 위생 점검 등 생닭을 생산하는 부분은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삼계탕 제조인 가공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체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원화된 검사 체계로 인해 도계 및 수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축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행정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수출에 있어 날씨와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들의 원활한 생산과 가공, 선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수출은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직원 4명이 하림을 비롯한 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림의 경우 주당 2일을 미국 수출 도계를 진행하는데 4명(분당 35수 검사기준 총족)이 2일 동안 하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림 외에 다른 회사 사업장까지 나가게 된다면 수출 진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올해 대형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참프레까지 미국 수출을 진행하면 수출을 위한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금제품의 미국 수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검사원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역본부 소속 검역관에 대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닭고기 유통의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저온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하림은 국내 최초로 미국 삼계탕 수출과 함께 삼계탕 조리법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한국 전통 삼계탕에 대한 유래와 제조공정 등을 소개한 웹사이트도 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까지 시장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언어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중국 수출을 위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서 하림은 민간협업을 통한 검역 지침서 마련과 함께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하림을 비롯한 육계산업 업체와 농식품부, 한국육계협회가 서울 명동에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삼계탕 무료 시식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수출 목표는 미국과 중국 진출을 발판 삼아 EU까지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념 가공육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양념육 제품들도 글로벌 한식으로 개발해 수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양념육의 수출 길이 열린다면 국내 육계산업의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당장 3~4kg의 대닭이 생산돼 농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축산업 자체가 '제2의 농업혁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국이 아닌 세계를 향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의 축산 정책과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고객가치경영을 실천하고 국외로는 또 다른 한류인 K-푸드, 즉 한식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장사례



사례 1. 한우 홍콩 수출

'15.12월 홍콩 쇠고기 수출 재개 협상 완료 이후, 한우 수출협의회 구성, 등급·부위·가격 등 수출관리 기준 마련, 해외사용자용 이력 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16년 對홍콩 302만 불(40톤) 수출



사례 2. 삼계탕 수출 사례

(삼계탕 미국·중국 수출) 만·관 합동 수출 검역·위생 협상 대응, 공동 홍보 강화로 신규 시장개척

* (미국) 수출실적 : ('13) 0톤/0천불 → ('14) 202/1,205 → ('15) 570/3,379 → ('16) 487/2,849

* (중국) 수출실적 : ('15) 0톤/0천불 → ('16) 190/848



축산 관련분야 수출 확대에 대하여

축산 관련분야 수출 확대

FTA 등 확대되는 시장 개방 위기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중심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으로 축산관련 분야 수출을 확대

타임라인

- '14.4 몽골 돼지고기 수출 개시
- '14.7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14.10 캄보디아 가금육 수출 개시
- '15.1 축산물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T/T 구성·운영
- '15.6 말레이시아 우유 및 유가공품 수출 개시(할랄)
- '15.12 한우 홍콩 수출 재개
- '16.1 사료(발효대두박) 중국 수출 개시
- '16.4 한우 마카오 수출 개시
- '16.5 중국 대규모 포상관광 임직원 (8천 명) 대상 '한강 삼계탕 파티' 개최
- '16.5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발표
- '16.6 삼계탕 중국 수출 개시
- '16.11.28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식품부·관세청 간 MOU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로 축산 관련 분야 수출 확대
- ☑ 홍보·마케팅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역량 제고



1) '16.3월 홍콩 한우 프로모션 2) '16.5월 한강 삼계탕 파티

📁 주요성과

1 '16년 축산분야 수출액은 8.4억 불로 '12년 대비 38.2% 증가

- 축산분야 수출 연평균('12~'16년) 8.4%, 축산물 수출('16년 4.6억 불) 연평균('12~'16년) 3.8% 증가
- 축산분야 수출 유망품목인 동물용의약품 2.4억 불, 유제품 2.1억 불, 사료 1.0억 불 수출로 '12년 대비 각각 67.%, 57.6%, 40.8% 증가
- * 연평균('12~'16년) 동물용의약품 13.7%, 유제품 12.0%, 사료 8.9% 증가

2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 재개

- '14년 미국(삼계탕), '15년 홍콩(한우), 캄보디아(돼지고기, 쇠고기), '16년 홍콩(계란), 마카오(한우), 중국(사료, 삼계탕), 뉴질랜드(열처리가공품) 등 수출 검역 협상 완료로 신규 수출 시장 개척 및 수출 재개

3 한우, 삼계탕 등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대응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

- 축산물 수출의 경우 가축질병에 관한 검역 문제와 식품위생에 관한 안전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수출 절차 진행 가능(장기간 소요) → 품목별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 구성으로 적극 대응
- (한우) 브랜드 로고 제작, 해외 구매자용 가공 스펙 및 요리 레시피 책자 제작, 국내·외 수출 프로모션, 수입바이어 초청 추진
- (삼계탕) 방한 중국관광객 대상 삼계탕 시식·홍보 행사 및 현지 진출기업 연계 홍보 행사 개최, 공동 CI 개발 등 추진

4 축산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증빙 서류 간소화

- (수출업체 행정지원) 사료 수출시 민간수출업체 발행 서류를 수출 증빙서류로 인정 절차 간소화*
-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15~'16)
- (FTA 원산지 증명)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FTA 원산지 증명 서류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농식품부·관세청 간 MOU, '16.11월)
- * (기준) 원산지소명 입증 서류 등 9종 이상 제출 → (개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소, 돼지, 닭, 오리, 계란)' 1종으로 간소화

5 축산 분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기반 조성

- 수출업체 시설개보수(사료), 시설현대화(동물용의약품) 및 축산자조금(한우, 우유, 한돈, 닭고기), aT지원 사업(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 육성) 등 활용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 동남아 지역 유제품 수출 확대 위해 '할랄 인증' 등록 지원 추진
- * 할랄 인증 유제품 수출액: ('10) 8백만 불 → ('13) 11 → ('15) 16 → ('16) 12
- 할랄 인증 도계장(1개소)* 및 소 도축·가공시설(1개소) 건립 지원
- * (도축능력) 45천 마리/일, (가공능력) 30천 마리/일, (수출 계획) 연간 400만 불(250만 마리)

📅 보완과제 및 계획

1 축산 분야 신수요 창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 ⇒ 축산자조금 및 aT 지원사업 등 활용, 상품 개발 및 R&D 지원
- * 축산분야 수출액(억 불) 목표: ('16) 8.4 → ('17) 10 → ('20) 15 → ('22) 20

2 체계적 수출지원, 검역·위생 협상 대응을 위한 수출 전담기관, 수출협의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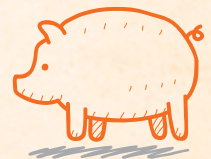
- ⇒ '축산분야 수출협의체'를 신설*·운영하여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검역·위생 협상 대응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 '축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후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확대('18)

3 FTA 활용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 ⇒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통관, 마케팅, 물류, 컨설팅 정보 등 축산분야 전문정보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aT),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축평원) 활용 축산분야 수출 포털 구축('18~)

4 안정적 원료조달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 육성

- ⇒ 품목별 수출협의체를 통한 수출 공동브랜드(CI) 개발·활용, 해외 공동마케팅 강화 필요
- ⇒ 품목별 수출전문 생산농가·경영체 등 지정·지원을 통한 안정적 원료조달로 수출물량 확보 필요
- * 수출제품에 대한 검역·위생 등 안전성 및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등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반려동물 법, 네 발의 평생 친구를 지키는 법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 학대되는 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방역관리과 김용상 과장과 (사)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김용상

방역관리과 과장



정책관계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반려동물 1,000만 인구시대입니다. 그만큼 관련 부분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돼 왔는데요. 정책 수립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정책입안자 김용상 방역관리과 과장(이하 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2016년 7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업계와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 의견을 토대로 대책 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주요 내용의 세부적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 및 동물보호시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세부대책은 2016년 12월 15일, 지자체 담당자와 동물복지위원회, 국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2016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에서 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이하 조) 관련 정책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과 육성하는 법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와 달리 육성은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업 육성에 대한 생각을 말하자면, 관련 용품과 사료 등에 대한 산업 육성은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찬성하지만 반려동물을 직접 분양하고 번식하는 등의 산업은 육성이 아니라 규제が必要하다고 봅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정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 비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가속이 붙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김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은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후속조치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2017년 2월 28일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3개소 건립을 포함해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3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29건이 논의도 안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6개월 안에 16건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중 15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10일 안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 공포된 바 있습니다.

관련 정책 마련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보유자의 책임입니다. 정책 관계자 입장에서 동물 등록제 및 사육 포기동물 인수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조 먼저, 내장형 칩을 이용한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외장형 칩은 떼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마이크로칩 혹은 홍채인식과 같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는 등록방법을 통해 어떤 경우여라도 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 사육 포기동물의 인수제 도입 또한 찬성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해외이주, 사망 등 여러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보호소를 통



해 재입양하게 하는 시스템은 더욱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업자가 아닌 정부 직영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 제대로 정비하고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비해야겠지요. 단순변심으로 동물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호소에 맡기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거주형태가 주택이나 야외가 아닌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조 소음문제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만들어진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소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한 곳은 없습니다. 강제적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의 방안으로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이 있겠습니다. 일례로 ‘영국은 개도 신사적이다’ 할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발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앞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조 현재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에 치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보호에 대한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모두 신경 쓰지 못하는 유기동물 및 학대 동물 구조 역할을 비영리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제언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생산업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물 생산업 허가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 현재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과 농장 동물, 실험동물이 모두 포함돼 있어 향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동물 등록제는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의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유실이나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관리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유실,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한 인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동물장묘업 규제 완화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 동물사체 불법 매립·소각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통해 처리되는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 동물장묘 업체 증가, 장례 활성화로 인해 연간 198억 원 수준 경제유발 효과 발생 및 약 36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사례 2. 고양이 불임백신 개발 건의, 서울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동물인 길고양이의 자생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구조보호 조치 제외

-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영역다툼 등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수술 대상 수에 한계

→ 고양이 불임백신 개발과 투여를 통해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비용 절감 가능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추산: (현행) 마리당 119천 원 → (개선) 10천 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반려동물이 인간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산업이 세분화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

타임라인

- '14.1.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14.10.4
제1회 동물보호축제 개최
- '15.1.30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16.1.21
동물장묘업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제정
- '16.3.4
고양이 중성화 요령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정
- '16.7.7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수립
- '17.12.15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마련
- '17.1.25
동물등록 신청 전국 확대 시행
- '17.2.28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 신설
- '17.3.21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동물의 보호·복지수준 제고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 관련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주요성과

1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5~'19) 수립('15.1.30)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이용의 윤리성을 제고
- * 유기동물 발생수 : ('13) 97천 두 → ('16) 85

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제도개선

-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산업 규모 확대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16.7.7, 12.15)
- * 동물등록 마리수 : ('15) 979천 두 → ('17) 1,200
- *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 ('15) 1.8조 원 → ('17) 2.1
- * 관련 일자리 창출 : ('14) 27천 명 → ('17) 32

3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동물복지팀 신설('17.2.28)

- 급증하는 동물보호·복지업무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7년도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
- * 전담조직 신설 : ('16) 2명(5급 1, 6급 1) → ('17) 5명(4.5급 1, 5급 2, 6급 2)
- *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증액 : ('16) 16.9억 원 → ('17) 93.2억 원

4 동물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고 관련산업 육성 위한 법적기반 마련

-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
-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학대행위 처벌 강화, 서비사업 4개 업종 신설, 신고포상금(펫파라치) 도입, 영업자 교육 및 지자체 영업자 정기점검(연 1회) 의무화 등



보완과제 및 계획

1 동물소유자, 영업자 등의 책임의식 고취 필요

- ⇒ 동물보호경찰(사법경찰관리) 도입으로 동물학대행위,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효과적인 동물보호 추진
- ⇒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펫파라치) 도입

2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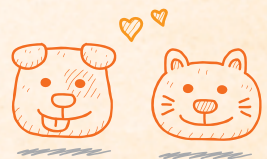
- ⇒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 육성조직, 전문인력 양성, 예산지원 등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전담법을 제정

3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

- ⇒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치료비 부담 완화, 동물보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표준수가제도 마련

4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충

- ⇒ 유실·유기동물 보호소,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동물놀이터 등 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및 인프라 확대
- ⇒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규모 등 관련 통계의 정확성·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청, 관련 협회 등과 협업체계 유지



축산 약취 나는 농장에서 사랑스러운 가축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집약적 사육방식으로 인한 '약취', '가축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함께 커졌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 환경 개선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친환경축산팀 이상혁 팀장과 건국대학교 이상락 교수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축산농가가 환경을 파괴하는 곳이 아닌, 건강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입안자

이상혁

친환경축산팀 팀장



정책관계자

이상락

건국대학교 교수

최근 농식품분야에서는 '친환경 생산'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도 그 일환인가요? 해당 정책의 추진배경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팀장(이하 혁) 자연과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사육 거리 제한, 분뇨처리에 대한 기준 강화가 요구되며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축산업 발전 장애 요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개방 영향보다 국내의 환경규제 강화 등 내부의 압박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 및 분뇨처리 자금 등을 지원해 축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가 환경부하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은 정책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저조했을 때에는 상황이 어땠나요. 현장에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이상락 건국대학교 교수(이하 락) 축산업 생산액은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8조 8천억 원으로 농림업 전체 생산량의 40%를 점유하며, 쌀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급률입니다. 또한 그간 축적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사료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서 저비용,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사육방식이 확산돼 구제역, 시 등과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시스템으로부터 연간 약 4,60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가축분뇨가 발생되는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수질, 토양,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에 친환경축산팀을 설치하고 축산업을 친환경적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취에 대한 민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구제역 등의 전염성 질병 또한 계속 발생해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한국축산환경학회, 축산학회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축산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발표대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농식품부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인 만큼 여러 부분에서의 협업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이 수립됐나요.

혁 농식품부의 신임 장관님이 취임하면서 축산분야의 경우 약취 및 질병 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 선진화 구성 전략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으며 2013년에 제안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 대책 보완에 나섰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자원화 조직체(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와 워크숍을 실시해 현장 의견을 수집했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이 마련된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가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므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축산업의 노력을 적극 홍보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냄새 저감과 안정적 분뇨처리, 무허가 적법화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통상산업부, 농진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 간 공동 대응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 예방에 대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겠지요. 축산환경관리원 등의 공공기관과 농축협 단체 등의 민간 기관 간에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1만 개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축산농장을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정된 농장들은 등급별로 D/B를 마련해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시설현대화, 분뇨처

리 시설 등을 지원받은 곳은 1년 이내에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도록 권장하고 지정된 농장은 컨설팅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분뇨처리 최적화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역화·규모화로 공동사업장의 처리 물량을 확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4대 강 유역,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사육 밀집지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냄새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 과다 발생 지역 및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한 처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외에도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 강화, 축산환경관리원의 기능·역할 강화, 과학적 접근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 보다 과학적인 농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질문 끝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변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축산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냄새 없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우리의 소중한 먹을거리인 축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

급될 수 있도록 축산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축산현장이 냄새나고 질병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누구나 찾아가 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합니다.

질문 친환경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급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나가고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선진화된 축산모형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악취의 원인을 없애고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장단위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 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 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능을 확대할 것이며 가칭, '축산냄새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냄새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도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을 확산시키고 축산환경컨설턴트, 축산환경기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세종시 축산악취민원 증가

(현황) 인근 마을의 수질 차이가 12,000배,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의 구조적 문제 제기(중도일보 등 일부 언론 제기)
(대응) 정부, 지자체 공동으로 축산농원 악취 적정관리를 위한 냄새 저감 대책 등 개선 방안 마련('16~'21까지 시비 21억 원 예산 배정), 축산환경 관리원을 통한 축산환경컨설팅 실시('16.7~8월) 및 세종시 주관 '세종 클린 축산 T/F팀' 구성('15.7.6~'15.11.30)

사례 2.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민원 증가

(현황) 축산악취 민원 발생으로 인해 축산업 이미지 악화 및 분뇨 정책 추진력 악화 우려(굿모닝 충청 등 일부 언론 제기)
(대응) 축산환경 관리원 전문가를 충남도청 T/F팀에 포함시켜 축산농가 현황 및 저감방안 제시('17년 충남 도의회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충남도청 T/F팀 운영('15.12~운영 중)



약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하여

약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수질·토양 등의 오염 방지 등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

타임라인

'04.11

환경부 합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대책 수립

'06.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자원화 지원
등으로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07.7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

'12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제로화 달성

'13.4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수립

'14.6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보완대책 마련

'16.2.22

축산업 선진화 구상 전략 수립

'16.12.22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 수립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가축 분뇨의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을 통한 가축 분뇨 자원화 확대
- ✓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약취 집중관리, 냄새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최적화 및 축산환경개선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조성



1) 축산환경 개선 업무협약식 '16.5.18.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여인홍) / 지원기관(3) : 축산과학원장(代최유림), 축산환경관리원장(장원경), 한국환경공단 기후대 기본부장(신동석) / 생산자단체(7) : 농협축산경제 대표(김태환), 한우협회장(김홍길), 낙농우협회장(代 조명식), 한돈협회장(이병규), 양계협회장(오세울), 오리협회장(김병은),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윤홍민)

1 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및 농가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악취관리 등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 미흡

- 가축분뇨 정책이 자원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축산악취 저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저조
- * '16 자원화율 90.6%, 공동자원화시설/액비유통센터: ('12) 55개소/162개소 → ('16) 84/166

2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 추세

-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양분총량제 시범 도입 등

3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 증폭

- 축산악취 민원: ('14) 2,838건 → ('15) 4,323건(↑ 52.3%)

📁 **향후 보완과제**

① (개별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 ⇒ 축산환경이 개선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대상을 '17년 1,000호에서 '25년 10,000호로 확대
- ⇒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진화된 축사모델 확산
 - * 개방형 축사 지양, 무창(밀폐)축사 권고(축사 개보수 및 신축 시, 냄새 예방 시스템 설계 의무화)
- ⇒ 악취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 가축분뇨 신속 수거 및 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 추진('17년)

② (분뇨처리)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처리체계 구축

- ⇒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16년 30%에서 '25년 50%까지 확대
- ⇒ 공동자원화시설 '25년까지 150개소 설치(돼지 분뇨 30% 처리)
 - * 시설 수/처리비율: ('15) 84개소/14.5% → ('20) 125/20 → ('25) 150/30
- ⇒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25년까지 50개소 추진
 - * 농장단위에서 광역단위(사군, 읍·면)로 시설 개선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③ (냄새관리) 축산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체계 구축

- ⇒ ICT활용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기능 확대
 - *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 중심 → (확대) 냄새 관리, 축산환경 컨설팅 등
- ⇒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냄새 저감 기본 교육 의무화)
 - * '축산냄새 관리 지침서' 대상 축종 확대(기존: 돼지 중심 → 확대: 한·육우, 젓소, 닭, 오리)

④ (자원순환) 냄새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확산

- ⇒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 확대
- ⇒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및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속도 판정 기기 보급 확대
- ⇒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 원예 등으로 수요처 확산
 - * (현행) 벼, 보리, 사료작물 → (확산) 과수, 시설원예 작물, 특용 작물 등
- ⇒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퇴·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 * 퇴·액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시연회 및 품평회 개최

⑤ (전문인력) 축산환경컨설턴트, 축산환경기사 등 양성

- ⇒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 개발
- ⇒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Data-Market화 추진
 - * 대학, 연구기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수출에 대한 틀을 깨면, 한국형 글로벌 수출기업이 탄생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고자 수출진흥과 이정삼 과장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가 만났다. 특히 두 전문가는 농식품 수출의 확대가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산업 고도화의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이정삼

수출진흥과 과장



정책관계자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최근 몇 년간 농식품 시장에서의 세계화 물결이 거셉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수립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이정삼 농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과장(이하 이) 그동안 우리 농식품 산업은 UR(우루과이 라운드),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와 국산 농산물의 공급 과잉 등으로 수급불안이 확대되면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민간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발족하고 2016년 7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할랄,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협의회, 간담회, 세미나, 박람회 등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농식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전 단계에 정책 프로그램을 갖췄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전문 생산기반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수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완벽히 마련되어도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할 것 같습니다. 정책입안자에게 추가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집어주신다면요.

정책관계자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이하 임) 최근 국가 전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농식품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다 획기적인 수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의 개념을 농자재 및 플랜트 수출, 기술과 브랜드 수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수출이라는 원

산지 기준의 지역적 개념에서 글로벌 차원의 생산과 수출이라는 광역적 개념으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글로벌 식품기업의 경우 과감한 R&D 투자와 유통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파워 향상 등을 통해 식품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8%를 차지하며 무려 6,000여 종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매일 10억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한국형 글로벌 농식품 수출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한국형 글로벌 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며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중국의 영유아 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 '한국 영유아 제품 팝업스토어' 아이디어를 2016년 4월 대중국 수출 확대 대책에 담았습니다. 마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된 예산을 배정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 내 105개 베이비샵에 팝업스토어 형태의 한국 제품관을 운영했습니다. 시범 운영했던 105개 매장 중 총 99개 매장에 80여 개 제품이 입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aT와 함께 '미래 클 프로젝트'를 통해 샤인 머스켓 포도, 간 은행, 고구마 가공제품, 당조고추 등 수출 경험은 없지만 상품 경쟁력이 우수한 다수의 품목을 발굴해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하고 마켓 테스트를 지원하는 등 수출 시장에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원 2년 차인 올해는 정식 수출 계약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농업 활성화 정책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전·후방 연관 산업의 고른 성장입니다. 농식품 연관 산업의 수출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동의합니다. 우리 농식품의 상품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관 산업 부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임 이제는 농식품 수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령, 대표적 수출품목인 인삼의 경우 국내산 인삼을 재료로 한 인삼 가공식품 수출에 만족하기보다는 세계 다국적 기업의 생물의약품 혹은 천연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외 수요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국내 인삼 농가에게 더 큰 소득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 천연향료, 식물정화기술, 동물 질병 및 가축번식 육종기술 등 농업과 관련된 생명산업까지 수출농업의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농식품 수출은 1단계에 해당하는 상품 수출, 2단계의 기술 수출, 3단계인 브랜드 수출로 점점 고도화되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식품 수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 유망 수출상품 및 분야 발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 등 주요 분야별 단계적 전략 수립과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면 수출전문 생산기반의 안정적인 정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선 농식품 수출이 실질적으로 농어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단지화 및 영세 수출업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Dole과 선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와 같은 글로벌 수출 농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수출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출 대기업은 내수 시장에 안주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수출농가와 영세 수출업체들은 정부지원에만 의존하

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화·규모화, 연구개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보험제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신선농식품의 수출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을 조직화·규모화함으로써 과당경쟁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전문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FTA 컨설팅·교육 등 효과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정착이 요구됩니다.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수출 선도조직 육성, 물류·통관지원, 현지화·상품화, 마케팅 지원 및 수출시장정보제공 등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콜드체인 구축



중국 칭다오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내륙 주요 도시 간 “콜드체인” 구축, 청두, 광저우를 포함한 7대 거점 운송 시스템 구축
신선유유 등 고부가 식품에 대한 신선 유통으로 물류 리스크 부담 경감, 수출 확대

사례 2. 중국 알리바바 티몰 내 한국관 개소

한국식품 입점 브랜드수

420% ↑



한국식품 판매제품수

191% ↑



한국식품 판매실적

220% ↑



중국 알리바바 티몰(Tmall) 내 ‘한국관’ 개소 이후 한국 식품 및 판매 실적 증가



농식품 수출 확대에 대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을 지원

타이라인

- '14.1.16
민관 합동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시작
- '14.10.27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내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 '15.3.5
UAE와 할랄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MOU
- '15.5.18
중국 최대 B2C 사이트인 티몰 내
한국관 개소(국가관 형태는 최초)
- '15.8.28
칭다오 수출물류기지 개소
- '15.9.18
제1차 한-UAE 할랄식품전문가
포럼
- '15.9.22
대중국 포도 수출 개시
- '16.1.29
대중국 쌀 수출 개시
- '16.4.20
할랄-코셔 인증지원을 위한
식품수출지원센터 개소
- '16.6.29
대중국 삼계탕 수출 개시
- '16.11.23
제2차 한-UAE 할랄식품전문가
포럼
- '17.4.4
신시장 개척을 위한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ALFO) 발족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식품 수출을 통해 우리 농식품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
- ☑ 고품질·안전 농식품 수출을 위해 생산·상품화부터 통관·물류·마케팅·브랜드 등 수출 전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1) '15.8월 칭다오 수출물류기지 개소 2) 농식품 해외개척단(ALFO) 발족식

주요성과

1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식품 수출 확대

- 지난 4년간('13~'16) 농식품 수출은 '12년 56.4억 불에서 '16년 64.7억 불로 연평균 3.5% 증가
- '16년에는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국제유가 하락,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전체 수출이 5.9% 감소하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 적극적 마케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5.9% 증가

2 중국, 할랄 등 주요 식품시장에 대한 우리 농식품의 진출길 확대

- 세계 최대 식품시장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내 한국 농식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청도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리 농식품의 수출 플랫폼을 구축
-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할랄시장인 UAE와 할랄식품 수출 확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UAE-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 할랄인증 협력 기반을 마련

3 물류·통관 등 취약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전 단계 지원체계 마련

-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 신선 물류망('16.5)을 완비하고, 항공 운송 지원 노선을 확대하는 등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
- 통관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통관·관세·법률 전문기관(18개국 75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장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



향후 보완과제

1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 중앙아시아-인도-중남미 등 미개척 시장에 우리 농식품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대외 수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 ⇒ 청년 농식품 해외 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 수출 업체들의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농식품 수출의 활력을 제고

2 경쟁력 있는 농식품 수출 업체 육성

- ⇒ 수출 역량별 맞춤형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있는 수출업체 육성
- ⇒ 합리적 진입 장벽을 만들고,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여 품목별 대표선수를 육성

3 농식품 전·후방 산업으로 수출 정책 외연 확대

- ⇒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연관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는 신순환 구조정책 추진



변화에 따른 육성정책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신성장산업화

시장개방과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로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식품산업정책과 박성우 과장과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농정으로 두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인 가구의 증가 등 국민들의 생활 및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식품, 외식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 외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식품정책' 마련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정책입안자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장(이하 박) 식품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164조 원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연평균 5.9%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 주력산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변화하는 식품소비 및 유통환경에 맞춘 정책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와 학계, 단체, 협회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0차례의 회의를 개최, 식품·외식업체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제2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지 못했던 국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을 위한 범부처 공동 표준식생활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더불어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11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난 2014년 3월 '신식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신식품정책과 함께 식품기업의 개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식품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계자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이하 이)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대다수의 식품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겠지요. 기초 기술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선행되고, 기업들은 응용한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자체기술 개발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소중소기업은 기초기술뿐만 아니라 응용기술까지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 지원관리 체계를 만들어 식품산업 기술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 활용을 통해 양질의 국산 농산물이 많이 사용된다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농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가공, 외식 분야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할 분야는 많습니다. 먼저, 가공분야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수미감자는 스낵류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튀기고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해 농심에서 '수미칩'으로 상품화에 성공,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미감자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국수류로 상품화하고자 하더라도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밀처럼 국산 쌀의 활용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례로 편의점도시락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도시락의 쌀을 국산 쌀로 대체할 수 있다면 과잉생산된 쌀의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식분야에서 식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는데 국산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의 소득도 증대될 것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해당 정책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 앞서 말했듯, 농업과 식품·외식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식품외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과 컨설팅, 품질관리 등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의 R&D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163,147억 원이 쓰인 국가 R&D 사업비 중 식품 R&D 투자규모는 고작 0.9% 수준인 1,481억 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전(全) 생산단계(farm to table)에서 일관된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며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식품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식품(기능성식품, HMR, 고령친화

식 등) 시장을 육성해 식품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과 과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능성 식품이나, 고령친화식을 육성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식품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시며 정부의 농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건강 기능성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한국식품의 수출 여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켜 상품화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농식품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농식품부와 aT 등 산하 기관의 연계강화를 통해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기술지원, 유통·판로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는 농업에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기술 도입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업·농촌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산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상품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될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변화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 현장사례

사례 1. (영)완주봉상생강조합

<매출액 증가>			
'13	'14	'15	'16
3,318백만 원	3,800백만 원	4,585백만 원	6,000백만 원



완주군 지역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해 편강, 생강 농축액 등의 가공품 생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정('12) 대형 유통사 바이어 상담회('15~'16, 2회), TV 홈쇼핑 입점 지원('15) 등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사례 2.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식품기업의 지역사회 및 농업계와의 자발적인 MOU 체결·이행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사례 3. 신평양조장



'13,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 양조장의 역사와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스토리텔링 홍보지원, 체험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컨설팅 지원,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관광객 및 매출 증대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산업화에 대하여

식품·외식산업 육성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

타임라인

- '13.12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4.3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추진계획' 수립·발표
- '14.8
농림축산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 간 상생 협력 MOU 체결
- '14.9
지자체 식품가공시설 표준조례·규칙(안) 마련
- '14.9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운영
- '15.2
전통주 홍보·체험·판매 복합공간인 '전통주 갤러리' 개소
- '15.4
'15~'19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 수립
- '16.4
한식문화관 조성
- '16.9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 준공
- '16.12
한국전통식품문화관 개관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 식품산업화 촉진, 식품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
- ☑ 외식업 인프라 강화로 경영여건 개선, 산업과 문화의 융복합으로 한식저변 확대



1) 전통주 갤러리 개관('15.2) 2) 한식문화관 개관('16.4)

주요성과

1 중소식품기업 육성 등 식품·외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을 '12년 185개에서 '16년 356개로 육성하고 애로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자금 지원, 전용판매장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
- 농업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하우스맥주의 외부 판매를 허용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식품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

2 한식·외식산업을 진흥하고 음식관광 활성화

- '한식문화관'을 조성하는 등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한식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가 '12년 40.6%에서 '16년 64.3%로 58.4% 증가하였고, 우리 외식업체의 해외진출도 '12년 1,485개에서 '16년 5,476개로 크게 증가
- 지역의 전통적 양조장을 관광자원화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을 적극 조성하여('12: 0개소 → '16: 24)로 전국적으로 '14년 대비 '16년 방문객이 37.6% 늘었고, 매출액도 17.3%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에도 기여

3 농업과 식품·외식산업 간 연계 강화

-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상생협력 MOU: '13) 1건 → ('16.누계) 62)하였습니다.
- '김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13),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을 개정('15.9)하여 대중국 진입장벽 해소하는 등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 및 세계화 도모



향후 보완과제

1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따른 유망분야(기능성식품, 가정간편식, 고령친화식품 등)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시장 실태조사, 소비자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유망기업 대상 R&D·판로확대·국산 원료구매 지원

2 R&D,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 민간 연구 보완 과제 중심으로 식품 R&D 개편, 고부가 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 ⇒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완료 및 기업투자 유치 가속화

3 한식·외식산업 진흥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

- ⇒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한식홍보·체험·식문화관 운영 등 K-Food Plaza를 통한 한식·외식 저변확대
- ⇒ 한식과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대내외 홍보 강화

4 농업과 식품·외식산업간 연계 강화

- ⇒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확대
- ⇒ 외식업체 레스마켓(지역농특산물 판매대) 설치 확대, 우수외식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추진



IT강국에서 스마트 팜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다

창조농식품정책과 박순연 과장과 대학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 농업공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김현태 교수가 만났다. 스마트 팜 보급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 사례부터 개선보완점 등 농정 활성화를 위한 농정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정책입안자

박순연

창조농식품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김현태

경상대학교 생물산업기계 공학과 교수

ICT 융복합 기술이 농업 기술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면서 최근 농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팜입니다. 스마트 팜 보급 확산 정책 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관계자 김현태 경상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이하 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보 차원에서의 식량 유지, 고령화 사회 및 농업 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스마트 팜 관련 기술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농업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이때,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회경제 전반에서 ICT 융복합 기술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 또한 스마트 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기술이 농가나 농업에 적용될 바랍시다.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스마트 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스마트 팜 보급 확산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또한 스마트 팜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농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김 현장의 농업인이 느끼는 스마트 팜 지원 사업은 우리 연구자들이 느끼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실에는 3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16주간 한국 농업에서 ICT 기술의 적용 사례 및 스마트 팜 확산에 관한 연구를 위해 OECD의 지원을 받아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 교수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매주 스마트 팜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시

스템을 구축한 농가를 위주로 방문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대면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입안자 박순연 창조농식품정책과 과장(이하 박) 스마트 팜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곳들이 많습니다. 천안의 한 돼지 사육 농장은 스마트 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돼지의 사료량을 조절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등 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팜은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 과학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스마트 팜 확산이 농가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등 전후방 및 연관 산업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지요. 특히 산학연관 협력 촉진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저도 동의합니다. 스마트 팜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적용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급 사업뿐 아니라, 교육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수출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은 관련 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지식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 팜에 대해



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성 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교육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공학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팜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학 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 팜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돼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 우선 스마트 팜 핵심 기자재의 표준화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화를 통해 보급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제품들이 해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정부는 기업의 스마트 팜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출과 함께 농산물의 수출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별 수출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수출이 절실한 그룹에서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유망국가 발굴, 해외 박람회 등에서의 한국 전시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이 ICT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영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실습장과 교육농장 등

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농가들이 선도농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학습조직을 만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공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지요. 농업인들에게도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교육도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한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농업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 및 신성장 모델 발굴 등 농업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혁신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천안 풍일농장, 대표 정창용



어미 돼지 한 마리당 출하두수(MSY) **5% ↑**
 도입 전 20두
 도입 후 21두



출하돼지 상등급 출현율 **7.7% ↑**
 도입 전 65%
 도입 후 70%



돼지 1kg 비육시 사료요구량(FCR) **8.8% ↓**
 도입 전 3.4kg
 도입 후 3.1kg



18년간 IT 회사에서 근무하다 '07년 귀향 후 양돈을 시작했으나, 3년 만에 키우던 돼지의 40~50%가 폐사하는 고충을 겪음
 스마트 팜 도입을 통해 돈사의 온도, 습도, 사료급이량, 급수량 등 시간별 기록 및 데이터 분석에 따른 돼지 사육의 적정 환경 관리로 출하두수 및 출하 품질 향상, 사료량 절감 등 효과 발생

사례 2. 보성 참조은농장, 대표 한해룡



생산량 향상 **34.6% ↑**
 도입 전 20.8톤
 도입 후 28톤



출하 상품량 향상 **50% ↑**
 도입 전 18톤
 도입 후 27톤



소득 향상 **25% ↑**
 도입 전 8천만 원
 도입 후 1억 원



25년간 토마토 농사를 지었지만 경험에만 의존해 짓다 보니 매년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 경영 및 소득의 불안정을 겪음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초기에는 작동 방법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실습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 성과를 제고



스마트 팜 보급 확산에 대하여

스마트 팜 스마트 팜(Smart Farm)이란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함

타임라인

- '13.8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수립
- '14.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규 추진 (시설원예, 축산·양돈, 과수)
- '15.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확대 (축산·양계 추가)
- '15.7
ICT 융복합 첨단농업·행복한 농촌 조성 방안 수립
- '16.1
정부보급 스마트 팜 제품 품질보증제 실시
- '16.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확대 (시설원예·수출전문 스마트 팜 신축, 축산·한우, 낙농 추가)
- '16.3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수립
- '16.5
스마트 팜 대표 홈페이지 개설 (smartfarmkorea.net), 선도농가 벤치마킹 서비스 개시
- '16.8
11가지 유형별 스마트 팜 선도사례집 발간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농촌 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
-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함으로써 토지,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 스마트 온실, 축사 등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를 위한 보급사업 추진
- ✔ 스마트 팜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 A/S 등 현장 지원 강화
- ✔ R&D, 관련 기업 육성 등 스마트 팜 관련 산업 성장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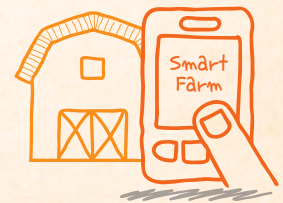


📁 주요성과

- 1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 스마트 온실('14: 60ha → '15: 364 → '16: 1,143), 축사(30호 → 156 → 234)
- 2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
- 생산량 증가('15: 25.2 → '16: 27.9%), 고용 노동비 감소('15: 9.5 → '16: 15.9%)
- 3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지원체계 강화**
- 정부 보급사업 제품의 품질보증 의무화('16), 통합 콜센터(1522-2911), SNS 밴드 개설('16), 권역별 지원센터 확충('14: 1 → '15: 8 → '16: 10)
- 4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로 보급단가 인하**
- 비용(0.3ha당): 단동 온실 7 → 5백만 원, 연동 온실 20 → 16백만 원
- 5 스마트 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 핵심 센서·제어기 25종 단체표준 등록, 스마트 팜 R&D 연간 281억 원 투자,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연동형 스마트 팜 제어 S/W의 70%가 국산 활용

📅 향후 보완과제

- 1 스마트 팜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노지작물·수직형 농장 등으로 외연 확대**
* '17년 보급목표(누적): 시설원예 4,000ha, 축사 730호, 생산량 30% 향상
⇒ 수출전문 스마트 팜 신축 지원 확대, 집적화한 스마트 팜 단지 조성(20ha) 및 노지 밭작물 등 다양한 스마트 팜 모델 개발 추진
- 2 스마트 팜 전문 인력 육성 등 교육·R&D 지원 강화**
⇒ 품목 전문대학('16: 4품목 → '17: 7), 첨단 교육장('16: 3개소 → '17: 7) 확대 및 ARC*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육성 강화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통합제어 SW 등 핵심기술,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확대 추진
- 3 4차 산업혁명 대비 ICT·인공지능 등 융복합 확대**
⇒ 단순 원격제어에서 기계가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20)



벤처창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한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과학기술정책과 홍인기 과장과 경북대 임기병 학장, 디캠프 김광현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꼽았다. 더불어 첨단기술과 농업을 융합한 다양한 벤처창업자들이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입안자

홍인기

과학기술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임기병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장



정책관계자

김광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 겸 디캠프(D.CAMP) 센터장

최근 농업분야가 ICT기술 접목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장년층의 농산업 진출이 다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 지원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이하 홍) 정부는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금과 판로,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여러 기관과 교류하며 현황을 조사하고, 벤처 업무 총괄부처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농식품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필요 분야 등도 청취하며 농식품 벤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책관계자 임기병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이하 임) 우리나라 농식품 벤처창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는 경우와 대학교수가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는 경우, 그리고 농산업 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경우는 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립하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면, 종자회사에서 육종가로 기술과 품종을 육성하다가 개인 육종가로 독립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확고한 품종육성기술이 있고 기

존의 고객인 농민들을 확보하고 있어 생존율이 높습니다. 이들 기술기반 벤처기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정부 과제에 참여해 연구비 형태의 지원을 받는 정도에 머무릅니다. 이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부 벤처기업은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국가연구과제 수행에만 집중해 정작 전력투구해야 할 회사 본연의 일은 집중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운영비 지원 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를 정상적인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관계자 김광현 디캠프(D.CAMP)센터장(이하 김) 농식품 분야는 혁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다른 분야에 비해 창업이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농식품 벤처창업이 왜 부진할까요? 농식품에 기술을 결합해 혁신하려면 농식품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농식품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는 기술을 잘 모르고, 기술에 정통한 이는 농식품에 대한 식견이 없어 벤처창업을 통한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업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투자가 많이 드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농식품 분야는 창업 한두 해 만에 매출을 올리는 다른 분야와 달리 창업 후 매출을 올리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습니다. 게다가 자금줄이 끊기면 혁신 시도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턱만 낮춘다면 선도적으로 진입한 벤처의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벤처창업의 현주소를 말하면서 운영비 지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준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 농업 벤처의 경우 틈새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R&D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지원해 영세업체도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한 규모로 경영자금과 마케팅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벤처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한 창구에서 모두 해결해 주도록 해서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농식품 벤처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과 우수 벤처를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만나 혁신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농식품 벤처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우수 벤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수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 중소기업청의 티스(TIPS)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농식품 벤처의 경우 보여주기식 성과관리보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책 관계자를 통해 여러 정책적 보완점이 제안됐습니다. 이외에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홍 IT와 엔지니어링 등 타 부문의 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농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의 외연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개설한 서울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젊은 기술자들이 농업을 활용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 농식품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해외 수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기청과 미래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농식품 기업은 없거나 참여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농식품 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스타트업의 성공적 정착과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장사례

사례 1. 꼬마감자 생산 (주)옥야



매출액

'14 44억 원
'15 63억 원

43% ↑



고용인력

'14 8명
'15 14명

75% ↑



강원 특화센터를 통해 현장 컨설팅(실용화 재단), R&D 기술사업화지원(농기평), 입주 보육(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지원 '1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 후 지자체 사업 연계(안성시, 약 20억 원) 및 GS·코스트코 판로개척 등 후속 효과 발생

사례 2. 파슬넷

O2O 직거래 무인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 확보에 애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5천만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소비자 마케팅, 프랜차이즈 사업 기반 구축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마련, 펀딩 과정과 성공사례 보도 등을 통하여 기업 홍보의 계기로 활용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ICT, B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 이를 활용한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도모

타임라인

- '15.6.2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 발표
- '15.6.17
전남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 '15.4 - 11
제 1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 '16.5.17
강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 '16.5.25
경북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 '16.6.30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전용관 개설
- '16.5 - 11
제 2회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 '16.12.1
농식품 스타트업 제품 홍보관
A-Startup 마켓 개설
- '17.3.8
서울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 '17.3.10
세종 농식품
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설치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촌인구,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의 농업·농촌 참여가 절실
- ☑ 농업과 ICT·BT 등 새로운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신성장산업화 및 농촌 활력을 제고·모색
- ☑ 기술 기반 농산업 벤처 창업에 필요한 자금·판로·R&D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1) KBS1 '나는 농부다' 창업콘테스트

📁 주요성과

1 농식품에 특화된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에 기반한 창업 확대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5개소 : 서울, 세종, 강원, 경북, 전남) 설치를 통해 '16년 1,083건의 창업 관련 상담 추진, 이중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268건의 연계지원 성과 도출
- 유망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시장테스트 및 유통 채널 연계를 위한 'A-Startup 마켓'을 개설하여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2 투자유치 수단의 다각화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전용관을 개설(3개소), 총 51개 기업이 펀딩에 참여하였고, 이중 30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8.2억 원)
- 120억 원 규모의 창업전용 모태펀드(창업아이디어 펀드)를 조성 및 운영

3 창업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창업붐 조성

- '15년부터 매년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결과 연간 약 1,000여 건의 창업아이템 발굴, 상위 10개 팀에 대하여 R&D 자금, 창업보육, A-startup 마켓 입점 등 후속지원 제공
- 콘테스트 전 과정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KBS1 "나는 농부다"), 최고 시청률 7.1% 기록

4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도입

-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의 R&D 자금 지원
- '16년도에는 총 32개 업체를 선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2.8:1을 기록하며 벤처창업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

📅 향후 보완과제

1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접근성 제고

- ⇒ 전국 어디에서나 특화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세종에 특화센터 2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총 5개소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전국망을 구축
- ⇒ 농식품 창업정보망을 개설하여 시장동향, 지원사업 등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

2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사업 내실화

- ⇒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1:1 상담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농식품 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홍보를 강화하고, 농식품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필요한 컨설팅 프로그램 다각화 운영

3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스타벤처 발굴 및 육성

- ⇒ 제1,2회 콘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3회 창업콘테스트를 개최(5~10월)
- ⇒ 결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R&D, 금융, 창업보육 등 후속지원을 내실화하여,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아이템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강화



도시농업, 도농상생의 기준을 만든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취미, 여가 활동으로서 농사체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종자생명산업과 우미옥 사무관과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신동헌 대표는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펴서 전 국민의 90%에 이르는 도시민들에게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우미옥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책관계자

신동헌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대표

농촌에서의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의 문제로 쇠락하는 데 반해 도시농업은 성장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도시농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수립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입안자 우미옥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하 우) 현재의 농업·농촌은 시장개방과 노동력 감소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도농상생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독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도시생활농업 모델정립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여 차례의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도시농업을 시책으로 먼저 도입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담당자들과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시민운동을 전개하던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도시농업포럼 등 민간단체와 공조해 정책아이디어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 도모를 위해 시민단체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계자 신동헌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대표(이하 신) 2010년에만 해도 도시농업은 큰 비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에 사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규합해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항의는 거셌고, 도시농업은 농촌농업도, 도시농업도 아닌 열치기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

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10만여 명에 불과하던 도시농사꾼은 현재 20배가 성장한 200만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존재 이유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상생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그간 텃밭현장에서 도시민을 모아 도시농사꾼학교를 설립하고 농업의 소중한 가치와 어려움을 몸소 체득하게 하는 활동을 심 없이 전개했습니다. 도시곳곳의 자투리땅과 옥상 공간에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해 밥상에 올리는 가치를 실현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농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농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은 어디일까요? 도시농업은 소비자 과학입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산에 방점을 둔 농정의 방향성도 시민단체가 이끌고 나가야 시너지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의 가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농정의 방향성에 부합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도시농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려면 시민 개개인이 결집돼 한 마음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신 곳곳에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마련해 조직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봅니다. 농식품부와 도시농업포럼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꿈틀어린이 텃밭학교(이하 꿈틀학교)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20회의 전 과정이 끝날 때가 되면 꿈틀학교의 부모들은 한 식구가 돼 별도의 모임을 갖는 등 도시농업의 100점짜리 우군이 됩니다. 지금은 전국의 단 4곳만

실행되고 있지만, 이런 모임이 전국 10만 도시에서 한 곳씩만 조성된다면 도시농업의 좋은 롤 모델이 돼주는 것은 물론 농업의 큰 후원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농업의 좋은 롤 모델로 성장한 ‘꿈틀어린이 텃밭학교’가 실제로 가족관계 개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나요?

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생태텃밭에서 총 20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꿈틀어린이 텃밭학교’는 여러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당시 참가했던 가족들을 분석한 결과, 관계개선은 물론 이웃과의 교류, 노동의 가치 인식,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자 꿈틀어린이 텃밭학교 활동내용을 400쪽 분량의 백서로 발간해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텃밭교육 교재로 활용토록 배포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2016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이 명예교장으로 부임한 ‘꿈틀어린이 텃밭학교’가 운영됐으며 2017년에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텃밭 작물 외에도 여러 유형의 농업이 시도되는 등 기존의 정책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정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현 정책의 미비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 시민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미비사항을 지적하자면, 결정적으로 예산확보가 부족하다

는 점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힘과 아이디어는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심과 방향성 제시, 분위기 조성은 가능할 듯합니다.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전제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도시농업세미나는 대부분이 사례발표와 활성화 방안에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생생텃밭(대표 국회의원 정세균)은 도농상생의 가치를 내세웠고 꿈틀어린이 텃밭학교(교장 농식품부장관)는 창의와 함께 인성강국의 가치를 내세웁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텃밭의 가치 중 새로 발견된 인성의 DNA를 내세운 게 꿈틀학교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함께 가는 맞춤형 아이디어 정책제시가 중요합니다.

우 최근 새로운 유형의 도시농업(도시양봉, 곤충사육, 도시농부마켓 등)이 생기고, 취미·여가체험·학습 등의 기능뿐 아니라 치유 기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사육, 양봉, 수목화초 등도 도시농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도시농업의 활동지역을 기존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제도(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고 도시농업인들의 응집력 강화와 도시농업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시농업의 날(4.11)’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더 강

화해야 할 부분에는 학교 텃밭(school farm)과 실버텃밭(silver farm) 확대가 있겠습니다. 학교 텃밭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식생활 개선교육에 나서는 한편, 실버텃밭으로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건강유지를 도모하는 등 대상자별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완과제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 국민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하는 농업으로서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꿈틀텃밭학교’에 대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학교 텃밭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양로원과 의료원 등에도 원예치유용 복지텃밭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곤충이나 관상원에 등 관련 분야도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겠지요. 도시농업을 농작물 경작, 재배에서 수목재배와 곤충사육 등으로 확대하고 관상식물의 소비촉진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한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농업단체의 규모화 촉진을 통해 도농상생사업의 주제로 육성할 것입니다. 전국단위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지원 등이 규모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농협중앙회와 한농연, 전농 등 대표적인 농업단체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농업단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도시농업농장

관계 기관 협업으로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농장 조성(대전, '15.4월)
미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국토부),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충(농식품부), 주민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대전시) 등 복합적인 효과 도출



사례 2.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농식품부 장관이 교장 되는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15, '16, 총 2회),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식생활 개선 등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교장으로 부임
텃밭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변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 도출

부모와의 관계개선

체험 전 — 3.47
 체험 후 — 3.64

이웃과의 교류증가

체험 전 — 53.2%
 체험 후 — 63.6%

신체활동 증가

체험 전 — 11.71보/분
 체험 중 — 13.5보/분

의사소통 변화

체험 전 — 3.83
 체험 중 — 3.97

학교폭력 피해경험

체험 전 — 3회
 체험 중 — 5회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체험·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도시농업, 90%가 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수단이며, 온국민이 함께하는 농정의 밑거름

타임라인

'13.5.31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14.2.13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도시농업연구 근거 반영

'15.3.31

2평의 행복,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

'15.4.11

도시농업 전국 네트워크 발족

'16.6.13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시농업계 신설

'17.3.3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

'17.9.22

도시농업의 날(매년 4.11) 지정,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전 국민의 90%가 넘는 도시민에게 농사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여 도농상생기반을 확고히 구축
-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인식 개선, 귀농·귀촌 유도,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의 활력증진 뒷받침
- ☑ 학교 텃밭 체험교육을 통해 가치관 정립기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식습관 형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효과도 기대



1) '17.04.11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주요성과

1 도시농업 참여자 수와 텃밭면적 꾸준히 증가

- 도시농업단체의 시민운동과 정부·지자체의 제도마련 등을 통한 참여자 수('13: 885천 명 → '16: 1,599) 및 텃밭 면적('13: 564ha → '16: 1,001) 확대

2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실천여건 조성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2.5.22.),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13.5.31)
- 전국지자체에서 관련조례 91개 제정, 도시농업협의체 99개소 구성, 도농상생협약 83건 체결('16 기준)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접근성 및 수요자 편의 향상을 위한 개편 추진('15)

3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실천기반 확충

- 2015년부터 국회에 '생생텃밭'을 조성, 사회지도층의 참여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
- 행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체텃밭을 조성('15~'17년 18개소)
- 관계부처 부처협업 등으로 공동체텃밭 18개소 조성, 그린벨트 내 유휴지(255개소, 186ha)텃밭부지로 제공, 전국 어린이집·초등학교 체험학습용 텃밭 4,200개소 조성

4 도시농업 인식향상을 위한 플랫폼 생성

- 도시농업 관련 엠블럼(1종), 캐릭터(11종), 텃밭동요(텃밭꼬마 친구들) 등 홍보물 개발·보급
- 2015년 학교텃밭 운영모델(꿈틀어린이텃밭학교)을 개발하여 지속 확산('16: 3개소 → '17: 6개소)

- 1) 엠블럼(1종) 2) 캐릭터(총 11종)



향후 보완과제

1 국민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하는 농업으로서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 추진

- ⇒ 정책효과가 큰 미래세대 대상 '꿈틀학교 프로그램' 확산, 학교텃밭 확대 설치
- ⇒ 양로원·의료원 등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원예치유용 '복지텃밭' 설치 유도

2 곤충, 관상원에 등 연관 분야의 동반성장 및 외연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 도시농업을 농작물 경작·재배에서 수목재배, 곤충 사육 등으로 확대
- ⇒ 전문가격제도(도시농업관리사) 도입, 도시농업의 날(매년 4.11) 제정 추진
- ⇒ 관상식물(꽃) 소비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 현안사업과 연계 추진

3 도시농업단체의 규모화 촉진을 통한 도농상생사업의 주체로 육성

- ⇒ 전국 단위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지원(연 2회) 등으로 규모화 촉진
- ⇒ 농협중앙회, 한농연, 전농 등 대표적인 농업단체들과 파트너십 강화
- * 꽃 소비촉진,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및 귀농·귀촌사업 등 실천 방안 논의

4 문화·예술 등 타분야와의 융합서비스 창출

- ⇒ 주말농장에 문화행사 등을 접목한 문화공간으로 육성
- ⇒ 기존 파머스마켓에 도시농부, 요리사, 수공예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진화·정착



곤충은 안 먹는다고요? 흔스러운 소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은 우리 농식품분야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자 한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종자생명산업과 안정모 사무관과 식용곤충 연구로 우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주)케이일의 김용욱 대표는 가까운 미래에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책입안자

안정모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책관계자

김용욱

(주)케이일(KEIL) 대표

곤충산업이 새로운 미래 농업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산업으로, 그 성숙도는 낮습니다. 때문에 정책 마련 전 까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정책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나요.

정책관계자 김용욱 (주)케이일 대표(이하 김)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곤충이 한시적 식품으로 승인받는 과정이 무척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육 곤충의 판로 개척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된 식용곤충의 일반식품 원료 전환과 그에 따른 규정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정책입안자 안정모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이하 안) 곤충이 미래 농업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태까지 산업의 성숙도가 낮아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곤충산업의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규제 개혁을 통한 곤충의 용도 확대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규제개선이 이뤄졌는데요. 먼저 1단계 규제개선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 식약처에 이르는 세 개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 일부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2단계 규제개선으로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곤충의 식품원료 확대'를 건의해 받아들여졌으며, 2015년 제4차 회의에서는 우수성과사례를 발표하면서 곤충의 일반식품원료로의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곤충들(고소애, 쌍별이, 꽃벥이, 장수애)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곤충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평가한다면요. 특히 정책 수립

이후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정책 확립과 각종 규제 완화 이후 식용사료용 곤충산업은 연 4배 이상의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는 생산자와 식품회사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경우 2015년 11월 이후, 연 4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국내외 글로벌 식품 대기업의 투자와 공동사업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규제 완화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 식용곤충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곤충요리경연대회'를 지속 실시하고 미래고객층인 아동·청소년 대상 미각 교육을 확대해 일반식품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수도권 지하철역 내 전광판이나 버스 광고 등 대국민 접점매체와 농식품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노력 외에도 곤충자원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의 우수한 종충을 관리하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중 균일하고 안정적인 곤충자원의 공급 및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 대량 사육 자동화 기술 개발과 표준 농가

계열화를 통한 사육 클러스터 사업이 선행되길 바랍니다. 현재 식용 곤충 7종은 모두 일반 식품 원료로 등록돼 있으나 전국 120여 개 농가 대부분이 부업 혹은 소규모 농가들로 구성돼 있어서 대량 사육 자동화 공정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비해 생산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판매 가격이 중국에 비해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비싼 실정입니다. 곤충의 판매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대량 사육을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문, 뉴스 등에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PPL, 한류 스타들의 참여 등 소비자의 구매에 보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홍보정책을 기대합니다.

규제 완화와 각종 정책 마련으로 곤충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곤충산업의 성공사례도 있을까요?

안 양재동의 곤충 카페 ‘이더블버그’는 고소애가 함유된 디저트 셰이크를 판매하는데요. 연 매출 1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쿠키와 에너지바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높고 인터넷상에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외에도 뽀뽀용의 키친, 플로라 등 곤충을 원료로 한 레스토랑 등이 청년들의 창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CJ나 대상 등의 식품 관련 대기업의 참여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 산업에 여전히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이 가진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세요.

김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식품소재 불모지라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 외식산업체에서 만드는 즉석조리 식품의 소재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소재들이며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 비중은 높습니다. 곤충 물질 식품 소재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떤 선진국과도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산업을 지원해주는 유연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안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육성 정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종충 관리를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조성하고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중 균일하고 안정적인 곤충자원이 공급될 것이며 질병관리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업단을 통해 농가 조직화, 품질 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도 올해 중으로 8개의 기관을 10개로 늘려 산업자원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건강 기능성 식품 활용 등 새로운 곤충 수요를 발굴하고, ICT 기반의 자동화사육 시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 현장사례

사례 1. 청년 창업조성



곤충카페 이더블버그 에너지바, 견과류 등 10여 종

- 정기적인 세미나,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을 통해 식용 곤충 홍보 및 대중화에 기여
- 서울(흑석동-양재)과 부산(안락동)에 3개의 매장이 있으며, '15년 25백만 원 대비 '16년 120백만 원으로 5배 증가, 소비자 구매 만족도는 97.4%에 달함



곤충요리전문점 뽀뽀용키친 쿠키, 에너지바 등 20여 종

- 국내 최대 식용 곤충 및 식품소재 전문 기업
- 서울 신당동, 남한산성에 2개의 매장이 있으며, 월 매출액 1,500만 원 수준으로 '15년 36백만 원 대비 '16년 144백만 원으로 4배 증가

사례 2. 곤충 신규 식품시장 창출

소비자



자유롭게 원료를 구매하여 요리로 개발*

*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승인한 영업자,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모든 영업자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해짐

환자식



위장 절제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속도 증진을 위한 회복식 개발

기업



곤충 단백질 활용 고단백 수프, 에너지바 개발

* CJ는 곤충 사육과 원료소재개발 착수, 대상은 수프, 에너지바 개발('17년 4월 출시 예정)



곤충산업 육성에 대하여

곤충산업

곤충은 식량·기능성 소재·농업자재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유망하며, 용도 확장에 따라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어 농업·농촌의 신활로로 부각

타임라인

'14.9.3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곤충의 한시적 식품원료화 추가 건의

'15.2

경북 화분 매개용 곤충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5.9

경남 식·의약·사료용 곤충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5.11.6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한시적 식품원료 4종에 대해 일반식품원료 전환 건의

'16.2

곤충산업법 개정: 위해성 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마련

'16.3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일반 식품원료 전환

'16.4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 마련

'16.5

식용곤충 애칭 공모 실시

'16.7

제3차 곤충요리 경연대회 개최

'16.9

대전 학습애완용 생태관 건립

'16.10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 제정

'16.12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일반식품원료 전환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식품 분야의 신성장 동력인 곤충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농업·농촌의 신활로로 부각
- ☑ 곤충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통한 곤충산업규모 확대, 전국 4개소의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 확충 등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



1) 대표적 곤충 요리

주요성과

1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행 및 제2차 종합대책 수립

- 1차 5개년 계획('11~'15)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조성하였으며, 2차 계획('16~'20)은 대량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핵심농업으로 도약시키는데 집중
- 이를 위해 '생산 → 유통 활성화 → 시장 확대'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
 - * 곤충산업 시장규모: ('13) 2,200억 원 → ('16) 3,400억 원으로 1.5배 상승
 - * 곤충사육농가: ('13) 384농가 → ('16) 1,250농가로 3.3배 증가

2 곤충산업의 선제적 제도 개선

- 국내에서 곤충을 식품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도적 규제가 있어 일반식품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 우선, 부처간 협업(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으로 한시적 식품원료로 곤충을 새롭게 인정
- 이후에,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곤충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하여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용이 가능
 - * 갈색거저리 유충(고소애), 쌍별귀뚜라미(쌍별이), 장수풍뎡이 유충(장수애), 흰적박이꽃무지 유충(꽃뽕이)

3 곤충자원의 긍정적 가치 확산

- 곤충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긍정적 가치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
- 식품원료로서의 곤충에 대한 가치확산을 위해 '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곤충요리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미래고객층인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각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원료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

4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대하여 산업저변을 강화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 * ('12) 2개소 → ('13) 3 → ('14) 4 → ('15) 5 → ('16) 8
 - * 경기·경남 농업기술원, 예천·양주·청주·대전·고흥군 기술센터, 안동 가톨릭상지대

향후 보완과제

1 곤충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 필요

- ⇒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질병메뉴얼을 보급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17~'19)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충관리로 연중 균일하고 우수한 곤충자원 보급

2 곤충자원을 광역·대량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의 영세성 극복 필요

- ⇒ 곤충산업 주체(지자체-생산자단체-기업)가 참여하는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17~)하여 산지조직화를 도모하고, 활용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

3 곤충의 긍정적 가치확산을 위한 홍보확대 필요

- ⇒ 건강, 환경, 경제를 살리는 착한자원인 곤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곤충요리경연대회, 식용곤충미각교육 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확대

4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신수요창출 필요

- ⇒ 곤충의 가능성을 활용한 식·의약소재개발,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ICT 기반 자동화 사육시설 모델개발, 병·해충 확산방지 등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미래 신성장동력 종자산업! 바이오산업의 반도체가 되다

종자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미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첨단 육종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상업성 높은 종자개발에 나섰다. 이에 종자생명산업과 최근진 과장과 충남대학교 임용표 교수는 국내 종자산업 또한 역량 강화 및 종자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입안자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 과장



정책관계자

임용표

충남대학교 교수

종자산업 관련 정책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최근진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장(이하 최) 종자산업을 농업부문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재인식해 2009년 10월부터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수출전략 품목 육성 등 5대 추진전략, 2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012년 6월에는 기존의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 관련 규정을 분리, 정비한 '식물신품종보호법(2013.6.2 시행)'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종자산업법에 따라 5년마다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과제 도출을 위한 관련 기관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여러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 궁금하며 정책 수립 이후, 해당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정책관계자 임용표 충남대학교 교수(이하 임) 종자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막상 현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역량이 워낙 뛰어난 데다,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받아 분자육종분야를 연구하고 있어 국내 전통육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지요.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는 각 회사에서도 희망을 갖고 집중적 투자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투자도 크게 일어나고 많은 연구원을 채용하

는 등 기업의 규모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LG, 더기반, CJ 등에서 종자기업을 만들어 투자하는 등 국내 종자업계엔 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주요 이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임 최근 종자산업이 의약이나 나노기술 접목을 통해 융·복합 산업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정추진방향의 6개 영역, 30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종자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종자 육종기술이 아직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기는 미흡하다 보니 해외 유력 종자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 향상을 앞당기는 전략을 도모했고, 2016년 2월 중국 화공그룹이 신젠타를 인수·합병했지요. 신젠타는 2015년 매출액 151억 달러, 종자산업이 22% 비중으로 몬산토와 두폰에 이어 세계 3위 글로벌 종자기업입니다. 만약 중국의 신젠타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중국은 세계 두 번째 종자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물론 신젠타는 채소 종자보다 곡물 종자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신젠타 인수를 통해 30%에 불과한 내수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사업이 우리나라 종자산업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임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자강국 도

약과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실현할 목적으로 지원된 최초의 다부처 기업지원형 R&D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면 우리가 종자 관련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로열티를 역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세계 채소종자시장은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선점하는 반 독과점 체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종자를 세계시장에 진입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개발된 우리 우수종자가 카피돼 외국산으로 재유입되는 부분은 막아야겠지요.

종자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인력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 현재 우리 종자산업을 주름잡는 기업의 대표와 간부들도 몇십 년간 육종연구소에서 노력해 이뤄낸 것이기에 반드시 젊은 인력의 유입은 필요합니다. 우선 종자산업의 인식개선이 필요한데요. 육종가라는 직업이 단순히 흙을 파고 농사짓는다는 개념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직업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많지 않고 임금 자체는 높지는 않으나 한번 시작하면 정년을 넘기고도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이므로 사교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파견, 인턴 등의 제도로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높

이는 방안도 요구됩니다.

해당 정책에 보강해야 할 점을 비롯해 종자 R&D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짧은 역사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및 로열티 대응 사업단 등의 R&D를 추진해왔는데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종자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존 연구개발 사업을 연계한 ‘포스트 GSP 사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이끌어갈 종자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도 동반돼야겠지요.

이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종자의 80% 수준을 해외에서 채종하고 있으며, 종자 가공처리 시설이 미비한 대다수의 종자기업은 부가 가치를 높이는 가공처리 없이 저가로 종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임 종자산업의 특성상 종자 개발은 전적으로 R&D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 배추 등의 채소 육종기술이 세계 최고인 한국의 경우 우장춘 박사의 노력과 그 이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졌고, 정부에서도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포함해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투자 및 글

로벌 기업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글로벌 기업인 몬산토(Monsanto)의 경우 2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1년간 매출이 158억 달러이고, R&D 투자비용이 약 17억 달러로써 한국의 농업 R&D 전체보다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기술기반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 SOC, 즉 농업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작물에 대한 전방위 투자보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작물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기타 작물의 지원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8~’22)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종자산업 육성전략 보완을 위해 꼭 추가돼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임 종자산업이 단기 사업이 아닌 만큼 장기 계획으로 끌고 갔으면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골든시드도 10년 계획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품종 개발은 몇 세대를 걸쳐 이어지고 또 개발된 품종은 20년, 30년 반세기 이상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실화하기 위한 지속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수박 수출 지연



수입국 정책 변화로 인한 수출 지연

- 수박의 주요 수출 목표지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종자 수입금지 (한국 및 일본산 박과 종자 직수입 금지), 검역 강화 등 정책적 변화에 대한 대책 필요
- 태국 등 주변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 해당 국가 업체 지불 비용이 추가되어 비용적 손실 등 애로사항 발생

해결방안

개발된 품종의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전문 업체 연계 및 대기업 수출기반을 공동 활용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 모색

사례 2. 무 수출 물량 미확보



채종량 감소에 따른 수출 물량 미확보

- 무의 재배 특성상 수확 시기와 장마 시기가 일부 겹쳐 품질 저하 우려 발생 및 작물 특성상 탈종(꼬투리가 단단해 종자 채종이 어려움) 단계에서 종자 손실이 많아 채종량 감소가 발생

해결방안

GSP 2단계를 통한 안정적 채종지 확보 및 채종 기술 개발



종자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종자산업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 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추진을 통해 종자산업을 활성화하고 종자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

타임라인

- **'13.6.**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개정시행
- **'13.7.**
골든시드프로젝트(GSP) 1단계 ('13~'16)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시작
- **'13.10.**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13~'16) 계획 수립
- **'13.11.**
방사선육종연구센터 건립
- **'14.10.**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지정
- **'14.11.**
육묘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15.6.**
우수종자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농기평 GSP센터 - 원예원 - 이마트 MOU 체결
- **'15.10.**
김제자영고 종자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
- **'16.10.**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 및 기업입주
- **'16.11.**
2016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개최
- **'16.12.**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 ('17~'21) 종합계획 수립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종자산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농업부문 신성장산업으로 재인식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 정책 수립·추진
- ✓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자산업을 수출 중심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역량 강화, 산업기반 구축 등 지원



1) 병저항성 및 양적형질 연관 분자마커개발 2) 원예작물의 유전체 활용 및 육종소재 발굴 시스템 구축

📁 애로사항

1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자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신품종 개발은 10~20년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나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가 어려운 상황
- 해외의존도가 높은 과수·화훼 작물 및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의 국산화 요구 증대
- 육종기반, 기술성, 시장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이 필요한 품목 선정(선택과 집중) 필요

2 신품종 개발 종자의 산업화 촉진 필요

- 국내의 전통적 교배육종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분자육종 등 생명공학기술과의 접목이 요구
- 유전자원 활용부터 종자전문인력 양성, 종자생산·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산업화 촉진 사업 요구
- 민간기업의 통합 마케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필요

3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필요

- 국내 농업생산량 축소로 인한 종자수요 감소로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세계시장의 1% 수준에서 정체
-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및 현지화 전략지원 강화 필요
- 2단계 GSP는 종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과 시장중심으로 프로젝트 추진 요구



향후 보완과제

1 수출·수입 대체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및 시장 중심으로 프로젝트 구성

- ⇒ 종자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주체인 종자 기업을 중심으로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마케팅·유통·판매까지 전주기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구성

2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유통채널 확대

- ⇒ (상품화 기술 개발) 종자 생산(채종) 및 가공 처리(원예), 장거리 수송 기법(수산) 등 상품화 기술 개발에 주력
- ⇒ (해외 유통채널 발굴) GSP 운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 선호도 및 해외 마케팅 공동조사, 국제박람회 참가 등 지원
- ⇒ (국내·외 유통망 확보) 국내·외 유통망 보유 경쟁력 있는 업체(식품 및 농산물 유통업체 등)와의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
- ⇒ (협력 체계 유도) 사업 참여기업 간 공동판매 법인 구성을 통해 통합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유도

3 개발 품종의 국내·외 소비자 점점 홍보 강화확대

- ⇒ (해외) 시험·전시포 설치를 아시아권 중심에서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설치 개소 수(지역 수)확대
- ⇒ (국내) 국내 보급 촉진과 홍보를 위한 전시포, 품평회 및 계약재배 확대

4 세부 추진계획

- ⇒ (GSP 2단계 1년 차 사업 추진, '17.1~'12월) 5개 사업단, 89개 프로젝트(177개 세부 프로젝트) 연구 추진
- ⇒ (GSP 1단계 최종평가 추진, '17.2~3월) GSP 1단계('13~'16) 종합결과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 추진
- ⇒ (GSP 2단계 1년 차 연차 평가, '17.12월) 2단계 1년 차('17)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최종평가, 연차평가)를 2단계 2년 차('18) 연구개발비 조정자료로 사용

<골든시드프로젝트 연구 2단계 추진('17~'21)>

- 1단계('13~'16) 연구를 기반으로 목표 품종 개발 및 수출·수입 대체 확대 등 산업화에 주력
- 종자 수출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시·홍보,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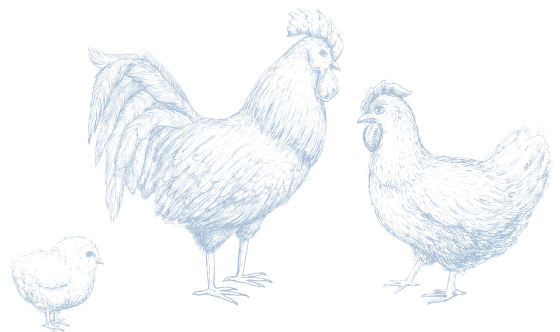
* 1단계 추진성과 및 종자산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 및 품목별 목표, 추진전략,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계획 조정

II. 직접 듣는 정책 34선

2. 농가소득안정

가벼워진 어깨, 잘사는 농촌

- 12. 농업의 6차산업화
- 13. 농촌관광 활성화
- 14.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 15.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규제 완화
- 16. 쌀·밭 직불제 확충
- 17.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 18. 부정청탁금지법 대응
- 19.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 소득제고를 넘어 활력을 찾아주다!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됐다. 이에 농촌산업과 김철 과장과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오천호 대표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레저문화가 확산된 최근 흐름에 맞춰 농업의 가치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과 관광 등을 접목한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김철

농촌산업과 과장



정책관계자

오천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대표

해당 정책의 수립 과정과 주요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책입안자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이하 김) 6차산업화의 주요 추진 내용은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2차, 3차 산업과 연계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생산, 컨설팅, 자금 및 판로 등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6차산업 경영체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내 경영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로 특화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농촌 현장에서 느끼는 6차산업의 인지도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청년 농창업자로서 6차산업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책관계자 오천호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대표(이하 오) 6차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6차산업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사는 결혼 이주여성도, 워킹 맘도 가정에서 쉽게 이유식을 만들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하고 육아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식 카페를 만들어 6차산업을 실현했습니다. 농촌현장에서도 6차산업의 범위를 조금 더 다양하게 인식해 창조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농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합니다. 청년 농 창업자로서 가장 정책적 도움이 컸던 부분은 홍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돼 각종 언론보도와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산업 종사

자 및 창농, 창업인들을 위한 홍보 기회가 많이 있길 기대합니다.

6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6차산업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 6차산업 추진을 통한 현장성과 사례는 많 습니다. 당진의 백석울미영농조합법인은 평균연령이 77세의 할머니들이 모여 6차산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귀농인 김금순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활용해 매실한과를 만들어서 팔고, 한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억 원을 달성해 마을주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했지요.

오 농업의 6차산업화에 성공하면 분명 소득 제고와 농촌 활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막상 부딪히기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의 기간인 농지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땅의 가격은 시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데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의 대출이나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수반된다면 많은 젊은 농업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차산업체의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농촌공동체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직원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인력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마련된 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숙사를 마련하거나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통근 차량을 운영하는 등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마련되면 분명 농업·농촌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6차산업을 시작하는 경영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것에서 이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6차산업을 1차 생산, 2차 가공과정 공개, 3차 이윤식 만들기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소비패턴, 소비자의 마음을 읽은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SNS 등을 활용해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며 유통마케팅에 적용해야 합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지역 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우수 제

품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 필요합니다. 또한 6차형 안테나숍을 설치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 해야겠지요. 창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창업보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차산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단계적 발전 매뉴얼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지역 역량 배양, 네트워킹,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순의 발전단계로 6차산업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구별 전담 FD를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부문에 있어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육성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MICE 산업 연계, 지역단위 농촌관광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요구됩니다. 등급제도 등 체험마을 중심 제도를 개선해 치유·레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해야 하며 가칭 한국형 힐링스테이를 개발해 주한 외국인 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 우선 6차산업 제품에 대한 로컬 판매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지원해 6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지요. 특히 기존에 제품단위의 입점 지원에서 6차산업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마케팅 전략을 전환하고 6차산업 플래너와 상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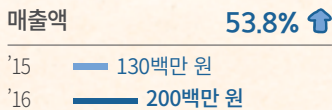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단계별 지역단위 발전체계를 구축해 6차산업화 지구를 조성하고 조직화 정도, 품목 인지도, 가공·유통·관광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발전단계를 구분해 단계별 육성 매뉴얼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된 육성 매뉴얼을 통해서 발전단계에 맞는 네트워크 조성 등 정책 사업에 연계하고 지자체나 농업인, 인증자 등을 대상으로 6차산업 정책, 우수사례, 조직화 교육 등을 실시해 6차산업화 추진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DMZ플러스, 대표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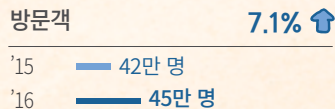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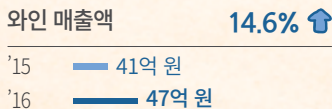
부친이 생산한 친환경사과를 활용한 디톡스 주스 제조. '14년 창업하여 배짱이 체험학교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등 6차산업 추진
'16.5월 '이달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되어 창조적 창업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자금지원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사례 2. 영동포도 와인지구



와인 제조업체 43개를 중심으로 민·관·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체험·외식·관광 등의 서비스를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타임라인

- '13.6.28
농업 6차산업 추진방안 마련
- '14.1.13
현장 중심형 6차산업화
중간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14.6.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7.28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6.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15.11.2
제1차 6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5.12.1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사례집 발간
- '16.5.9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17.2.20
6차산업 성과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17.3.2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2차·3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시제품생산, 컨설팅, 자금 및 판로 등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 지역 내 경영체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로 특화산업 육성



1) 6차산업 대표 이미지

주요성과

1 「농촌융복합산업법」 제정('14.6월), 6차산업지원센터(10개소)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69개소) 등 6차산업 육성 기반 조성

- 6차산업 인증, 6차산업화 지구, 인허가 의제제도 등 주요제도 도입 및 6차산업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2 맞춤형 지원으로 6차산업 창업 1,785개소, 인증사업자 1,130개소로 지속 증가하여 6차산업 창업 붐 조성 및 외연 확대

- 교육, 시제품 생산, 컨설팅, 자금, 판로확대 등을 통해 6차산업 경영체 안정적 창업·보육 지원

3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11.1% 증가하는 등 경영체별 성과를 고도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

- 안테나숍, 전용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6차산업 포털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성공사례 발굴·홍보

4 주산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공동인프라 구축, 경영체간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한 6차산업화 지구 조성(16개소)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 6차산업 주체(농업인, 경영체, 지자체 등)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향후 보완과제

1 6차산업 제품에 대한 로컬 판매체계 구축, 우수제품에 대한 수출 지원 등으로 6차산업 성장 견인

⇒ '제품단위 입점 지원 → 6차산업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마케팅 전략 전환

⇒ 6차산업 플래너 제도, 상시컨설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경영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단계별 지역단위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지구 조성(신규 3개소)

⇒ 조직화 정도, 품목 인지도, 가공·유통·관광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육성 매뉴얼 마련

⇒ 발전단계에 맞춰 네트워크, 지구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자체, 농업인, 인증자 등 대상 6차산업 정책, 우수사례, 조직화 교육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추진 역량 제고

3 MICE산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연수, 회의, 연찬회 등을 농촌관광지로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숙박거점 중심의 플랫폼 관광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 체험마을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농촌민박, 관광농원, 농기맛집, 교육농장 등)을 통한·육성하기 위해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도 개편

⇒ 체험, 음식, 경관, 교육, 치유, 레저 등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정책대상 확대



다양한 농촌관광콘텐츠로 농촌의 가치를 높이다

주5일제의 정착으로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촌산업과 우현경 사무관과 경기대 엄서호 교수는 도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는 등 농촌관광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입안자

우현경

농촌산업과 사무관



정책관계자

엄서호

경기대학교 교수

레저와 여가 문화의 발달로 농촌도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정책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책입안자 우현경 농촌산업과 사무관(이하 우) 일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농촌연계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용역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화권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홈페이지 개설 및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매력적인 농촌 관광상품 개발과 접근성, 편의성 제고로 농촌 관광객 2016년 농촌관광객 수 1천만 명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 대비 97.5% 증가한 16.4만 명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도 민간 협업을 비롯해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체험마을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으뜸촌 기차여행(20종) 등 코레일과 민간여행사가 함께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업농촌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촌관광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려면 편의와 안전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

우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등을 통해 농촌관광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 4월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과 체험, 특산물 구입 등이 가능한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

다. 또한 체험마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험마을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은 물론, 농촌민박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방문의 해나 여행주간 등 주요 관광 시기에 우수농촌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여행주간에는 할인행사와 함께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촌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등 농촌관광 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매달 계절별테마별 농촌관광 코스 10선, 농촌으로 떠나는 심여행 40선 등을 선정해 SNS(카카오토티, 구독자 49천명) 홍보 및 책자도 제작했습니다. '농촌관광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에서 농촌관광이 가진 경쟁력과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요.

정책관계자 엄서호 경기대학교 교수(이하 엄)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볼 때 이제는 보는 것뿐 아니라 오감을 통해 여행지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체험 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관광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자연과 문화, 농산물 수확을 체험하는 농촌관광도 기본적으로 농촌에 관광을 접목한 체험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목적형 관광수요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관광이라는 모자'를 쓰고 자기만의 독자적 영역을 체험상품으로 선보임으로써 관광수입 증대 또는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관광은 한국농촌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외국인에게

무엇보다 매력적인 관광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일원의 농촌마을 중 한국 대표 이미지와 연계될 수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김치마을, DMZ마을, 불고기마을, 고추장마을, 막걸리마을, 태권도마을 등을 지정한다면 쉽게 관광영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업 농촌에 체험관광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에 ‘관광이라는 모지’를 씌울 때 반드시 관광은 부업이고 농업이 주업인 아마추어 관광(부업관광)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관광모자 쓴 모습이 멋있게 보인다고 유니폼까지 관광으로 갈아입는 프로페셔널 관광 즉 전업 관광을 추구했다가는 십중팔구 경험 부족에 의한 사업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성공하더라도 외지인의 무분별한 투자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업 농촌관광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현재의 여건상 연간 1만 명 이상 오는 마을들을 위주로 정책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지역 관광 중 도시 관광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 매력이 큰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주한옥마을을 불과 몇 키로만 벗어나도 농촌 지

역이고 인근 완주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다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한옥마을 방문객을 농촌마을로 유치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촌관광 정책 기조는 농촌을 목적지로 방문하도록 하는 목적형 농촌관광 진흥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이와 더불어 농촌을 경유지로 방문하도록 하는 경유형 농촌관광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의 마을을 유명관광지 방문객이 경유할 수 있는 별동형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육성해 나간다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 농촌관광 활성화와 선진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외국인 방문객 유치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방문유형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단체관광 차원의 주한 외국인 단체(특히 외국인 학교 수학여행 등)와 중국과 동남아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관광은 국내거주 외국인과 개별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패키지 관광을 이용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유치 전략은 경유형으로 농촌관광을 체험케 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로 가장 이름난 곳은 영동고속도로 축상에 위치한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입니다. 의야지 바람마을은 설악산과 동해안을 방문하고 서울로 귀가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눈썰매장을 시작해 현재는 연간 8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4계절형 체험마을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유치

하기 위한 전략은 단체 관광객 유치와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은 대체로 규모는 작고 주로 미주와 구주, 일본인 관광객 등이 주가 되고 있지만, 점차 중국인 관광객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치전략은 첫째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인접 농촌마을이 돼야 하며 둘째, 이미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노드(node)를 유인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던 김치마을, DMZ마을 등이 그 예입니다.

끝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 유사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과 교통·통역 서비스 등 농촌관광의 인프라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중화권 현지 설명회 개최, 주한 외국인 대상 팸투어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부가 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MICE 산업과 연계해 회의 등을 농촌 관광지로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의 제도를 개편해 치유와 레저,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고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농촌관광이 단체 관광 중심으로 하되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가칭, ‘한국형 힐링스테이’ 등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무월마을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환경 개선, 농촌민박 공동 운영 등 마을주민이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코레일을 통해 죽녹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오흘촌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온라인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편의성 제고



사례 2. 강원 양양 해당마을

내설악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해외 여행업계 대상 현지 설명회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팸투어, 외국인 교통·통역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추진 해외 현지(홍콩) 여행사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단체여행상품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급증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국내외 농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보급, 농촌관광객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시기별·테마별 전략적 홍보 등 추진

타임라인

- '13.6.14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계획 마련
- '13.6.28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14.1.15
한식정책발전방안
(음식관광 활성화 포함) 마련
- '15.7.1
메르스 발생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
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15.7.7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 '15.7.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개최
- '16.3.25
중국 현지 여행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16.7.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개최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주5일제 정착 및 여가·삶의 질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따른 관광산업 확대에 맞춰, 도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농촌으로 유치
- ✓ 관광콘텐츠 개발, 접근성·편의성 향상 등 농촌관광 서비스 수준 제고
- ✓ 중화권 현지 설명회,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유학생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추진



1) 농산촌관광 활성화_양평 수미 체험마을 2) 전북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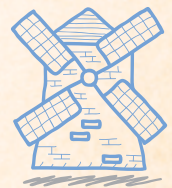
📁 주요성과

- 1 매력적인 농촌관광상품 개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농촌관광객 1천만 명 달성(전년대비 15.1% 증)**
- 농촌관광객(전체/외국인): ('15) 870만 명/8.3 → ('16) 1,001/16.4
- 2 민간 협업,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한 특색있는 농촌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농업·농촌 직업체험프로그램 10종, 초등학교 대상 농사 전과정 체험 프로그램 5종, 외국인 관광객 전용 체험프로그램 5종
- 3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등을 통한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
- 예약결제시스템: 네이버(농촌여행상품 및 우수농가민박상품 415종), 에어비앤비(우수농가민박 155개소) / 등급평가 확대: ('15) 350개소 → ('16) 450
- 4 한국방문의 해, 여행주간 등 연계 홍보 및 우수농촌관광자원에 대한 적기 정보 제공**
- 봄·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농촌체험관광지 20% 할인행사 및 농촌여행 특별 전세열차 등 이벤트 추진, 보도자료 배포
- 5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유학생 활용 SNS 홍보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외국인 단체 농촌여행상품 17종 공모·운영, 주한 외국인유학생 활용 농촌관광 서포터즈 운영, 농촌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웨이보 등 홍보 SNS 운영



향후 보완과제

- ① MICE 산업연계,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관광 부가가치 제고**
⇒ 공공기관·기업 등의 연·회·연찬회의를 농촌관광지로 유치, 지역단위 농촌관광 및 플랫폼 관광 활성화 등으로 부가가치 제고
- ② 예약결제 시스템, 웰촌포털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접근성·편의성 제고**
⇒ 민간여행사 연계 여행상품, 체험프로그램 등 예약결제 상품 다양화, 웰촌포털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정보제공 강화, 농촌관광 등급평가 대상을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하고 등급평가 개편방안 마련
- ③ 주한 대사관·외신기자·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서포터즈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 대사관·외신기자단 등 파급력 높은 주한 외국인 대상 팸투어 개최, 농촌관광 서포터즈(주한 외국인 유학생 중 선발) 등 활용
- ④ 농촌관광 수요창출을 위해 여행주간 및 여름휴가철 등을 활용하여 타겟별 홍보 실시**
⇒ 한국관광공사·네이버 등과 협력하여 시기별·테마별 다양한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홍보, 소비자 농촌관광행태 분석 추진 등



농업재해보험으로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실현합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위해 2001년부터 보장성을 높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에 재해보험정책과 분석호 과장과 대진대 글로벌경제학과 최경환 초빙교수가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고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정책입안자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최경환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

농업인들에게 '재해'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농업재해보험이 가진 의미도 큼데요. 우리나라에 농업재해보험이 있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고, 현재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최경환 대진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초빙교수(이하 최) 우리나라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1975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신)에서 '농작물보험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농업보험에 관한 연구의 효시입니다. 이후 1980년부터 10여 년간 수도작(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1991년 중단됐습니다. 이는 1980년도 냉해 피해 이후 벼농사에 대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재해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고,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데 뜬금없이 무슨 보험이냐는 농민들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상황은 1990년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1999년 태풍 '올가' 피해를 겪고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준비를 서두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농민들의 보험 수요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예산 작업을 최종 정리하는 당정협의회(2000년 8월 말)에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됐고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으나, 피해농가들이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폐농(廢農) 하지 않고 다음 해 농사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성과를 요약한다면 우선, 지난 16년 동안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정부의 탓으로 돌리던 농민들이 실질적인 손실 복구를 위해서는 본인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 시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농업재해보험 정책이 있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정책을 통해 실제로 도출받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정책입안자 문석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장(이하 문) 농업 현장에 적합한 상품개발을 위해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매년 모의 손해평가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실제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복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산청군 일대에 예기치 못한 강풍이 불어 21개 농가의 원예시설에서 파이프가 휘어지고 비닐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농가 중 18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 병충해에 대한 보장 등 보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마련된 손해평가사의 활용성을 제고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몰제 또는 지역 특정 상품 도입을 시도해보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품목별로 재해 유형, 농가 특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농민들이 선호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 이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 개선사항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손해평가가 중요하지만, 특히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이라는 생물을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입(보장) 보험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이 재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예방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정책 마련에 참고할만한 해외 선례가 있다면 무엇이고, 해외 농업재해보험과 비교했을 때 우리 농업재해보험의 장단점 및 개선점을 말씀해주세요.

최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장 많이 참고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및 스페인 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유형은 크게 수확량 보험, 수입보험, 지수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작물, 축산(낙농), 수산양식, 양봉 등의 분야에서 130여 개의 품목이 농작물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농업보험 가입률은 품목과 보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5년도의 경우 식부면적의 90% 정도가 다양한 농업보험에 가입되어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4년 농업법(2014 Farm Bill)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직접지불제를 폐지하는 등 농업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농업보험만은 강화해 중요한 농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도된 것은 미국과 비슷한 1939년부터이지만 오

늘날과 같이 체계화된 것은 1947년부터입니다. 농작물(벼)과 밭작물, 가축, 과수 및 원예 시설 부문에 대한 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률은 의무보험인 벼와 가축보험이 90% 이상인 반면, 과수 등 분야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수입보험 도입을 위해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등의 제도 정비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수입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농업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재해보험의 장점은 단기간에 다수 품목으로 보험을 확대했으며 외형적으로 70~80년의 경험을 가진 미국과 일본 못잖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수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영농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자신에게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농업재해보험

전남 영암군, 정00 | 딸은감 1,500㎡를 경작하는 농가로 3,999만 원의 총 보험료 중 696만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2,583만 원의 보험금 수령하여 경영복구에 큰 도움**

충남 부여군, 정00 | 시설작물(꽃고추) 3,420㎡를 경작하는 농가로 865만 원의 총 보험료 중 151만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호우로 인해 시설작물의 침수피해로 2,319만 원의 보험금 수령**

사례 2. 가축재해보험

충남 홍성군, 이00 | 돼지 1,5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1,394만 원의 총 보험료 중 549만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16년 여름 폭염특보기간 동안 돼지 85두가 폐사하여 1,737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영복구에 큰 도움**

경기 안성시, 신00 | 축사 6개동에서 돼지 2,000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2,321만 원의 총 보험료 중 893만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원인미상의 화재로 축사 1개동이 전소되고 돼지 1,247두의 피해를 입어 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영복구에 큰 도움**





농업재해보험 내실화에 대하여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

타임라인

- '13.5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 발표
- '13.5
농어업재해보험협회 통계
생산·관리 관리자로 위탁
- '13.10
'17년까지 도입품목 일괄 선정·공표
- '13.11
배 적과전 종합위험상품 시범사업 실시
- '14.2
「2013 농업재해보험연감」 발간
- '14.5
농업재해보험 내실화 방안 발표
- '14.10
「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발간
- '15.1
재해보험팀에서
재해보험정책과로 확대 개편
- '15.1
재해보험 전담기관 마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15.6
손해평가사 제도 실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14.6)
- '15.10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발간
- '16.11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발간
- '17.2
사례로 보는 농업재해보험 책자 발간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
- ☑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지자체 30% 내외 지원하여 농가부담은 20% 내외)



📁 주요성과

1

농업재해보험의 규모 성장

- 대상품목 : ('01) 5(농작물2 + 가축3) → ('13) 56(40+16) → ('15) 62(46+16) → ('16) 66(50+16) → ('17) 69(53+16)
- 가입금액(억 원) : ('01) 4,999(924+4,075) → ('15) 89,891(52,023+37,868) → ('16) 179,501(90,915+88,586)

2

농업인 등 지역현장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으로 재해보험사업 내실화

- 손해율에 따른 할인을 확대($\Delta 25\% \rightarrow \Delta 30\%$)하고 할증을 축소($40\% \rightarrow 30\%$)
- 저자기부담비율(10~15%)상품을 확대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다양화

3

공정한 손해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손해평가사 제도 실시

- 2016년 1회, 2회 시험을 시행하여 497명(1회 167명, 2회 430명) 확보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4

지난 4년간('13~'16) 재해를 입은 67천(농작물 45천, 가축22천)농가에

6,995억 원(농작물 3,514억, 가축 3,481억)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농가의 경영안정 기여

- 16년간('01~'16) 35만(농작물 18만, 가축 17만)여 농가에게 2조 1천 1백억 원(농작물 1조 3600억, 가축 7500억)의 보험금 지급



보완과제 및 계획

1

'18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품목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확정하여 대상품목 확대

- ⇒ 지자체·현장농업인·보험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8년~'20년간 도입할 10개 품목을 결정,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많은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

국가재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재해보험기금 안정화

- ⇒ 일정손해를 초과시 국가가 책임지는 초과손해를 방식에서 국가와 민간이 손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전환 추진
* ('17) 손익분담방식 30% → ('18) 손익분담방식 50% → ('19) 손익분담방식 100%

3

농업인 등 지역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 개선 지속 추진

- ⇒ 폭염에 의한 과수의 일소피해 보장상품 개발 및 판매
- ⇒ 감귤 종합위험상품을 개발하고 부피과·부패과 등 과실피해 보장 추가
- ⇒ 젖소 가입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

4

손해평가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손해평가사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실시

- ⇒ 손해평가인력 의무교육을 3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
- ⇒ 손해평가사 업무영역을 가축(소) 손해평가까지 확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로 농업·농촌 경제활력 창출에 기여하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이후 약 10년 만에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구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농지와 이수열 과장과 명지대 송재일 교수는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우리 농업도 1차와 2차, 3차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이자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이수열

농지와 과장



정책관계자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농업의 6차산업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구제에 대해 정비,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해당 정책 또한 그러한 배경 아래 진행됐는데요. 구체적인 정책 수립 과정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이수열 농지와 과장(이하 이) 시범조사와 규제분석,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우선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규제개혁 신문고와 지자체에 신고된 각종 건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국 148개 시군의 1,032천 헥타르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와 지자체 시범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조정협의회와 국장간담회를 개최해 부내 의견을 수렴했고요. 농지 포럼을 열어 농업진흥지역 관리방안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방안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2월 11일 마련됐습니다.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전의 상황은 어땠으며, 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관계자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하 송)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나 농업구조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법률임에도 법 준수가 안 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법으로 오해를 샀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그 입법 취지와 달리 잘못 이용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해와 억측,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농지 분야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 농업진흥지역 관련 정부의 진단과 정책은 비교적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이나 농지는 농업에서 중요한 생산기반이자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국토 공간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제 농업이 잘 됐지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농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동안은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농업은 전통과 미래, 1차, 2차, 3차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이자 미래 첨단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형 농업진흥지역으로 새롭게 디자인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정책 중 농지보전 측면과 농지구제 완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송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에 대해 필지별 보전(절대농지, 상대농지)에서 구역별 보전(농업진흥지역)으로 법 정책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지는 주로 필지별로 정책이나 거래가 이뤄져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역별 보전방식은 헌법 제 121조나 제123조가 생각하는 농업구조개선에 맞는 선진국형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구역별로 디자인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행 농업을 하는 구역과 유기농업을 하는 구역으로 나눠 보전과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하는 지역에 화학농약이 날아들어 오면 유기농 인증에서 탈락되고 유기농업을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축산업도 공장식과 친환경 경축산을 구별해야 농업구조개선에 맞는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농지의 보전과 개발이 진행돼야 하는데 유감스럽



게도 농지면 다 농지라는 식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마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 농지는 한번 손상되면 농업 용도로 돌리기 힘들다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따라서 우량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전돼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용도로 보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은 구체적인 작목이나 경작 형태까지 디자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포도 과수원이 있고 와이너리가 있는 지역은 포도의 종류까지 세심하게 감안해 함부로 다른 포도를 심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6차산업을 하는 지역은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면서 관행 농업지역과 거리를 뒀 농촌관광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러한 규제는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라 할 수 있지요. 우리도 이처럼 우량농지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다시 짜야하고 그 관리도 세심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즉, 우량농지는 거기에 사는 농업

인이나 농촌마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농업 진흥을 위해 해당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우대방안을 강구해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를 구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각종 직불금 차등 지급을 확대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개발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밖 전용허가 제한면적 조정, 영농여건 불리농지 활성화 대책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행위제한 완화 추진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우량농지 보전 강화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 계획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송 농업진흥지역이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구역 방식(Zoning System)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농업으로 그 지역을 진흥할 것인지 그 농지의 특성과 작목, 과거의 영농형태를 살펴보고 만들어야지 그냥 경지정리가 돼 있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에 대한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농업진흥지역은 해당 농지의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마을계획과 연계돼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요.

농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본 산업이자 미래 첨단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관련 정책이 잘 만들어진 법 제도로 귀결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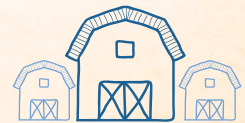
현장사례

사례 1.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국토부 협업)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중 약 58ha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활용
2개소 지정('16.12.30, 국토부) : 화성 능동 10.2ha, 김해 진례 47.3ha

사례 2.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휴양체험마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귀농인 A씨 소유의 농지는 경지정리 되지 않은 논으로 과거부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체험·휴양시설, 간이음식점, 체험자 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 불가로 사업계획을 중도에 포기
'16.6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현재,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간이음식점 등 시설을 설계 중이고, 향후 농업 6차산업화 선도농가 모델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며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예상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규제 완화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농지규제 완화

농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10여 년만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

타임라인

'14.4 - 5

농업진흥지역 시범조사
(9개 시·군 대상) 실시

'14.1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완료

'15.1 - 7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실시

'15.12

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16.1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근거 마련(농지법 시행령 개정)

'16.4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검증 완료 및
보완정비요령 시달

'16.6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완료
(85천 ha)

'16.10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유형 발굴
및 시범조사

'16.11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계획 시달

'16.12

농업진흥지역 추가정비 지자체
조사 완료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농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식량안보 확충을 위해 우량농지 밀집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을 최대한 보전
- 고령화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고 농업·농촌 경제 활력 창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

☑ '16년 경제정책방향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 방안을 포함하여 발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15.12.16)

-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



주요성과

- 1 농업진흥지역 정비** '15년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에 따라 '16.6월 말 농업진흥지역 85천ha(해제 57, 변경 28) 정비,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17.3월 말 농업진흥지역 14천ha(해제 8, 변경 4) 추가정비 완료
- (대상)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한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
- 2 농지규제 완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농수산물 판매장 등 허용행위 확대
- (농업보호구역) 6차산업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기자재 제조·수리·판매시설 등 설치 허용
- 3 농업진흥지역 편익 분석**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
- 자가 상승된 농지의 매각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직접적인 편익은 매년 2,569억 원, 농지의 6차산업 활용도 증가에 따른 소득창출 등 피규제자의 직접 편익은 매년 380억 원 발생 예상
*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규제 완화의 편익을 분석('16.12월, KREI)



향후 보완과제

1 농업진흥지역 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후 지속 정비할 필요

⇒ 진흥지역 지정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건의·반복 집중 민원 등을 감안하여 정비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2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각종 농지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농지규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조정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농업 생산성이 낮아 소유·임대 및 전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농지를 말하며, '10년 11만ha 지정('15년 기준 전체 농지의 6.5%) 후 그 면적 증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농지전용에 관한 수요를 동 지역으로 유도하는데 미흡

3 고령화·양극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촉진 등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소득구조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직불제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

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과잉생산 등의 왜곡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원일 단장과 순천대 박성재 교수는 농업의 직불제가 우리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장



정책관계자

박성재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직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정책 실행 이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박성재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이하 박)** 우리나라 최초의 직불제는 1997년에 도입한 경영이양직불제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2001년의 논농업직불제와 2002년의 소득보전직불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직불제가 시작되는 2000년대 초는 IMF 관리체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측면에서 보면 수입개방과 경제위기로 1996년 이후 농업소득은 늘어나지 않았고 부채는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이나 EU에서는 1995년부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지해주는 직접지불제도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가 비중이 2% 이내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대가 넘었고 국가 재정 능력도 충분치 않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최초의 직불제가 시도됐던 1997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불제 확대로 성과도 늘어났으리라 짐작됩니다.

정책입안자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장(이하 김) 네. 직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조 8,813억 원의 쌀 변동 직불금을 지원해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산이나 구조개선 촉진 등에도 일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쌀 수급불안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금을 헥타르 당 211만 원으로 지급해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

근 쌀 고정 직불금 단가를 2012년 헥타르 당 70만 원에서 2015년에는 1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쌀 고정 직불의 경우 2014년까지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헥타르 당 4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16년에는 모든 작물에 대해 40만 원을 지급했고 2017년에는 지급단가를 45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농업은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기능까지 고려해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생산 활동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농업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익적 기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농약이나 비료 등의 과다한 투입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농업이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직불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농정 수단으로서의 직불제가 지속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지요.

박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농업소득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활력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농업 부문의 자원이 2차 산업으로 또는 도시부문으로 이전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산업구조조정을 겪게 됩니다. 이를 일찍이 경험

한 선진국의 경우는 산업구조조정 단계에서 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농업을 보호해 왔고 산업구조조정을 끝내자, 농산물 무역 자유화 카드를 꺼내 WTO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직불제를 시행해 개방에 불안을 느낀 농업부문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조정을 다 끝내지 못한 것은 물론, 재정이 열악해 가격지지정책도 충분히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방해 이종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동농격차의 확대와 농업 내부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개선하고자 농림투용자의 대폭적인 확대 정책이 20여 년 동안 진행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통해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불제는 이러한 정책전환과 농가 소득 불안정을 치유하는 정책 대안으로 확대해왔지만 아직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답변에서 직불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박 직불제는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3년부터 부족분제도라고해서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하락

할 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잉생산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고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EU는 1992년 가격지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직불제로 바꾸고 이를 보상직불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지지 보상으로서의 직불은 낮추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의 의미는 강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쌀 관세화를 앞두고 1998년 쌀값 보전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대두, 소맥 등 5개 작물도 직불제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생산조정을 조건으로 쌀 농가에 대해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과잉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쌀 이외의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정부의 지원이 시장수급의 왜곡을 불러와 과잉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생산조정제, 생산과 비연계, 수입보장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고안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농산물의 가격 또는 수입변동의 피해로 농가경제가 위험에 처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농가경제 안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제도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과잉생산 등 부정적인 영향

은 사회적 비용으로서 반드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겠습니다.

직불제가 확대하려면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불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직불제를 통합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쌀 직불제의 생산 연계성을 완화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수급농가의 상호조수의 무와 이행점검 강화로 직불제의 국민적 신뢰성과 공감대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벼 수입보장보험 등 보다 시장 지향적인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직불제가 공급초과 현상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가간의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직불금의 수령액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도 농촌의 위화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가 산업정책의 수단이고 규모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커질수록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는 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단가를 높이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추는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전남 부안군, 정OO



직불금

'12	894천 원(쌀 고정 840, 밭 품목 54)
'14	1,929천 원(쌀 고정 1,080, 변동 319, 논 이모작 475, 밭 품목 55)
'16	4,381천 원(쌀 고정1,200, 변동 2,532, 논 이모작 594, 밭고정 55)

농지 2.6ha(논 1.2ha(논이모작 1.2), 밭 1.4)를 경작하는 농가로 '12년 89만 원 수준이던 직불금을 '14년에는 약 190만 원을 받음. '16년에는 약 438만 원을 받음

사례 2. 전남 장흥군, 김OO



직불금

'12	3,946천 원(쌀 고정 3,780, 밭 품목 166)
'14	7,895천 원(쌀 고정 4,536, 변동 1,864, 논 이모작 1,255, 밭 품목 240)
'16	21,978천 원(쌀 고정5,400, 변동 14,773, 논 이모작 1,565, 밭 품목 240)

농지 6ha(논 5.4(논이모작 3.1), 밭 0.6)를 경작하는 농가로 '12년에 390만 원 수준이던 직불금이 '14년에는 789만 원을 받아 '12년 대비 100% 증가. '16년에는 2,198만 원까지 높아져 직불금 단가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경영안정에 큰 도움



직불제 확충에 대하여

직불제 확충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직불제를 시행

타임라인

'13.5.16

밭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7품목 추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14.1

농어촌특별세법 개정하여 농특세 유효기간 연장 '24.6월까지

'14.3.18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정, 시행규칙 개정

'14.3.18 - '14.12.30

밭농업직불금 수혜대상 확대

'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체 밭작물에 대한 고정직불금 도입

'14

동계 논에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 시 밭 직불금 지급 신설

'15.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15.6.5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착수

'15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6.1~

FTA로 국내 영향이 큰 42개 품목 상시 모니터링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시장 개방 확대 등 농가 소득 불안정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단가 조기인상 및 신규농 대상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농가 이전소득 확충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한·중 등 FTA 타결에 따른 보완 대책



주요성과

- 1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조기 인상('12 : 70만 원/ha → '15 : 100만 원/ha)**
- '13년부터 매년 10만 원씩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15년에 100만 원으로 인상, '17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목표보다 2년 조기 달성
- 2 쌀 직불금의 지목과 품목 제한을 폐지**
- 26개 품목과 밭고정 직불제도를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수혜농가 및 지급면적 확대('14 : 326천 호/192ha → '15 : 546/362)
- 3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
- 밭고정직불금 : ('15) 25만 원/ha → ('16) 40만 원/ha
- 동계이모작 : ('14) 40만 원/ha → ('15) 50만 원/ha
- 조건불리(농지/초지) : ('16) 50만 원/ha, 25만 원/ha → ('17) 55만 원/ha, 30만 원/ha
- 4 귀농인 등 신규농의 조기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15)**
- (기존)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만㎡ 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 (변경) 1년 이상, 1천㎡, 120만 원



향후 보완과제

- 1 농업인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 과실로 부당 수령한 경우 적절한 처벌수준 신설
 - ▷ 신규농업법인 직불금 신청자격 완화
 - ▷ ICT 등 스마트 팜 맵·드론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 2 밭, 조건불리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17~'20)**
 - ▷ 밭 : 매년 5만 원/ha인상하여 '20년까지 60만 원/ha로 단계적 인상 추진
 - ▷ 조건불리 매년 5만 원/ha 인상, '20년까지 농지/초지 70/45 단계적 인상
- 3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
 -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다수 직불제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농업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 ▷ 이를 위해 직불제 포럼을 구성·운영하고('16.3~) 개편방향에 대한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도 만전



방역체계 개선으로 AI·구제역 없는 청정 축산국가 도약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정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과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은 질병의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국대 이중복 수의과대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입안자

최명철

축산정책과 과장



정책입안자

오순민

방역총괄과 과장



정책관계자

이중복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은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시행돼야 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책 수립 과정 및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오순민 방역총괄과 과장(이하 최/오)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경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실시하고, 이어 5월에는 생산자단체 토론회 및 관계기관 검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6월에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회 등과 협의했으며 7월에는 2차 가축방역협의회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8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9일에는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해 단계별 '중장기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체계 개선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최/오 우선 살처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발생 농가 500m 이내 농가들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됐는데요. 이제는 개별상황을 반영한 선택적 살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용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게 됐죠. 또한 소득초소 운영방식 개선으로 차량 소득 역할을 집중해 방역을 효율화하고 방역비용을 절감했습니다. AI를 퍼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철새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금농가의 철새 방역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예방 위주의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요. 안정적 구제역 백신 공급을 위해 수입 다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구제역 당시, 개선된 방역대책 추진으로 과거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조기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안정적 구제역 백신을 위해 수입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수입만큼 국산 백신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혹은 지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책관계자 이중복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이하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는 고위험군 병원체로 관리, 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병원체입니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BL3 등급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구제역백신공장 설립을 위한 설계도 제작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8년 동안 국내 발생 구제역바이러스를 이용한 구제역백신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키메라 기술을 이용한 구제역백신 개발 원천 기초 기술을 확보해 구제역 백신 연구의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구제역 백신 항원의 대량생산 기술은 초기 단계이며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연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량생산을 위한 외국 기술을 접목해 구제역백신 생산을 조속히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농장 단위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네요. 농장의 의식을 개혁하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필

요할까요.

이 차단방역은 질병의 방역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고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백신의 효능이 좋고, 접촉을 올바르게 했더라도 원인의 유입 자체를 막지 못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차단방역의 기본 개념은 동물을 기르는 장소와 그 외 장소를 구분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축사의 외부와 내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각 농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역 정책은 방역활동이 미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중심입니다. 이러한 상벌 규정은 백신 검증 논란이나 소독제 효능 논란 등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비점이 있을 때 문책하기보다는 방역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농장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상에는 농가 지원금 추가 지급이나 상금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차단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농장이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구제역 방역 참여 농장으로 지정하고 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인증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여러 농장이 적극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인력 부족 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거 시와 구제역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예찰로서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는 최초 발생 농가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교통을 통제해야 하며 신속하게 감염축을 살처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찰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해야 하지요. 이러한 활동에는 많은 숙련 전문가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계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상시 운영에도 제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예찰 활동과 초기 방역 조치를 담당할 부서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의 운영을 위해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합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구제역 발생 사례를 보면 초기에 강력한 이동제한과 감염축의 신속한 살처분 덕분에 신속하게 질병이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됐고 두 가지 바이러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돼 예찰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17.4.13일에 발표한 시·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최/오 시와 구제역의 연례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및 농가 중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장 발생 시 신속·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종식시키는데 대책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겨울철 농장에서 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시 발생 즉시, 미리 준비된 시군 살처분 인력, 방역기동대, 軍 재난구조부대 투입을 통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밀집지역 재편과 위험지역 축산업 허가 제한, 신상필벌 대폭 강화로 책임방역 의식 제고, 해외 철새와 시 정보의 신속한 수집·전파 시스템 구축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가금류 축종별 맞춤형 시 예방 대책도 추진합니다. 오리와 토종닭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 유도, 취약시설 사육제한,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와 산닭 유통을 금지하고, 산란계의 경우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상향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전국 이동제한 조기 해제

(발생현황) '16.1.11일부터 1.13일까지 전북 김제, 고창에서, 2.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남지역 공주, 천안 등 4개 시군에서 구제역 21건 발생 (평가) '15년 마련한 '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른 특별방역조치*로 구제역 확산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발생지역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충남지역 돼지 전농가 일제검사(민관합동), 긴급백신접종 등

사례 2. 백신 수입 다변화

(상황) 1개의 외국 백신제조회사(메리알사)에서만 백신을 공급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원활한 백신공급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한 방역 취약점 발생 우려 (결과) 신규 제조사 발굴, 효능검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규 해외백신(2종)을 국내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수입 다변화 추진('16.9월부터)

* (기존) 메리알(프랑스)사 단독 → (추가) 아리아(러시아), 바이오제네시스(아르헨티나)

사례 3. 전파 차단

(추진내용) 질병 및 방역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GPS, 무선통신 등 ICT 기반의 KAHIS 고도화를 통해 가축방역에 활용하여 초동대응 효과 제고 (평가) ICT 기반의 KAHIS 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후, 차단방역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초동대응 시간을 1/5로 단축*

* 역학관련 차량 및 시설 이동제한 소요 : (개선 전) 20시간 → (개선 후) 4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에 대하여

AI·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AI·구제역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농가 중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농장 발생 시 신속·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조기 종식 추진

타임라인

- '14.1.16 - 7.29
AI 29건 발생
- '14.5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및 BSE 청정국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 '14.7.23 - 8.6
구제역 3건 발생
- '14.8.14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 '14.9.24 - '15.6.10
AI 9건 발생
- '14.12.3 - '15.4.28
구제역 185건 발생
- '15.7.21
구제역·AI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
- '16.1.11-3.29
구제역 21건 발생
- '16.3.23 - 4.5
AI 2건
- '16.8
중장기 구제역·AI 방역대책 마련
- '16.11.16 - 현재
AI 383건
- '17.2.5 - 현재
구제역 9건
- '17.4.13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마련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세계적으로 가축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질병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 '10~'11년간 우리 나라에도 구제역 발생시 과도한 살처분에 따른 물의 야기, 산업적·사회적·재정적 피해 발생
- ✔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14~'15년 / '16~'17년간 구제역과 AI가 재발생하였는데, 당연한 질병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필요
- ✔ 그간 약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방역개선대책을 마련



📁 주요성과

1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등으로 농가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전('10~'11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

- 그간 개선된 구제역 방역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살처분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
-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발생지역 타시도 반출금지, 긴급백신접종 및 일제검사, 가축시장 폐쇄, GPS 등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축이동 추적감시 등
- ** 살처분 두수 : ('10~'11년) 348만 두 → ('14~'15) 17만 두 → ('16) 3만 두 → ('17) 1,392두

2 AI는 '16.11.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가축질병 위기관리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16.12.16)하여 대응 중

- 일일 점검회의(장관님 주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농식품·보건·환경·재난부서 합동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
- (인력 지원) 시·군 요청 즉시 군병력·장비 지원체계 구축
- (살처분) 기존 살처분 물량은 조기에 처리하고 추가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원칙으로 추진

📋 주요 개선내용

1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2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도 요청시)

⇒ 시·군별 살처분 인력 동원계획 사전 수립
⇒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별도 편성

3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

4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 한시적 보조 지원: ('18) 국고보조 30%(시범사업 2개소 후 추가 검토)

5 방역 위험요소와 축사 간 거리 제한

⇒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6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단기) 위험시기(10~2월) 거점인수도장 운영, (장기) 거점집하장 유통 제도화

7 축산차량 이동관리 강화

⇒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8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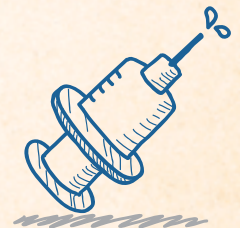
* 영업정지(1회) 1개월, (2회) 3개월,
* 질병관리등급제 우수 농가는 예외 허용

9 계열화사업자등록제 도입, 제재 강화

⇒ 방역책임 등 미흡시 처벌강화
⇒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

10 방역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

⇒ 수매병행,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 활용 사체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우리 농식품, 청탁 위한 금품 아닌 촉박 위한 기쁨으로

최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식품 소비의 감소로 농업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소비 촉진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통정책과 김종구 과장과 송실대 전삼현 교수는 농식품 소비 촉진 대책을 시행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김종구

유통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전삼현

송실대학교 교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식품 분야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농식품부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장(이하 김) 농식품부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T/F팀을 만들고 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30일에는 축산과 외식, 과수·특작 3개 분야로 품목을 나눠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감소가 우려되는 품목(화훼, 과수, 인삼, 한우 및 외식분야)에 대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대응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정책관계자 전삼현 송실대학교 교수(이하 전) 제정 당시에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현장이나 학계 모두 이 정도로 부작용이 클지 몰랐던 것이죠. 일부 시장경제론자들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매우 소수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에서도 매출액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크게 효과를 나타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실제로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승진인사 등이 있을 때 난(蘭)과 같은 분화류의 선물이 확연히 줄어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용 분화류나 경조 사용 화환 등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물 제공자가 기재돼 공개되는 특성상 다른 선물과 달리 부정청탁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적습니다.

전 저는 직접 느끼기 이전부터 해당 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최종 위헌판단심리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로 진술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농식품이나 자영업 분야의 소비가 감소해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과 국민권익위 측은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상쇄할 만한 사회적 편익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한 사회적 편익증대 효과란 부패감소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패감소 효과보다는 국민의 불행지수와 경제 위축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어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제위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위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현재의 대응 방안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전 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금품수수 등 금지 대상 행위에서 농식품 수수에 대한 부분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적 개정이 최선입니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 금품 등 수수 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을 찬성했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농민단체 등이 직접 면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어민들이 결성한 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청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외에 현재 대응 방안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을 언급해보자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생

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축 수산물의 수출을 전담하는 사무를 농식품부가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CT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농식품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면 적합하겠지요.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위축 문제는 농식품부 혼자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축수산 관련 사업자나 협회 등이 함께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 소비촉진 대책 수립 시점이 올해 설을 앞둔 1월 10일로, 설 명절 동안 농식품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판

촉을 실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선물용 농식품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유통)와 백화점 3개사(신세계, 롯데, 현대)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농축산물의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훼', '과수' 등 분야에 대해 각각의 소비촉진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소비자가 꽃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GS 슈퍼마켓 화훼 판매코너(flower in shop) 설치를 통한 화훼 판매
 ⇒ GS리테일과 협의를 통해 2016.12.8부터 전국 173개 점포에서 화훼류 판매 개시



사례 2. 축산물 소포장 상품 개발·홍보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 확대 유도
소포장(5만 원이하)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상품' 선정·홍보를 통한 축산물 소비확대
 ⇒ 온라인몰 연계 예약판매(농·축협, 홈플러스, 농협a마켓 등) 및 카탈로그 제작·홍보 추진
 *설날 판매 실적(1.9~1.30) : 2,295세트 113백만 원



사례 3. 꽃 생활화 운동 추진으로 꽃 생활화 문화운동으로 발전
기업·기관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 추진
 ⇒ 2015.9.15부터 우리부가 숭선하여 매주 72개 부서 회의 테이블에 꽃을 배송하는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을 추진
 ⇒ 이후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와 꽃 생활화 MOU체결('16.10.26), 국회 꽃 생활운동 출범식('17.2.7)을 통해 4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꽃 생활화 문화운동으로 발전



부정청탁금지법 대응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대응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등 추진

타임라인

- '16.6.22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 권익위에 제출
- '16.7.18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분석(KREI)
- '16.8.2 농식품분야 청탁금지법 영향최소화 T/F 구성
- '16.9.7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대책 회의(농식품부·유관기관·업계 등)
- '16.9.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16.9.30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분야별 정책토론회 (농식품부·유관기관·업계·학회 등)
- '16.10.26 꽃 소비 생활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의·소비자단체 등)
- '16.11.9 선물용 난(蘭) 소비촉진 홍보행사
- '16.12.15 실속형 축산물 경진대회 개최
- '17.1.10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마련
- '17.2.7 국회 꽃 생활화 출범식 개최 및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한도 특례기한 연장
- '17.2.22 농식품 소비동향 분석 토론회 개최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월)에 따른 농식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촉진대책 마련·추진('17.1월~)
- ✓ 단기적으로는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개선



1) 1 Table 1 Flower 범국민운동

📁 주요성과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마련(17.1.10.)
* 단기적으로는 소비촉진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新상품개발 등 산업구조 개편 추진

2 선물용 꽃 소비 형태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1 Table 1 Flower’ 범국민운동을 추진해 꽃 생활문화 확산 기여
- 가정·사무실 회의 탁자에 꽃 한 송이(1 Table 1 Flower)를 놓아두자는 캠페인이 꽃 생활화 캠페인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꽃 생활화에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3 외식소비 촉진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식산업 발전방안을 마련(17.3.)
- 외식·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외식경영주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등 세부추진과제를 마련

📁 향후 보완과제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축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훼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화훼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개선 및 꽃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 대책 수립 추진
- ⇒ 화훼 소비의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이므로,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과수 생산·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수산업 발전계획 마련

- ⇒ 선물용 소비에서 일상생활 소비로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세척과일, 신선편이 상품 개발 및 품목·품종 다양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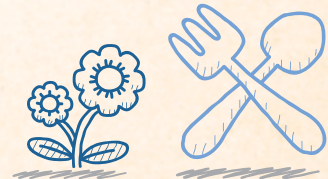
3 국내외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인삼엑스포, 전국단위 인삼축제 개최

-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9.22~10.23)」, 「대한민국 인삼대축제(10.21~10.23)」의 성공적인 개최로 ‘고려인삼’ 이미지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유도

4 한우 소비트렌드에 맞춘 생산·유통체계 개선 등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

5 외식소비 확대를 위한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 다 함께, 더 배려하는 외식문화’ 추진(4월~12월)

- ⇒ 음식점에서 공공에티켓 지키기(더치페이·소음줄이기 등), 외식업 종사자 호칭개선 등 3가지 주제로 릴레이 캠페인 진행



유기농업으로 쾌적한 농촌, 더 나은 먹거리 만든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정경석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먹거리 트렌드에 우리나라 농업도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 발전기획단 정만철 전문위원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정경석

친환경농업과 과장



정책관계자

정만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이하 석) 친환경농식품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발생한 부실인증 사태 등으로 201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 연계가 약하고 농가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외식·수출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농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6년 3월에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인증·유통·생산·자재·농업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차례의 워크숍과 T/F 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유관기관·학계·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유기농 선진국인 독일과 스위스의 생산농장·가공업체·국제기구 등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지역인 홍성에서도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성의 유기농업 정책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책관계자 정만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이하 철) 홍성은 19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해 199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리농법이 시작된 명실상부한 유기농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특히 홍성군은 친환경로컬푸드학교급식센터를 군에서 직영하면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제하고 있는 친환경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쌀빵, 쌀과자 등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을 지원해 왔으며 2017년에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막걸리, 전통주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독을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고 제조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논독에 꽃무릇을 식재하는 등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 친환경농업은 말 그대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에 높은 가치가 있는 농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성과 건강이라는 소비자의 개인적 인식만이 중심이 돼 왔습니다. 화학합성 농자재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편익은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제4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에서 농

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상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업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직불금 제도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직불제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 화학합성 농자재 등의 비점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기와 무농약으로 구분된 친환경인증을 외국과 같이 유기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농약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와 같이 특별 재배농산물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관리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무농약농산물 가공식품 산업화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 그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도입은 일반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물질중심의 인증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입니다. 지역에서 남아도는 축산분뇨가 있음에도 외국산 유박비료를 수입해 사용하고, 화학농약 대신 시판되는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해 사용하는 현재의 친환경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농업 여건상 집약적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생산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자재의 자가제조 등 저비용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물질중심 인증제의 문제점입니다. 농약 잔류 등 사용농자재(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증 기준에서 허용물질인지 아닌지를 따져 친환경농산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농업형태는 일반 농업과 같은데 농자재만 친환경농자재로 바꾼 상업적 일반화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생산부문 중심이었다면 향후 정책의 방향은 소비촉진과 시장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생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투입저비용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전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일반 농업에 비해 생산기술도 까다롭고 생

산비도 더 많이 소요돼 소득이 낮지만, 현재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수준으로는 이런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직불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적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150여 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일부 농가들은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지역조합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규모화·조직화하는 ‘친환경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공이나 외식, 수출로 바로 이어지기 위한 기반이 약했으나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 기술·정보 지원 등을 통해 생산과 타 산업 간 연계 강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정책과 더불어 농업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인프라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유기농업의 교과서, 장안농장



유기농 채식뷔페

(현황) 43ha 규모의 농장 및 제주도 포함 전국 150여개의 협업농장 보유, 160여명의 직원들이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 등 실시

(성과) 자연순환형 유기농법을 통해 쌈채소 생산(1차), 유기농 양배추·비트·녹분 등 가공품 생산(2차), 유기농 채식뷔페(3차) 등을 통해 친환경 6차산업화 실현

- 특히, 100여 가지 채소를 맛볼 수 있는 유기농 채식뷔페 ‘열명의 농부’를 운영, ‘장안농장 채식뷔페’의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판로 확보 및 매출액 증대(‘16년 농가 매출액 21억 원)

사례 2. 친환경 자산지소(地產地消) 가공업, (주)토리식품



우리밀 축제

(현황)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친환경농산물 가공회사

(성과) 전국 친환경 작목반과 계약재배(1차), 친환경 원료와 우리밀을 이용한 케첩, 카레, 호박죽 등 10여 가지 가공품 생산(2차), 우리밀 축제·음악회 등 체험(3차)을 통해 친환경 6차산업화 실현(‘16년 매출액 42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

타임라인

- '13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 '14.7
한-미 유기농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 '15
유기직불금 지급기간 연장(5 → 8년)
- '15.2
한-EU 유기농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 '15.5
롯데슈퍼·생산자단체와 유기농 상생협력 MOU 체결
- '15.11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인증심사 과정 2중-check 시스템 도입)
- '16.3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2016~2020) 계획 수립
- '16.7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 '16.12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 6차산업 우수사례집 발간
- '16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농가수 증가
- '17.2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지자체·수출업체와 유기농차 수출 확대 협약, 환경부·유통사 협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그린 카드 연계
- '17.4
롯데슈퍼·충청남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업무협약 체결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현황) 국내외 소비자의 친환경농식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및 농가수는 감소 추세**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판매액 : ('10) 4,122개소/7,544억 원 → ('15) 5,366/13,521
**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농가수 : ('12) 127천 ha/107천 호 → ('16) 79/62

☑ (과제)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생산기반) 친환경 단지·지구 내실화 및 농가 경영 안정 지원
- (유통·소비) 유통체계 규모화·조직화 및 소비채널 다양화
- (식품산업) 친환경 가공·외식·수출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 강화
- (인증관리) 민간인증체계 확립 및 인증 사전·사후관리 강화
- (농업환경) 농업·농촌환경 관리 강화를 통해 공익적 기능 확산



1) 친환경농산물 알찬꾸러미

주요성과

-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 및 분야별 기반 확충**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6~2020) 계획 수립('16)
- 2 유기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친환경 단지·지구 조성, 생산 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 실천 유도**
- 친환경농업 단지/지구(개소, 누적) : ('13) 34/1,112 → ('16) 48/1,174
- 3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인증업무 민간완전이양,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인증기관 재지정 강화 등('16)
- 4 기업과의 상생협력,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16)을 통해 다양한 판로 확보 및 소비촉진 기반 구축**
- 롯데슈퍼·생산자단체와 유기농 상생협력 MOU 체결('15), 지자체·수출업체와 유기농차 수출 확대 협약 및 환경부·유통사 협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그린카드 연계, 롯데슈퍼·충청남도과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업무협약 체결('17) 등
- 5 농가 걱정 소득 보전 미흡, 소규모·분산된 유통구조, 제한된 판로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에 한계**
- 고투입 농법 등으로 농업환경 오염 심화 및 농촌 생태계 악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천ha)/농가수(천 호) : ('13) 119/104 → ('16) 79/62



향후 보완과제

- 1 품목 중심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및 농가의 경영 안정 유도**
⇒ 쌀, 녹차 등 전략 품목 위주 신규 지구(개소, 누적) : ('17) 13 → ('22) 100
⇒ 품목별 직불금 단가 차등 인상·지급기간 연장 등 직불제 개편, 인증비용 지원 등
- 2 유통체계 규모화 및 친환경 단체급식 등 신규 수요처 확보**
⇒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17: 1개소 → '21: 9)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친환경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 3 인증 범위 확대, 정보·기술 지원 등 친환경 가공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규모 확대 ('15: 6천억 원 → '21: 1.5조 원)**
⇒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음식점 인증·표시제 도입 등
⇒ 친환경 가공기술 개발, 가공업체 네트워크 구성, 원료 생산지도 제공 등
- 4 전략 품목 발굴, 유기 동등성 인정 협정 등을 통한 수출 확대**
⇒ 국내 유기 원료 주산지(예: 경남 하동 녹차), 수출국 시장 수요 등 고려
⇒ 일본, 캐나다 등 수출 유망국과 협정 체결, 수출국 정보 제공, 인증 컨설팅 지원 등
- 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농가의 상호준수의무 강화 및 친환경농업의 정책 범위를 환경까지 확대**
⇒ 토양·용수·대기 등 농업·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인프라 지원, 성과평가 등



II. 직접 듣는 정책 34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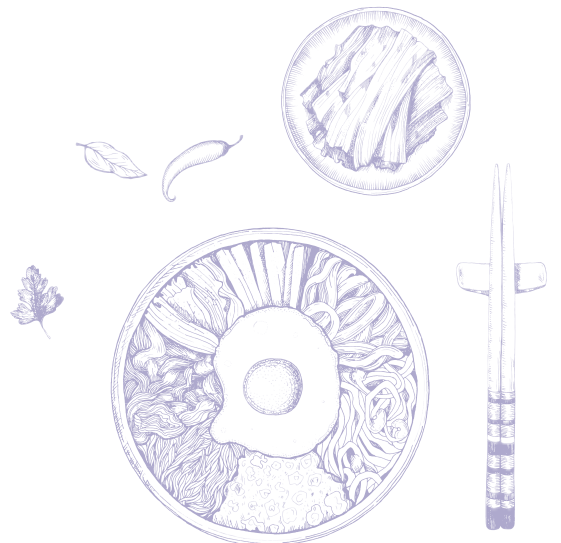
3. 농촌활력 제고

신명나는 농촌, 웃음꽃이 활짝

20 농촌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

21. 농협 사업구조 개편

22. 농어촌상생기금 운영



'의료·교통·보육', 기초생활 인프라 마련으로 농촌복지 향상

도시 위주의 성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도·농간 생활 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실제로 농촌의 의료시설 수는 도시의 1/8 수준이고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도 433개에 달한다. 이에 농촌복지여성과 강혜영 과장과 광주대 이용교 교수가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다.



정책입안자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 과장



정책관계자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현재까지 진행돼 온 농촌복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불어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지요.

정책관계자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이하 이) 과거에 비해 농어촌 복지가 점차 향상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농어민의 소득과 보건·교육·주거·사회 서비스 등 제반 영역에서 양과 질이 도시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소득은 적고 보건·의료시설은 질이 낮고, 교육시설은 없거나 있어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물적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도시 근로자를 염두에 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는데 도시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됐고 농어민에게는 일부 보험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도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농어민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차별이 없어지고,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농촌에 맞는 복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농촌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나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주세요.

정책입안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장(이하 강) 우선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켰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기준소

득금액을 '13년 79만 원에서 '16년 91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통해 가입인원이 '13년 328천 명에서 '16년 390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지연금도 평가방법 개선, 이자율 인하 등으로 '16년 누적 가입건수가 '13년에 비해 131.7% 증가하였습니다.

고령농 등 농촌 주민의 주거·의료·교통 등 기초생활여건도 지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농의 주거·식생활·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은 2014년부터 2016년간 총 190개(공동생활홈 100개소, 공동급식시설 58개소, 작은목욕탕 3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만족도는 86.78%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동생활홈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 달 기준으로 난방비 20만 원, 생활비 6만 원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병원과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의료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에서 진행된 '농업인 행복버스' 사례가 있습니다. 여량면은 거주민의 30%가 65세 이상의 고령농인 곳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있는 정선군 읍내까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교통편이 관찮을 때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농업인 행복버스'가 2016년 10월 30일, 정선군 여량면을 방문했습니다. 행복버스의 의료 지원을 통해 이 지역 고령자의 50%에 가까운 341명이 의료지원을 받았습다.

원격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는 1,500여 명의 주민 중 총 400여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며, 이중 다수가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도는 완도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고, 운행편수가 많지 않아 육지와와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

결하고자 청산도와 육지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청산농협 행복모음센터 간 원격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주에 있는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의료진이 원격으로 청산도의 고령농에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의 여러 시골 마을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실시로 정류장까지의 이동시간은 20여 분 단축됐고 마을 주민들의 외출 횟수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질병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 고령농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사업도 지속 확대하여 고령농 등의 영농·가사 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촌복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향이 있다면요.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도시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민이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최소한의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이 사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야 할 국민은 맞춤형 복지에 대해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군구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복지 상담과 교육자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반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책이나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 농촌지역 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의 부족한 기초생활여건 분야도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측면에서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아야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나, 향후 과세소득·재산 기준을 연금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지연금도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월지급금을 상향하는 상품 등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가입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의료의 경우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보건소에 ‘농업인 질환 전문 치료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공동 이용시설도 지역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 확대·보급하고 농촌마을의 종합 복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 측면에서는 농촌의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등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여가부와 협업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손잡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 농촌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버스 등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정책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서 농어촌 주민 혹은 농어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이해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는 주거비가 높아지고 있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해서 도시 빈민에 대한 생계급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은 작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재산으로 계산돼 수급자가 되기 어렵거나 설사 수급자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를 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에게 토지는 생산수단인데 마치 큰 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어촌에는 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요양 취급기관이 없거나 큰 병원이 없어 의료를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모든 복지정책에서 농어촌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민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 '98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중, 현재 농업인 중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연금보험료 지원 가능
- 최근 농업인의 농외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경우 귀농·귀촌 초기 3년 동안에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
- 위와 같은 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체계 개편 추진 필요
- * '17년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부 전문가 등과 협의 중

사례 2. (취약한 주거여건) 충남 예산군 광시면 상류마을

- 예당저수지 상류, 산비탈에 있는 마을
- 상수도 보급률(0%), 하수도 보급률(83%), 65세이상 고령자(43%), 장애인비율(10%), 주택밀집도(70%)
- 폐가·축사 등 혐오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경관 불량
- 마을의 오래된 세천은 우기시 범람의 위험선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을 옆을 지나는 도로와 맞닿아 주민 안전 위협



농촌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에 대하여

농촌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화, 여성농업인 지원,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타임라인

- '13.6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 '13.6
농촌재능나눔 선포식
- '13.12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14.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상향
- '14.6
농어촌마을리모델링 특별법
시행령 제정
- '14.12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 수립
- '15.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 상향
- '15.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 '15.12
9개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농촌고교출신과 가점 우대
- '16.12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건강검진실시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고령농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 ☑ 주거·의료·교통·보육 등 기초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 및 확대 실시



1) 농업안전보건센터 무료 건강검진, 교육_농작업질환예방 2) 혈압_설문

📁 주요성과

1 농어촌 고령화 심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 사회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제도 시행 등 고령농의 노후 생활 안정 도모

2 의료·교통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미흡하여 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확대·실시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건강검진 실시(42백 명), 행복나눔이*(1만 명) 지원 등 농촌주민 체감형 복지지원 확대
* 독거노인 등에게 간식 활동 지원과 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지역농협 단위 주부 모임

3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지속적인 개선
-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7,063동), 빈집정비(2,189동), 약취 등 비위생적인 상하수도(486호), 재래식 화장실 개선(485개소) 등

📅 향후 보완과제

1 소득 | 농외소득 비중 증가 등 변화된 농업여건 반영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체계 개선* 추진, 농지연금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 확대 유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57조 개정 : (現)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지원 제외 → (개선안) 과세소득·재산 기준 지원 결정 (예: 과세소득 25백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포함 등)

2 의료 | 창조마을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확대('16: 7개소 → '17: 9), 보건소에 농업인 질환 전문 치료시설 운영*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복지부, '16년 예산 450억)'과 연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농업인 질환 예방 연구결과를 진료에 활용

3 교통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촌마을의 여건에 맞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속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4 주거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 및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농촌지역에 산재한 빈집실태조사, 철거·활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농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17.3)
⇒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에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포함시 가점 부여, 운영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조례 및 마을협약 표준안 마련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생각보다 단순한 사실을 지향한다. 농민 조합원들의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위해 정부는 20여 년이 넘는 논의를 해왔다. 농업금융정책과 최봉순 과장과 농협경제지원팀 김민욱 팀장, 그리고 정책관계자로 나선 김은정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위원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결국 농민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입안자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정책입안자

김민욱

농협경제지원팀 팀장



정책관계자

김은정

정부위원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2014년~현재)

정책 관계자로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관계자 김은정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이하 정)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은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금융정책과와 농협경제지원팀 담당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총괄하는 국장님은 평가 협의회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영역 보고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농협중앙회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당초 보유 자본에서 자체적으로 5.2조 원의 자본을 추가 확충하고 내부역량을 집중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로 농협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경제지주 전환의 완료 시점도 법적 기한인 2017년 2월보다 조기인 2016년 12월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입안자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 과장/김민욱 농협경제지원팀 팀장(이하 최/김)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농협법 개정이었습니다. 농협법 자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입장별로 쟁점이 많았지만 '판매농협' 구현,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합의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업구조개편의 초기 단계라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이 농협의 농축산물 책임 판매량 증가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2011년, 11.2%에 불과했던 중앙회 책임판매 비중이

2016년 들어 20.7%까지 상승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부문에 적정 자본금이 배분(5.45조 원)돼 자립경영의 기반이 확립됐습니다.

정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생산자 편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편익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농협 경제 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 이후인 2016년 기준 원예 주요 6개 작목에 대한 생산자 편익은 294억 원이며 소비자 편익은 8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신유통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의 투자로 2015년 한 해 동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사회적 편익은 농민 6,447억 원, 소비자 3,210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 직접 도매사업, 대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각각 8.4%, 3% 제고했으며, 물류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 가격을 10.5% 인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매사업을 통한 편익을 보면 농협판매장의 신선식품 판매로 2015년 기준 약 1,628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했습니다.

농협 경제 지주와 지역조합, 조합원이 상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불어 농협의 근간인 지역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상생 방안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2017년 경제지주 본격 출범에 따라 지역 조합의 경제지주 자본투자 및 신규 사업 공동투자를 통해 상호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품목별 협의회를 통해 지역 조합과 경제지주 간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조합과 사업상 경합되는 부문은 조정을 통해 완화하고 가능한 조합과 경합이 되지 않는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사업적 조합 지원 기능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공선출하회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해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현행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약정조합원 제도를 육성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 조합원은 소속 지역 조합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단합으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조합은 농업인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업체의 가격 결정에 척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향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2016년까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 경제부문에 적정 자본금이 배분(5,450억 원)돼 자립경영의 기반이 확립됐고 농협 경제부문의 손익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시현(‘11년 △758억 원 → ‘16년 196억 원)되고 있어 경제 사업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까지 지역 농축협과의 사업 결합이 우려되고 산지유통 조직화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 시스템을 보강하고 타 금융지주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주어진 과제 및 농협사업구조 개편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을까요.

정 2016년까지 경제사업 활성화를 역점 추진한 결과, 2011년 758억 원의 적자에서 2016년 196억 원의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거시적 성과로 보면, 조합 출하 농축산물 책임 판매 실적이 2011년 11.2%(1.9조 원)에서 2016년 20.7%(3.9조 원)로 확대됐습니다. 양곡과 축산물 책임 판매 비율도 5년 동안 15.2%p, 10.1%p 증가했으며 청과도 11%에서 18.2%로 늘어나 판매농협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성과를 따지자면, 농협경제사업 규모가 개편 전인 2011년 22.7조 원에서 개편 후인 2016년은 25.5조 원으로 5년 사이 2.8조 원이 증대됐습니다. 또한 산지 원예 농산물 연합 판매실적은 2011년 9,458억 원에

서 2016년 2조 3,273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축산물 중앙회 책임 판매 실적 역시 5년 동안 사업 규모가 2.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하게 됐고,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농협 경제사업의 성과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전략 조정 및 신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협동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만큼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인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의 각 부문 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회 차원의 농협개혁은 일단락됐지만, 농협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회원조합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조합이 신설된 만큼, 농협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 조합의 규모화, 조합원 정예화 등도 같이 검토돼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안성물류센터

총 1,283억 원(토지 229, 건물 933, 동산 121)을 투자하여 부지 93,227㎡(28천 평), 건축연면적 58,389㎡(18천 평) 규모로 안성물류센터 설립(‘13.9)
 → 매출액 ‘13년 10,047억 원에서 ‘16년 12,410억 원으로 23.5% 증가, 개장 후 농산물 유통비용 14.6%p 절감(‘1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사례 2. 안심축산

‘16년까지 4,992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물복합단지 건립 추진(‘18년 완공), 축산물전문판매점 확충 등 추진
 → 공동브랜드 사업단과 지역생산자 브랜드 중심의 산지조달 체계화로 산지직구매 조달비율 58.3% 증가, 한우 기준 사업량 58.1%, 시장점유율 62.1% 증가, 축산물 전문 판매점 260% 증가

* 안심축산 산지직구매 조달비율 : (‘11) 24% → (‘16) 38%, 축산물 전문판매점 : (‘11) 441개소 → (‘16) 1,590개소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하여

농협 사업구조 개편

정부·국회·농민단체 등은 농협을 경제사업에 집중하고 회원조합·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

타임라인

'11.3

농협중앙회를 '1 중앙회 - 2 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

'12.3

농협금융지주를 설립하여 중앙회 신용사업의 완전 분리·이관

'14.12

농협 경제사업 이관 단계의 법적·세무적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농협법 개정

'15.2

농협 판매·유통사업 등 경제 사업의 1단계 경제지주 이관

'16.12

농협 나머지 경제사업의 2단계 경제 지주 이관으로 사업구조개편 완료

'16.12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회사의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협법 개정

'17.1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불만 지속 제기
- ☑ 농협중앙회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판매농협'으로 변화시키기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

농협 중앙회



📁 주요성과

1 '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 결정
-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서 공청회('10.2.11)와 6차례의 소위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2 개정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금융지주는 '12.3.2, 농협경제지주는 '17.1.1에 본격적으로 출범
- 중앙회 신용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농협금융지주로 완전 분리·이관, 경제사업은 '15.2월부터 '1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관 완료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3회), 부족자본금 지원, 세금감면 등 정부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3 중앙회·농협경제지주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조합과 중앙회간 공동투자를 통한 산지 규모화, 산지와 소비기간 유통 계열화를 주요 방향으로 '12~'20년까지 4.96조 원을 경제부문에 투자
- 이를 통해 중앙회가 조합의 출하물량을 50% 책임판매하는 것을 목표

4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의 수익센터로서 경쟁력 강화
- '12년 출범 후 은행, 생명, 증권 등 자회사에 약 1.8조 원 증자를 통해 자본적정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 증권사 인수 등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여 타 금융지주와의 경쟁력 확보



📝 향후 보완과제

① 농협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 투자 활성화(~'20)

- ⇒ '17년 이후 세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금 잔액 2.2조 원 중 약 58%인 1.3조 원 집중투자('17~'18)
* 조합과 생산자조직육성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조합간 경제사업 시너지 제고 유도

- ⇒ 공동투자·판매, 시설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창출, 생산 및 매장·브랜드통합으로 계통 간 경쟁 방지 추진
* 평가협의회 위원과 반기별 1회 현장점검 실시 및 피드백 강화

③ 지역농축협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17)

- ⇒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노력, 조합의 규모화, 조합원 정예화 등도 같이 검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농업과 기업, 도시와 농촌간 상호신뢰와 협력 확대를 위한 마중물

FTA 체결에 따라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계와 피해를 보는 농업계 간 격차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는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촌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해 산업계와 농업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입안자

박수진

농업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나요?

정책입안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이하 박) 지난 2014년 11월 영연방 FTA에 대한 여야정 합의 당시 정부는 무역 이득 공유제(FTA로 이익을 보는 특정 산업 또는 집단의 이익 일부를 조세나 부담금 형식으로 부담해 손해를 보는 산업 또는 집단에 재분배)의 대안을 연구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고향 납세제)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일본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개인 혹은 기업이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합의를 계기로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 재단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생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농업계 간담회를 포함,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생기금 설치인센티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마련되면 무엇보다 민간 기업 및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합니다. 민간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책관계자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이하 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면서 농업계의 요구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올해 초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기금의 지속성 확보와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농업계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농업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기금운용 과정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비농업계의 참여 확대와 지지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기금이 농업·농촌만을 위한 기금이 아닌 것은 점진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발달된 농업·농촌의 환경친화적 청정 이미지는 전체 국가의 품격을 높입니다. 이는 결국 비농업계 산업의 대외 이미지 상승으로 연결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지요.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은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에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비농업계가 믿을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 자유무역의 확대는 국가 전체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회 부문 간에는 혜택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확대는 부문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



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겪는 일이고 무역이 정치화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부문이 자유무역 확대에 의해 교역조건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부문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결단과 국민적 동의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보상체계가 농어촌 상생기금 형태로 만들어졌지요. 이 기금은 농어촌에 대한 일방적 무역피해 보상제도로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업·농촌과 비농업계 간의 상생협력 모델이 돼야 합니다. 서로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두 부문 간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앞으로 국제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국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민간의 자발적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기금인 만큼 활용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생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할까요.

김 상생기금 운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실 있는 사업 발굴입니다. 특히 이미 민간에 의해 시행 중인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 주체가 민간 기업 중심의 비농업계입니다. 따라서 비농업계 관점이 많이 반영된 사업 발굴이 중요하겠지요. 농업·농촌 관점에서 발굴된 사업은 이미 관련 정책을 통해 예산 사업, 지원 사업 등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기금 사업은 농업·농촌에 대한 비농업계의 관점과 요구가 크게 반영된 사업이 발굴돼야 합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단순한 소비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들 자체적으로도 일부 경제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에게도 지분을 인정하는 생산·소비·관광·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공유 조직을 도입해야겠지요.

환경보존을 포함한 다양한 다원적 기능 함양과 상품화, 농업·농촌 보유 자원의 공유, 다양한 생산·소비 공동체 조직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도 경제적 이윤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면 도시민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계의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 정책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 법 시행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본부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중심으로 기금이 조성·운영되어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회공헌사업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계와 기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상생기금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상생기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에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계와 기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중복 최소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기금 관련 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구상해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17.3.30)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국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본부 설치를 기념하는 출범식 개최 같은 날,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등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상생기금 운영·관리 규정 논의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에 대하여

농어촌 상생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

타임라인

- '15.6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
- '15.11.30
한중 FTA 비준 동의 논의시, “여야정”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 '16.4 - 6
상생기금 도입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재발의
- '16.12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17.1
3개 개정 법률 시행
- '17.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기로 여야정 합의('15.11.30)
- ☑ 농어촌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3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7.1.17일부터 시행
 - * (FTA 농어업법) 기금 관리·운용주체(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 용도 규정
 - * (상생협력법) 재단 명에 ‘농어업’ 추가
 - *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의 10% 법인세액 공제



1) '17.3.30 농어촌상생기금 1차 운영위원회 2) 농어촌상생기금관련 카드뉴스

📁 주요성과

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을 개정해 기금의 설치·조성·용도 등을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을 개정해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명칭 변경 및 사업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을 개정해 세액공제 대상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출연금의 10%)

2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투명한 조성·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등 전담 조직 설치
-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하여 관리·운영하고,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

3 관계기관, 농업계·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 지속 추진

- 상생기금에 대해 산업 부문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농업계, 기업계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추진한 결과 운영본부의 조기 출범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



향후 보완과제

1 산업 부문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기금 관리·운영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
- ⇒ (농업계) 농민단체 간담회, 시·도 농정국장회의 등 개최
- ⇒ (기업계) 정책 설명회, 기업별 면담 및 협의회 개최

2 상생기금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 ⇒ (기본방향) 농업계·기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되면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발굴
① 상생기금 운영본부 기획사업, ② 기업·단체 자율 추진사업, ③ 공모 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 운영
- ⇒ 기존 농촌지원 활동을 추진하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농업·농촌 지원 활동을 체계화
* 농협, 마사회 희망재단, 농촌사랑운동본부 등

3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기금 홍보 강화

- ⇒ 상생기금 도입 취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알리고, 농업·농촌 및 상생기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유도
- ⇒ (공모전) 기금 출범 계기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
- ⇒ (기타) 상생기금 웹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 사업 사업 추진 내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 제고 및 관심도 제고



4. 유통구조 개선

신선 농산물, 방방곡곡 달려간다

- 23. 디자인에 기반한 지역개발
- 24.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산
- 25.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농촌의 재발견

농촌 지역개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농산물 생산공간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경관과 생태,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개발과 양주필 과장과 전남대학교 최수명 명예교수는 이러한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이용해 농촌이 국민 생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양주필

지역개발과 과장



정책관계자

최수명

전남대학교 교수

농촌과 디자인의 결합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에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실제 정책 수립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나요.

정책입안자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이하 양) 그동안 지속적인 농촌개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특성이나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기보다 비슷한 유형의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농촌은 자연·역사·문화 등 가치 있는 유·무형 자원이 많아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내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지역계획과 건축·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주민 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읍면 중심지 활성화를 비롯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농촌경제연구원과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 추진방안을 연구했으며, 지자체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농촌 디자인'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 모델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농촌개발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최수명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최) 1979년 제3공화국의 퇴장과 함께 1950년대 말부터 나뉘게 된 축적된 농촌 지역개발이 철저히 부정되면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단절을 겪었습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부터 농촌경제연구원과 학계가 참여하고 현재의 농어촌공사가 계획 수립을 전

담한 (군 단위 지역)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개발 전문성이 상당 부분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관 주도의 계획 수립 체제로 회귀함에 따라 또 다른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관련 전문가와 노하우 부족으로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영예별 상향식 농촌개발방식이 도입되고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와 성과가 재조명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움직임이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적용해 성과를 분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 시행으로 성과를 낸 마을이 있나요?

양 전남 담양군 무월 마을의 경우 우물샘·돌담길·야생 대나무 등 고유자원을 발굴해 '도시민·외국인도 머물다 가는 생태 무월마을'이라는 마을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태 샘을 복원하고 등산로, 꽃길을 조성하는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방문객은 2012년 2,000명에서 2015년 1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주민소득 또한 2013년 7,800만 원에서 2014년 1억 4,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관 환경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민과 지자체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신다면요.

최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포괄보조금 제도'에 의해 농촌개발 의사결정 구조의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과거 일방적인 통치적 농촌개발에서 쌍방의 협치적 농촌개발로 전환 및 정착하는데는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새로운 분권이 주는 역기능만 팽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개발정책과 사업을 끊임없이 평가해 정책 개선을 상시로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혼자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은 역량강화의 최종 목적 또는 성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 및 효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농촌개발의 당사자인 주관기관과 농촌주민 및 지원조직 등이 농촌개발에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스펙을 갖추기 위해 어떤 학습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의 수행 로드맵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역량 강화 실적을 보다 엄격하게 등급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량 강화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 평가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물론,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평가, 이에 따른 피드백 및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겠죠.

디자인에 기반한 지역개발 정책이 계속해서 성과를 내려면 현재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재 정책에서 추가할 부분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을까요?

최 해당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농식품부 지침의 수정이나 변경이 매우 신중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돼 다시 신청서를 소급해 수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최초의 지침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의 변경에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적어도 신청서 접수 1년 전에, 아무리 급해도 6개월 전에는 변경 내용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특정한 지리적 범역을 대상으로 모든 개발 활동을 포괄하고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양

한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리더 역할은 농촌 학문에 전문성을 가진 농촌 계획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문 전문가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돼 개발사업의 방향성이 오도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소득사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사업자 개인에게 직접 투자하고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공적 자금 투자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투자에 한정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럽연합처럼 소액에 한해 농촌주민 개인의 소득사업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거론됐다가 추진되지 못한 완료사업지구의 재투자 사업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사업 추진의 노하우가 축적됐기에 사업효과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봅니다. 특히 재투자 사업은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추진 주체를 육성해야 하며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보다 다양해진 농촌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청양군 알프스마을

- 뷰티축제, 조롱박축제, 공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
* 연간 25만 명 관광객 방문, 18억 원 매출, 5천 개 일자리 창출

사례 2. 영주 주치골 마을 리모델링

- 상하수도 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등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변신
* 슬레이트 지붕 개량(34동), 빈집철거(61동), 담장정비(250m), 주택 리모델링(2동) 등



디자인에 기반한 지역개발에 대하여

디자인에 기반한 지역개발

가치있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휴양·관광 등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농촌공간 조성

타임라인

- '14.12
마을역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원체계 개편
- '15.3
제3회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개최
- '15.8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15.12
주민 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방안 마련
- '16.1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추진
- '16.3
제4회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개최
- '16.8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17.1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추진
- '17.3
'클린 농업·농촌캠페인' 전개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촌에는 경관, 생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이 많아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음
- ☑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농촌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 필요



1)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2)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_생태복원마을 완주군 비봉마을

주요성과

1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발굴(6개소) 및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한 경관직불제 등을 도입·운영

2 주민 참여 활동 활성화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행복마을 만들기' 등 주민 중심의 마을 가꾸기 활성화



향후계획

1 농촌공간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농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공간정책 마련(상반기)

⇒ 개발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거버넌스(협력)를 고려한 통합적 공간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2 유·무형 자원 활용, 주요시설-거점 연계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80개소) 추진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협업 지원형(10개소)과 지자체 자율형(70개소)으로 구분하고, 민간자본·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성공모델 개발

* 지자체 공모('17.3월), 대상지 평가 및 선정('17.6월), 사업시행(~'20년, 최대 3년)

⇒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역사문화자원과 주요 거점시설(역, 공원 등)을 연계하고, 민간자본 및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성공모델 창출

3 깨끗한 농촌, 안전 농산물, 주민의식 개선 등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클린 농업·농촌 캠페인' 전개

⇒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역주민, 언론 등 참여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캠페인으로 추진

* 계획수립 및 발대식('17.3월), 우수사례 경연 및 포상(각 3천만 원~5백만 원, '17.8월)

4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상시점검 및 맞춤형 활성화 지원

⇒ 시군, 농진청, 농관원 등과 협업하여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컨설팅, 운영주체 역량강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1단계) 시군(전수조사, 분기별) → (2단계)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30%, 반기별) → (3단계) 전문가, 농식품부 합동점검(집중관리 지구, 수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즐거운 新유통경로 확산

다양한 유통주체의 참여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유통경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통정책과 김남주 사무관과 일산농협 박현숙 상임이사는 건강한 유통 정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통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김남주

유통정책과 사무관

직거래를 비롯해 TV홈쇼핑, 온라인 거래의 확산으로 천편일률적이던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정책입안자 김남주 유통정책과 사무관(이하 김)

정부와 학계, 언론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유통포럼과 실무작업반 T/F를 구성하고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정책 수립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정책 관계자 박현숙 일산농협 상임이사(이하 박)

로컬푸드는 지역농협에서 중·소농을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식한 첫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소득 창출에 기여합니다. 또한 품질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판로개척 지원해 농협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실제 로컬푸드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대도시 인근 직매장의 경우 연간 10억 3천만 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은 7억 4천만 원, 농촌 지역 직매장은 4억 7천만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 직거래 방식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대되면서 판로가 없어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던 영세농, 고령농들이 직거래의 장점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가 수

취율은 일반 마트 대비 약 17.2% 높고, 소비자 가격은 20%까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자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의 실구매 가격이 하락해 양쪽 모두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물론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이 높아져 지산지소 운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농업과 지역 내 유통이 결합해 '얼굴을 아는 관계'에서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운동입니다. 일본의 중앙정부의 먹거리 관련 사업을 농업 관련 부서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 주민자치, 소비자 등 지역 주민 전체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지원했습니다. 일례로 생산자단체의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이용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이 있습니다. 소비자 운동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지역 먹거리, 지역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과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맛의 방주'로 노아의 방주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종자나 음식문화 유산을 찾아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생산자를 후원하며 지역농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그동안 직거래 유통망이 대폭 확충됐지만 품목 다양화, 안전성 관리, 홍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 사업장이 일부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활성화,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교



육·컨설팅·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컬 푸드, 직거래가 유통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지역 내 선순환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단순 생산에서 소비가 아닌 지역 내에서 생산, 가공하고 유통하며 소비에서 다시 재활용되는 선순환적 모델이 구축되도록 '지역단위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외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산물 신유통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지역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업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레스토랑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로컬푸드는 단순한 직거래가 아니라 지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정체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유통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값싸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지자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좋은 제품을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행정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사업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 협력자로서의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농림사업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발휘돼야 지역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데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이 담긴 상품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군단위 지자체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가 계획한 사업을 위임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단위 지자체는 농림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부처 중심의 단절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김 앞서 언급했듯,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2016년 기준 148개소인 직매장을 2017년에는 17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영홈쇼핑에 지역 우수 농산품을 고정 편성하고 직거래를 지속 확대 시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품목단체가 참여하는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포스몰(POS-Mall)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을 개발해 구매회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도시형 직매장과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근 로컬푸드의 거점형 직매장으로서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직거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의 경우 지자체가 주관하는 도내 생산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농간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로컬푸드 트럭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편하게

전남 무안 일로농협은 '14.5월부터 남악신도시 등지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

⇒ (실적) 256회 운영하여 총 3억 원 판매액 달성

⇒ (효과) ①직거래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체험 확대, ②지역단위까지 직거래가 확산되는 효과, ③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활성화로 도농상생 실현



사례 2. 공영홈쇼핑을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자두) 특판 진행

'16년도 자두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평년대비 약 44%)을 타개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특판 추진

⇒ 의성, 김천 등 자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후무사 품종을 3주에 걸쳐 판매

⇒ 총 약 21톤*, 1억 3천만 원 판매

* 2시간 30분 방송을 통해 가락시장 일일 거래물량(약 60톤)의 1/3 판매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확산에 대하여

新유통경로 신유통경로란 도매시장 등을 통한 기존의 농산물 주요 유통거래가 아닌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공영홈쇼핑, 사이버 거래 등의 새로운 경로를 통한 농산물 유통거래를 의미

타임라인

- '13.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수립
- '14.9
포스몰시스템 구축 및 거래 개시
- '14.11
직거래 현장조사를 통한 DB 구축
- '15.6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5.7
공영홈쇼핑 개국
- '16.11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7~'21)
- '16.12
로컬푸드 직매장 148개소 개장
- '17.4
온라인 맞춤형 농가 DB 구축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직거래 확산 등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으로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구조 마련
- ✔ 직거래·온라인거래·TV홈쇼핑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를 활성화 시키고, 유통경로간 경쟁을 유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비효율 제거



1) 공영 홈쇼핑 방송 2) 로컬푸드 직매장 사진

📁 주요성과

1 직거래 인프라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 및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대

- 직매장, 직거래장터, 공영홈쇼핑 등 新유통경로를 지속 확대하여 전년 대비 유통비용 절감액이 14.6% 증가 ('16년 절감액 8,585억 원)
- 생산자 판매가격 상승, 소비자 구매가격 하락으로 양쪽 모두의 경제적 이익 증가
 - * 직거래 업체(직매장, 장터)의 농가 수취가격은 일반마트 대비 약 19.5% 높고, 소비자 가격은 약 20.6% 저렴('14, 신유통연구원)

2 공영홈쇼핑 개국, 포스몰(POS-Mall) 운영 등 新유통경로 확산

- 공영홈쇼핑('15.7월 개국)의 낮은 판매수수료(23%, 타홈쇼핑 평균 34%)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입점부담 완화 및 농가경제 활성화 촉진
- 공영홈쇼핑의 연간 농식품 판매액은 1,943억 원으로, 생산자의 수수료 부담을 약 213억 원 절감하여 농가경제 부담 완화
- 외식·소매점에서 매장 내 포스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POS-mall」을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상품 가격 인하를 유도

3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기본계획('17~'21)수립
- 중앙·지방,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구성·운영

📅 향후계획

1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6 : 148개소 → '17 : 170), 공영홈쇼핑 지역 우수농식품(6차산업·지리적표시 등) 고정 편성(50여 회) 등 직거래 지속 확대

- ⇒ 로컬푸드직매장 단계별 지원,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으로 직거래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유도
- ⇒ 소비자들이 우수 농식품을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상품, 6차산업화 상품 및 전통식품 등을 고정시간 방송으로 편성

2 포스몰(POS-Mall)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 개발 및 구매회원 확대 ('16 : 20,040업체 → '17 : 25,000)

3 대도시형 직매장 및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설치 추진

- ⇒ 소비수요가 풍부한 대도시에 인근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대도시형 직매장 및 1도 1대표 장터설치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구매 기회 제공 및 생산자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
 - *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대도시형 직매장 7개소, 1도 1대표 장터 2개소 설치지원

4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 ⇒ 산지직거래, 청년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유통의 주요 채널인 전통시장의 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성화 및 지역농업과 골목상권간 상생 도모
- ⇒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임시직거래장터·특판행사 개최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고도화로 수급불안 최소화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공산품과 달리 농산품은 기상 등에 따라 생산량이 매년 달라지고, 가격 변동도 심해지는데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원예산업과 김철순 과장과 안양대 김동환 교수는 수급불안이 심한 농산물에 대해 안정적인 수급 조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입안자

김철순

원예산업과 과장



정책관계자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저장 기간이 길지 않은 반면, 생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생육 시 기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공급량이나 가격 변동이 큰 편입니다. 이런 특성 탓에 농산물 수급안정은 늘 요구되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요.

정책입안자 김철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장(이하 순) 네, 맞습니다. 농산물은 생필품으로서 수요는 일정한 반면 공급은 기상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경 공급량 감소로 발생한 배추 파동 당시 가락시장의 배추(상품) 도매가격(경락 가격)이 하루 만에 전일 대비 54.4%로 급등하고, 다음 날은 다시 33.5% 급락하는 등 가격이 극단적으로 변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배면적의 변화와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량 증감 등 공급부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정부에서는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추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농업관측사업, 계약재배의 생산 출하 안정제 개편, 수매비축, TRQ 운영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떤 과정으로 수립됐나요.

순 2010년 9월경 공급량 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등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배추 파동 발생 이후,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산물 유통비용 감축, 가격 변동성 완화, 산지 가격의 변화가 소비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 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의 확산, 수급관리 체계화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수급정책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합리적인 수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시장개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5대 품목(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5년~7년)의 실제 도매가격 평균값을 기초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관련 기관 조치사항을 명시한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유통협약·명령제 운용, 계약재배 및 생산안정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내산 수매비축 등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로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책관계자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이하 환) 농산물 수급안정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가공 산업 육성 등 관련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 2015년 겨울 배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1

월 하순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됐으나 정부의 신속한 시장격리 및 수매비축 등으로 2월부터는 안정세에 진입했으며, 봄 작형은 가뭄으로 5월 이후 가격이 상승했지만 신속한 비축과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 6월에는 가격 안정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김장배추의 재배면적 감소와 습해 피해 발생으로 인한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김장철 배추 가격의 급등이 예상됐습니다만, 선제적 수매비축과 비축물량의 소비지 할인 직공급(시세 3,900원/포기 배추를 2천 원 내외로 판매)으로 가격 급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을 통해 생산농가에는 안정적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큰 변동 없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이 지속되려면 앞으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특히 현 정책에 대한 개선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순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이상기상 및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생산량 변동을 최소화하는 등의 사전적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추진이 보강돼야 합니다. 사전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재배 의향조사 결과 등 정확도 높은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사도 주산지 협의체 등 광역조직화된 산지 생산자 조직들이 농업관측 정보

를 바탕으로 재배면적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 조직화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상청, 농진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업과 기상정보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기상예측 자료를 토대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 가뭄 등 피해 발생 시 이에 대비한 농진청, aT, 농협,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대응 조치 계획을 미리 마련해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상 기상 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생산안정제 품목을 배추, 무, 마늘, 양파로 확대하고 사업량도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8%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기존 품목에 고추를 추가해 주요 5대 채소류를 15%까지 확대해 계약재배의 수급안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소비자에게 농산물 수급과 물가 특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그 특성상 다수의 생산자가 생산에 참여해 수급 조절이 어렵고, 기상의 영향으로 최대 30% 정도까지 변동이 발생하며 공급에 따른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시로 가격의 폭등락이 반복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소비자들이 알게 된다면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만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농산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많은 편으로, 농축산물이 가계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에도 소비자는 체감물가를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오해받고 있어 농산물 수급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심각하지 않은 수급불안 상황 시 수급농산물 도입을 지양하고 국내 농산물의 출하조절 및 소비자의 소비 조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생산자의 생산기반을 강화시켜 국내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지속시킬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순 농산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aT와 농진청, KREI, 농협 등이 생산하는 수급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급 조절매뉴얼 위기단계 사전예보제' 도입과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 운용을 통해 선제적 수급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사전 예보제의 경우 KREI의 협조로 5월까지 사전 예보제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출하안정제를 2020년까지 품목별 생산량 3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추와 무의 상시 비축을 늘리고 산지 출하조절시설을 통해 수급조절 규모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농산물 수급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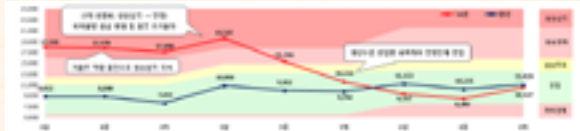


'16년 배추·무 수급안정 사례

- '16.1월 주산지 폭설·한파로 생산량 급감하여 겨울배추는 4월 하순까지, 겨울무는 5월 상순까지 가격상승이 지속되었으나,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조기출하 유도 및 비축물량 확대로 5월 중·하순 안정대로 진입

* 배추 : ('16.4하) 5,121원/포기 → ('16.6상) 1,831원(도매가격 기준)

* 무 : ('16.4하) 1,708원/개 → ('16.6상) 934원(도매가격 기준)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에 대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자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운영, 생산·출하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수급관리체계를 고도화

타임라인

- ’13.2
농업관측 품목을 35개 품목 (채소 10, 과일 6, 과채 7, 축산 6, 곡물 2, 국제곡물 4)으로 확대
- ’13.4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 ’13.5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마련
- ’13.10
무·건고추·마늘 수급조절매뉴얼 마련
- ’14.4
배추·무 단수예측모형 개발
- ’14.8
농업관측 산지기동반 운영 (고랭지·겨울배추)
- ’14.12
마늘·양파 단수예측모형 개발
- ’15.4
생산·출하안정제 등 자율적 수급안정대책 추진
- ’15.6
농업관측 생육환경모니터링시스템 (USN) 구축·운영(고랭지배추, 5대)
- ’16.6
유통조절명령발령기준 고시 개정
- ’16.7
건고추 중기선행모형 개선
- ’16.8
배추·무·마늘 수급조절매뉴얼 개정
- ’17.4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매뉴얼 운용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하고, 기상 등에 따른 수급불안이 심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업관측 정보 제공,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생산·출하안정제 시행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 생산량 과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락시 수매비축, 비축물량 방출, 계약물량 출하조절, TRQ 운영 등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으로 수급안정 도모



1)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2) 고랭지 배추

주요성과

1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마련 및 대책 추진

-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의 중심 거버넌스로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와 합의에 의한 대책을 자문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을 설정한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추진 중

2

농업관측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측 고도화 추진

-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요 품목의 단수 모형 개선, 표본농가 확대, 생육환경모니터링시스템(USN, Ubiquitous Sensor Network)-CCTV-드론 등 ICT 등을 활용한 관측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
-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측정보를 문자·SNS·이메일 등과 주산지 지역 농·축협, 마을회관에 관측 요약 포스터 게시, 농업전문지 등에 관측요약자료 (엽근·양념채소류) 게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측정보 확산과 주산지현장설명회 확대 개최 등을 추진

3

생산 출하안정제를 통해 계약재배의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비축제 도입으로 수급불안 상황 적기 대응

- 생산안정제는 약정물량 50%, 출하안정제는 약정물량 20%에 대해 수급의무를 부담시켜 계약재배의 수급조절 물량 규모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였고, 상시비축 통해 수급불안 시 신속한 수급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 도모

4

수매·수입 비축 및 탄력적 방출을 통해 수급 불균형 최소화

- 5대 민감품목(배추·무·고추·마늘·양파) 170천 톤('13~'16)을 비축(방출)하여 기상여건·재배면적 변동에 따른 생산량 과부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국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TRQ물량을 운용
* '13~'16년 운용실적: 고추 5천 톤, 마늘 15천 톤, 양파 220천 톤, 생강 7천 톤



향후계획

1 다양한 수급정보(생산·출하·재고량, 기상상황 등)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17.6월)

* aT·농진청·KREI·농협 등이 생산하는 수급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제공

2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매뉴얼' 운용('17.4월~), '수급조절매뉴얼 위기단계 사전예보제'(1~3개월 전) 도입('17.하반기)으로 선제적 수급 대응체계 구축

* 사전예보제 계획 초안 마련('17.5월, KREI 협조) → 시범적용 실시('17.하반기)

3 생산·출하안정제를 '20년까지 품목별 생산량 35%까지 확대

⇒ 주요 5대 채소류 품목별 생산량 15%까지 생산안정제를 확대하고, 기존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안정제 20%까지 확대 하여 안정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4 aT 및 산지출하조절시설 상시비축 규모 확대

* 전체 상시비축물량 : ('16) 배추 2,600톤/월, 무 1,000톤/월 → ('17) 배추 3,500, 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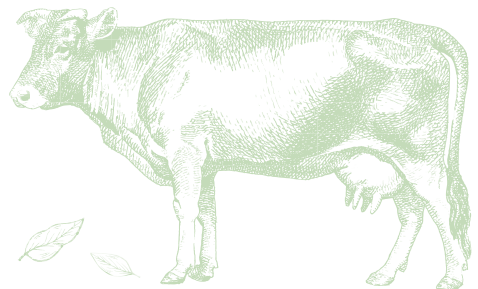
⇒ 배추, 무 상시비축 규모 확대를 통해 고랭지, 겨울 등 가격 급등시기 선제적이고 신속한 수급대책 추진



5. 식량안보

안정적인 먹거리, 제2의 국방

- 26. 쌀 관세화 추진
- 27. 식량자급률 제고
- 28. 쌀 수급안정
- 29. ODA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30.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쌀 관세화로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룬다

쌀 수입의 지속 증가로 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에 나섰다.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과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 김명환 원장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전한영

식량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김명환

GS&J 회장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2015년 이후부터 513%의 관세율로 쌀 관세화를 결정했는데요. 쌀 관세화의 배경과 정책의 추진과정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이하 전) 1994년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도의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두 차례나 유예했는데요. 이로 인해 쌀 의무 수입물량(MMA)이 매년 증가하게 돼 쌀 산업의 부담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WTO와 약속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더 많은 의무수입물량에 따른 쌀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쌀 관세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쌀 관세화 이슈를 농업계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대화와 소통에 특히 노력했는데요. 우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쌀 관세화와 관련된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내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의 기간담담회와 한 차례의 농업인단체 사무총장 간담회, 세 차례의 토론회 및 일곱 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농업인단체 합동간담회와 개별 농업인(단체) 면담 및 설명, 강의가 100여 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쌀 특별 포럼,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설명 등도 20회 이상 실시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13%의 쌀 관

세율을 결정하고 2014년 9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으며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했습니다.

쌀 관세화 이후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책관계자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 원장(이하 김) 국영무역에 의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량은 지난 2014년 기준, 40만 9천 톤으로 생산량의 10%에 달했습니다. 그중 30%인 12만 3천 톤이 밥쌀용으로 수입됐는데요. 이번 관세화 조치로 밥쌀용 수입 조항이 삭제됐고 정부는 2015년 이후부터 밥쌀용 수입쌀을 6만 톤 이하로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밥집 등에서 많이 쓰던 밥쌀용 수입쌀이 국산 쌀로 대체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이후 미래의 쌀 산업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더불어 쌀 산업 촉진을 위해 향후 정부가 정책 추진 시 고려하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김 쌀 산업 발전대책은 쌀 목표가격 인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 수매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리로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면 논 면적이 재배로 쏠려 과잉생산, 시장가격 하락, 정부의 시장격리, 재고 증가, 직불금 급증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쌀을 생산해야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휴경하거나 타 작물을 심어도 주도록 생산 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증산 유인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쌀 이외의 서류, 맥류 등에 대해서도 목표 가격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쌀



이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쌀 면적이 두류 등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두, 콩나물콩, 녹두, 팥, 메밀 등은 저율관세 할당량(TRQ)의 1.5~3배를 초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국산 생산량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직불금을 생산 중립적(생산비 연계)으로 개편할 경우 국내 총 보조(AMS) 1조 4,900억 원이라는 직불금 상한이 없어져서 가격 하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쌀 관세화로 국경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외국 쌀이 관세를 내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쌀도 관세를 지불하고 해외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관세화 시대에 수출 확대는 정부가 아닌 생산자단체가 주도해야 합니다. 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조속히 발족해 햇반과 같

이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린 다양한 쌀 가공제품들을 연구개발하여 대량생산 상품화 하고, 국내외 해외시장에서 판촉 행사를 개최 하며, 한국쌀 브랜드 관리와 수출창구 일원화 등의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자조금관리위원회의 창립과 자조금 매칭 펀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미국종합처리장(RPC)이나 임도정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정부의 운영자금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현 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 513%의 관세율 확정을 최우선 목표로 미국, 중국 등 이의제기 국가와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우리 제도를 WTO 규범과 일치시키면서 WTO 검증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발전기반을 마련했으나, 구조적 수급불균형(공급 과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15.12)과 보완대책(17.2) 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쌀산업발전대책에 기반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대외환경 여건 변화에 대비해 식량안보 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쌀 관세화는 지난 20년간 최대 농정숙제였던 것으로, 인내와 끈기, 이해와 소통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덕분에 기존의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증량이 중단됐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쌀 관세화 시대에 대비해 농가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해 우리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관세율 513% 적용 시 국내 수입쌀 가격

- 미국산 '16년 12월 기준 도입 가격이 777.5원/kg일때, 실제 관세율 513% 적용시 3,988.6원/kg으로 국내산(1,520원/kg) 쌀 경쟁력 상승 효과

사례 2. 정부 내 대응체계(농림축산식품부 T/F 및 관계부처 회의)를 구축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쌀 관세화와 관련된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14년 20여 회)

사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

('13.8~12월) 기자간담회(2회), 농업인단체 사무총장 간담회(1회), 토론회 3회 등 지역별 설명회 7회 개최
('14.1~7월) 농업인단체 합동간담회, 개별 농업인(단체) 면담·설명·강의(100여 회), 쌀 특별포럼, 농해수위 위원 등 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설명(20회 이상)



쌀 관세화 추진에 대하여

쌀 관세화 추진

'14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년간 유예해 온 쌀을 관세화하기로 하고, WTO협정에 근거해 관세율 513% 결정

타임라인

- '13.6 쌀 산업발전 포럼 구성
- '13.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14.1 '13~'17년산 목표가격 (188,000원/80kg) 결정
- '14.8 쌀 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14.9 쌀 관세율(513%) 결정 및 쌀 산업발전대책 발표
- '15.1 쌀 관세율화 시행
- '15.11 농업·농촌부문 가뭄 대응 종합대책 발표
- '15.12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 '16.3 쌀 수급안정협의회 구성
- '16.6 쌀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 '17.2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발표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95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15년 이후 513% 관세율로 쌀 관세화 결정
- ✔ 관세화 이후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추진



📁 주요성과

1

쌀 관세화로 지난 20년간 유예 대가로 쌀 의무 수입물량 추가 증량 중단

- 관세화를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증량이 중단됨으로써 쌀 산업의 위축을 막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가 가능하게 됨

2

국내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 513%로 결정

- 관세율 적용 시 국내 수입쌀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쌀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

3

전문가, 관계부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쌀 관세화에 철저히 대비

- 부내 T/F 구성 및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4

쌀 관세화 이슈를 농업계의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 전개

-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쌀 산업발전 포럼,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으로 오랜 농정현안 해결

5

쌀 관세화 시대에 대비, 쌀 농가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 산업발전 대책'(14)을 추진하여 우리 쌀의 지속적 발전 기반 마련

-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통해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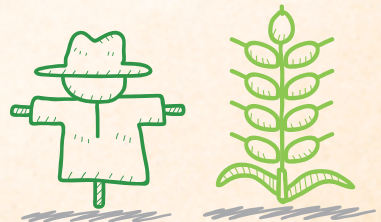
향후계획

1 관세율 513% 확정을 목표로 WTO 검증*에 적극 대응

* WTO 검증은 모든 이의제기 국가가 이의를 철회할 때까지 국가간 양자협의로 진행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제기)
⇒ 513% 관세 확정을 위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리적,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WTO에 통보한 양허표가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

2 시장개방 체제하에서 우리 쌀의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15) 및 보완대책(17)을 마련,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및 재고 정책 등 추진
⇒ 쌀 적정생산, 품질관리 강화 등 유통개선, 쌀가공·쌀가루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확대, 재고감축 및 해외원조 확대 등 쌀 산업 발전 방안의 적극적 추진으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제고



쌀, 안정적인 곡물 수급으로 먹거리 걱정 타파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식량창고가 비게 될 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던 곡물의 가격 상승으로 그 피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식량자급률은 어떤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평소처럼 먹을 수 있게끔 우리 힘으로 자급하는 식량을 말한다. 식량정책과 유미선 서기관과 (주)월향 이여영 대표는 식량자급률 제고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유미선

식량정책과 서기관



정책관계자

이여영

(주)월향 대표

쌀이 없어 배를 굶는 사람보다 다이어트를 위해 쌀을 멀리하는 사람이 많아진 오늘날,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정책은 조금 의아합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유미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이하 유) 식량자급률에서 식량이 의미하는 바는 당장 입에 들어갈 식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우리가 직접 생산한 식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곡물을 생산해 외부시장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2010년 하반기입니다. 당시 국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서게 됐습니다. 현재, 유후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이모작 확대와 밭 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식량자급률은 지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논 활용을 유도하고자 이모작 직불금을 신설했으며 이모작 농지에 대한 단기 임대차 등의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밭 재배 26개 품목과 밭 고정직불금으로 이원화되던 지원체계를 밭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고 밭직불금 단가를 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6월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등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으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나요?

유 전국 최초로 전남 구례에 우리 밀 가공공

장을 설립하면서 국산 밀의 자급률을 제고했습니다. 우리 밀로 만든 라면, 건빵, 국수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선보였으며 우리 밀 전시체험관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서는 등 식량자급률 제고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의 황금들녘 영농조합법인은 팔과 밀의 2모작 안정 재배기술로 팔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농가소득 또한 향상됐습니다. 팔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관내 호두과자점의 국산 팔 사용업체가 증가했으며 논 타 작물 재배 면적을 넓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로서 식량자급률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외식업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관계자 이여영 (주)월향 대표(이하 이) 외식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요리)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식량자급률의 확보는 외식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하지 못한 재료를 이용해야 하거나 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으로 50.2%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50%가 가격과 품질, 선도 등에서 국내 생산된 제품만큼 혹은 더 경쟁력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이 농업을 규모의 경제로 키워 낼 수 없는 우리나라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품질개발에 집중하고 특색 있는 작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지금보다 더 향과 맛, 질감이 개선된 경쟁력 있는 원물을 생산한다면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이 함께 농업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효과적으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토양 기반의 경작을 줄이고 도심형 식물 공장을 도입해 계절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급률 자체를 강제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외 수출과 식품 가공 등 농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자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이 원하는 제품의 기술개발과 생산을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자급률 제고 대책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자면 어디를 꼬집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책 수립 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공급 과잉인 현재 상황에서 자급률 제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식량이 부족해서 자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국내 생산되지 않는 다른 식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더욱 큰 것인데요. 농정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6차산업의 연장선에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R&D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식기업이나 식품 가공 기업이 참여한 농산물 소비 패러다임은 물론, 최신 소비 심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과 향후 발전계획이 궁금합니다.

유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적정생산 유지가 필요한데, 답리작 확대 정책을 통해 잡곡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급률은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도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출과 소비를 확대해 과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개량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 및 사양관리기술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2016년 연구용역을 토대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정립하고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장사례

사례 1. 구례 우리밀 가공 공장, 대표 최성호



우리밀 가공 공장 전곡 최초 설립 후 우리밀 상품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국산밀 자급률 제고

- '14년 1,000톤 규모 맥류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 지원(총사업비 6억 원, 국비 1.8)

⇒ 우리밀을 가공한 라면, 건빵, 국수 등 가공 제품 생산, 우리밀 전시체험관 운영

* 수매량: ('15) 2,400톤 → ('16) 2,720톤

사례 2. 천안 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 대표 정만서



팥+밀 2모작 안정 재배기술 보급으로 팥 재배면적 증가 및 농가소득 향상

- 관내 호두과자점 국산팥 사용업체가 증가('15: 3개소 → '16: 8)하고 있으며,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밀+팥 52ha)

* 재배면적/생산량: ('10) 22.5ha, 27.4톤 → ('15) 80ha(3.6배 ↑), 92톤(3.4배 ↑)

사례 3. 가움취약 지역 안정적 급수



'15년도 가움이 가장 극심했던 강화군 지역에 김포-강화간 임시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한강물을 안정적 급수

- 강화군지역 저수자·배수로 등에 저류(750만 톤)하여 농업용수 확보

* 저수율 상승: '15.9월 10% → '16.5월 68%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겨울철 유희농지 등을 활용한 맥류, 사료작물 등 재배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식량자급률 지속 향상

타임라인

'06.12

중앙농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5년 자급률 목표치 및 달성대책 마련

'07.12

'농업·농촌 발전계획('08~'13)' 마련 시 '15년 자급률 목표치 반영

'09.12

'11년에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결정(상임위 보고)

'11.7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15년 목표치 재설정 및 '20년 목표치 신설)

'13.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에 '17년 및 '22년 자급률 목표치 포함

'16.3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연구

'17.3-4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7년에 목표치 재설정 추진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쌀 자급기반 유지 및 이모작·밭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 공급체계 구축

☑ 기후변화 및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



주요성과

1 유희자원을 활용한 겨울철 이모작 확대, 밭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전체 식량자급률 지속 향상

- 이모작 직불금 신설('14), 이모작 농지에 대한 단기 임대차('15) 등 제도개선
- 밭재배 26개 품목과 밭고정직불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2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16.6)을 바탕으로 밭 식량작물 생산·수요 확대 정책 추진

- 주산지 중심 밭농업 기계화,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등 밭작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콩 등 정부수매물량 확대 등을 통한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 조치로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

3 가뭄이 심했던 '15~'16년 계기,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 저수용량 확대 및 용수비축 등 안정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마련

- 가뭄 취약지역 대상 지하수 개발, 양수장 설치 등을 통한 용수원 확보 등으로 안정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함

향후계획

1 주산지 중심 조직화·규모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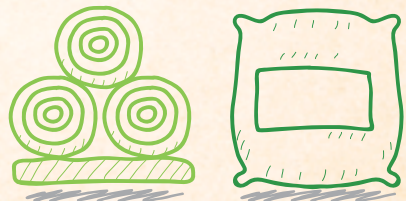
* 공동경영체 육성(누적) : ('16) 15개소(식량 5) → ('17) 35(12) → ('25) 290(96)

- ⇒ 밭작물 공동경영체와 연계한 밭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우수 품종 개발·보급 확대,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안정적 판로 구축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추진

2 농업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고, 가뭄상습지역 용수개발을 추진하여 안전 영농기반 확충

* 안전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농업용 저수지 내진능력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가뭄·수해 대응을 위한 농촌 용수 개발 및 상습침수지 배수개선 등을 통해 안전 영농기반 확충 강화



재고 없는 적정생산으로 우리 쌀 가치 높인다

농식품부는 쌀의 적정생산과 소비확대, 재고관리 등을 통해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 수급체계를 유지하고자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과 (주)남영식품 김남두 대표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충분한 제도 개선으로 수급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입안자

전한영

식량정책과 과장



정책관계자

김남두

(주)남영식품 대표

쌀이 과잉공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입안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이하 전) 쌀 재배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과 반대로 먹거리 다양화, 식습관의 변화로 소비는 지속 감소하면서 쌀 공급 과잉이 누적됐습니다. 이로 인해 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대책 비상 T/F'를 구성·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및 추진사항 점검(16.9월~, T/F회의 3회)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회 등 100여 명과 함께 쌀 수급안정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했지요.

이외에도 쌀 수급안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 등으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장, 관계 장관회의 등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쌀의 과잉 공급 및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 전환이나 수출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낮은 발작물 기계화율 때문인데요. 특히 간척지의 경우 염기로 인한 타 작물 재배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쌀은 가격 하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타작물재배는 소득보장이 어렵고 수급과잉 시 판로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해 많은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공급된 쌀을 수출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쌀은 높은 가격과 차별성 부족으로 수출 등의 외면 확대에 한계가 많은 상품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수출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바이어 발굴 등에서 어려움이 많아 수출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수출한 이천 쌀(1백 톤)에 대해 훈증소독제 냄새 등 품질 문제가 제기돼 반품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동일한 바이어를 통해 2016년 말까지 5백 톤을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원인 규명, 책임소재 등의 논의로 인해 추가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 190여 톤의 수출에 그치게 됐습니다.

현장 관계자 입장에서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까.

정책관계자 김남두 (주)남영식품 대표(이하 김) 쌀을 가공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기업 입장에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수급안정계획은 쌀 소비 촉진 대책보다는 재고 관리대책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쌀 공급에 있어 재고량 과소에 따라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기후 등에 따라 풍흉이 좌우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시장예측이 가능하도록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쌀 소비 촉진 대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김 쌀 소비 촉진 정책은 식량용 소비대상과 가공용 소비대상에 따라 구매패턴, 구입조건

등이 다르므로 소비 정책적 전략 구분이 필요합니다. 식량용(밥쌀용)은 식습관의 서구화, 가정 취식 비율감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밥쌀용 소비전략을 현재의 1인당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써야 합니다.

식습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1인당 쌀 소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공용 소비전략은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정책 등 가공용 원료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써야 합니다. 가공용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원료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쌀의 품질이 떨어져 산업체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품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준으로 높여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등 소비자 인식변화 노력도 중요 합니다.

쌀가공식품의 R&D도 중요한데 쌀 가공식품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으

로 R&D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D를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쌀 소비를 많이 하는 제품에 중점을 두고 기술연구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 생산연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비축제도 등 법령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쌀은 가격 하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타작물은 소득보장이 어렵고 수급 과잉 시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농가가 기피하는 만큼 타작물 재배 시 소득안정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동안 쌀 문제는 생산측면의 문제 해결에 집중됐으나 이제는 적절한 소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쌀 가공식품산업의 기반 구축까지 일정 수준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쌀 소비확대를 통해 쌀 수급안정 목표를 달성

하려면 쌀의 소비통로가 식량용과 원료용으로 구분돼 있음을 인식하고 식량용과 원료용에 맞춘 적절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한 곡물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쌀에만 편중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쌀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적정 비중으로 타 작물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 쌀 수급 균형 현실화를 위해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대책을 지난 2월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소비 및 신수요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재고관리 감축과 수출, 원조 등으로 공급 과잉 해소에 노력하여 2019년 이후에는 쌀 수급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등 품질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 활성화, 소비식생활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쌀 소비 감소를 완화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관련 애로

- 벼 재배농가 고령화 및 낮은 발작물 기계화율
* 논농업 기계화율(16) : 97.9% / 밭농업 기계화율(16) : 58.3%
- 간척지의 경우 염기로 인한 타작물 재배 애로
- 쌀은 가격 하락시 변동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타작물재배는 소득보장이 어렵고 수급과잉시 판로확보 등의 문제로 농가가 기피

사례 2. 이천남부RPC

- 훈증소독 경험 부족 등으로 수출된 쌀 제품에 대한 클레임 발생
- '16.5, 6월 두차례에 걸쳐 수출한 이천 쌀(1백 톤)에 대해 훈증소독제 냄새 등 품질 문제 제기, 반품 요청 사례 발생
- 당초 동일한 바이어를 통해 '16년 말까지 5백 톤 수출 예정이었으나, 원인 규명, 책임 소재 등 논의로 인해 추가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 190여 톤 수출에 그침



쌀 수급안정에 대하여

쌀 수급안정 쌀 적정생산, 소포장 유통 및 품질관리 강화, 소비확대, 재고감축, 해외원조 등 신수요처 확대 등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수급안정 추진

타임라인

- '14.9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 '14.10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 '15.7 식량정책포럼 구성
- '15.10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 '15.12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
- '16.3 쌀 수급안정협의회 구성
- '16.10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발표
- '17.1 쌀 수급안정 대책단 구성
- '17.2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마련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쌀 적정생산, 소비촉진 등을 통한 연차적 공급과잉 해소 및 안정적 수급 체계 유지
- ✔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생산, 소비촉진, 재고관리, 해외원조 등 신수요처 확대 및 제도개선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애로사항

1 4년 연속 풍작, 생산성 향상 및 소비 감소로 쌀 공급 과잉 누적에 따른 쌀 가격 하락
- 쌀 재배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쌀 소비는 지속 감소
- 산지 쌀값이 '15~'16년 지속 하락 추세

2 쌀은 직불금의 생산 연계 조건 등으로 인해 쌀 생산 유인요소로 작용, 정부재정 부담 증가로 구조적 공급과잉 초래
- 쌀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은 확대
* 직불금 지급액 : ('12) 6,101억 원 → ('13) 6,866 → ('14) 9,501 → ('15) 15,679 → ('16) 23,283

3 타작물의 경우 생산·수요기반 미흡으로 수급불안 요인 상존
- 잡곡류는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로 영세하고 낮은 기계화로 생산력이 취약하여 생산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 밭농업 기계화율(58.3%)이 논농업(97.9%) 대비 현저히 낮고, 밭 기반정비도 14% 수준으로 미흡(논 기반정비 80.6%)

4 쌀 변동직불금 등 농가소득 안정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쌀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수단 및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농가소득 보전 등 정책적·제도적 장치 미비

5 높은 가격, 차별성 부족으로 수출 등 시장 외연 확대에 한계 도달
- 적극적 대중 수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품질 문제, 낮은 인지도, 바이어 발굴 애로 등으로 수출 실적 미흡(452톤/97만\$)

📁 향후 보완과제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19년 이후 쌀 수급 균형 도모

1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생산 추진

⇒ 공공비축 매입, 농지은행 등 기존사업과 연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타작물 생산확대를 위한 규모화·기계화 촉진 및 다수확 품종 배제 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 촉진

2 쌀 소비, 신수요처 확대 추진

⇒ 라이스 랩 운영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 R&D 지원 등을 통한 쌀가루 유통 활성화 및 소비·식생활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지원 등으로 쌀 소비 감소폭 완화
⇒ 쌀 및 쌀 가공제품 수출 확대, APTERR* 공여,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등 해외원조를 통해 新수요처 확대
* APTERR : 한중일-아세안 국가가 식량위기 등 공조를 위해 '13.3월 창설한 국제공공비축제

3 특별재고관리를 통한 재고감축

⇒ '17년 복지용·가공용·사료용 공급 등 특별재고관리를 통해 '19년 이후 적정수준의 재고 달성

4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쌀 수급안정 도모

⇒ 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쌀 직불*, 공공비축제도 개편 및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 등 개정 추진
* 기존 벼 재배농가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생산종립화 검토



우리 농업의 성공노하우 전수하여 개도국 농업에 희망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유일한 국가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ODA(개발도상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다. 이에 국제협력총괄과 배상두 과장과 국립한경대 윤해진 교수는 농식품부의 농업ODA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책입안자

배상두

국제협력총괄과 과장



정책관계자

윤해진

한경대학교 교수

농업을 통한 ODA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성과 제고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배상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장(이하 배) 2010년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ODA에 대한 내외부적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대다수 개도국의 산업 기반이며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로 ODA 지원 시 개발 효과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개도국 빈곤을 극복하는 데에 농업분야 성장이 타 분야에 비해 2~4배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도국 농촌 지역의 생산성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농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된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하라리주 3개 마을에 소규모 관개시설(취입보, 관개수로 등)을 구축했던 사업으로, 사업 종료 이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하라리주 지역 농산물인 토마토, 양파, 옥수수 등의 수확량이 1.5~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ODA 성과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과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계자 윤해진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이하 윤) ODA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제품 도입, 선진농법 보급에 의한 특정 품목의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소득증진, 인프라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 서비스 향상이라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농업

당국은 농업 생산성을 넘어 농촌의 정주 개념에 근간한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만큼 이 분야에서 경쟁력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개발사업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수원국의 문화와 전통, 국가제도를 존중하면서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도국 내에서의 농업 사업임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품종, 기술, 방식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지의 작물, 농법, 기후, 토양 등을 연구해 현지 적응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기능 외에 현지 작물 등 농업을 연구해 개도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ODA와 비교해 농식품부 ODA가 특화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 농업 ODA 국제기관으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 세계 식량계획(WFP), 국제감자연구소(CIP) 등이 있으며 각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농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의 일례로 일본의 농업 ODA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টে็ม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는 쌀이고 다른 하나는 관개시설입니다. 특히 쌀의 경우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아프리카 녹색혁명 동맹(AGRA)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CARD Initiative에 의해 아프리카 20여 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JICA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나 원조기



관과 유사하게 네 가지의 기본 전략을 수립해 농업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 소농의 경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 둘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지도 서비스 강화. 셋째, 가치 사슬 증진. 넷째, 민관협력 프로그램 축진이 그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국형 농업 ODA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과정의 핵심은 농민 조직화에 의한 농촌공동체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앞서 말한 네 가지 보편적 요소를 농촌공동체 개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농업 ODA의 특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ODA가 가진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실행되어야 할까요.

윤 우리나라 ODA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그리고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또한 2002년 약 3,000억 원에서 2014년 약 2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ODA의 예산규모 및 지원 범위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이러한 양적, 외형적, 제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ODA 전문가 양성은 많이 부족하다

고 생각합니다. KOICA에서 ODA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ODA 전문가 생태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ODA 전문가보다는 학계, 공공기관, 정부 기업 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 ODA 전문가도 일부 대학 교수 및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위원 그리고 농진청 등 농업 관련 기관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고 유능한 전문적 전문가(full time consultants)의 공급이 부족하고 활동 공간도 매우 좁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ODA 영역에서 전문가 양성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ODA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떤 정책 및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배 종료된 사업 중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기계 활용 교육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해 운영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종료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개도국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와 대상 지역을 검토해 국가별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부, 지방정부와 함께 협의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의 농민단체나 관련 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를 면담해 사업 기획 시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 전후를 정량적으로 비교

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사업 착수 단계에서 기초 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개도국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수시로 체크하는 외부 용역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윤 세계 ODA의 약 10%가 농업분야에 투입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분야는 ODA에 있어서 핵심 분야입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농업 ODA의 영역을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 개발, 농지 개발, 농업용 수자원, 농업 투입요소, 식량생산, 경제작물·수출작물, 축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지개발, 식량자원, 농업교육 부문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농민소득과 직결된 분야는 각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농업 ODA 전문가가 파견됨에도 불구하고 아열대 농업과 국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 축적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지원으로 개도국의 농촌공동체를 육성,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 한국산 씨감자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농민들이 감자를 생산한 후 현지진출 식품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연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감자재배면적이 9배로 증가, 계약판매 물량 5배로 증가

사례 2.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점적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건기에도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지원
* 연 2회 채소 재배가 가능해져 농산물 생산량이 67% 증가



ODA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ODA 성과제고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개도국 농업 농촌 개발을 지원

타임라인

- '13.8
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
마련 : 기관간 협업과 사업
조정시스템 강화 등
- '14.3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
지침 제정 : 사업의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 '14.6
농림분야 ODA 협업 체계화
방안 마련
- '15.4
초청연수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연수에 대한 자체 평가 시행
- '15.5
ODA사업 단계별 현장점검 및
자체 평가지표 마련
- '16.1
ODA사업 종료지구 실태점검 실시
- '16.4
아시아진출기업협의회 구성 :
ODA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 측면 지원 논의
- '16.10
ODA 종료사업(르완다)
사후관리 추진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06년부터 개도국의 농업,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농업협력(ODA)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6개 국가의 농업발전에 기여하였음
- ☑ '17년 현재 16개국과 2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사업 내용은 농업 인프라 제공, 농촌 환경개선, 영농기술 교육, 농정 컨설팅 등 각국의 수요에 따라 다양함



1)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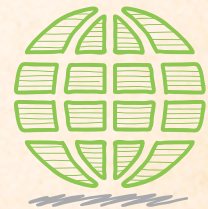
📁 애로사항

- 1 '06년부터 사업 시작, 개도국 농업·농촌 개발 지원**
- 26개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2 다만 일부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추가 지원 필요**
- 수원국 측의 현지사정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 유지에 노력
- 3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ODA의 지속적인 효과 창출**
- 사업 기획, 관리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내의 ODA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향후 보완과제

- 1 종료된 사업 중 현재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기계 활용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하여 운영 정상화**
* '17년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예산으로 약 3억 원 확보
- 2 향후 신규사업 기획 시 현지에서 실제 필요로하는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우리부 사업 기획 프로세스를 개선**
⇒ 수원국 농업부와 직접 협의하여 현지에서 실제 필요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현지 농민단체, 관련 농산업 기업 등 관계자를 면담하여 사업의 성공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업 기획 프로세스를 체계화
- 3 지속적인 사업 개선 위해 사업 평가체계를 정비**
⇒ 사업수행기관 이외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전담하도록 우리부 평가지침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사업평가 추진
⇒ 사업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착수 단계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기초선행 조사를 실시
* 사업수행용역의 용역 범위에 기초선행조사를 포함
- 4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외부 용역 (M&E용역)을 도입하여 사업 수행용역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개선**
* M&E(Management and Evaluation) : KOICA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신규 도입한 용역으로, 사업의 심층기획 및 추진 점검, 관리를 PMC 외의 기관에서 담당
⇒ '17년부터 우리부 신규사업에 대해 M&E 용역을 시범 도입, 정기적으로 사업 현장에 파견하여 사업추진 도중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



나눔으로 더 가치 있어지는 우리 쌀

우리나라 쌀 공급과잉의 해결책으로 해외 식량원조가 적극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통상과 김경미 과장과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으로 국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국경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입안자

김경미

농업통상과 과장



정책관계자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식량원조협약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이 추진된 배경과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하 최)

1967년 발효된 식량원조협약은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14개국의 식량원조 협의체로 세계 식량 안보 증진 및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 협의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구의 12%인 8억 4천 2백만 명이 식량부족에 처해있고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식량원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은 불가피한 것이고 식량원조협약 체제는 이러한 노력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결실입니다. 회원국은 매년 식량원조 최소약정액을 자발적으로 공약해 시행하고 원조제공 현황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DAC 기준에 맞게 대외원조체제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권위를 지닌 협약에 가입해 안정적인 원조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원조방식입니다. 특히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쌀의 대외원조를 통해 국내 재고의 부담을 덜고,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식량지원 혜택을 환원하는 작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입안자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과장(이하 김) 매일 쌀밥을 먹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성적인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쌀 수요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앞으로도 매

년 20~30만 톤의 초과공급이 예상됩니다. 상당한 재고비용이 소요되지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과 비슷한 쌀을 먹기 때문에 우리 과잉 쌀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물로 주변 수원국에게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수원국과 그 주변에는 곡물을 재배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쌀과 같은 곡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식량원조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쌀 관세화 유예기간에는 쌀 원조가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 관세화 이후 가입 검토가 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쌀 관세화 이후에는 식량원조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주요 원조국의 현물원조 지원현황, WTO 등 국제규범, 수원국 수요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협약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11월 제7차 식량원조위원회에 옮겨버로 참석해 주요국의 환영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국산 쌀의 식량원조에 국제법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1월),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2월), 대외경제장관회의(3월)를 거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연내 협약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식량원조위원회 사무국에 협약 가입 의향을 담은 서한을 송부했고, 조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앞서 현물로 주변 수원국에게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도 현물로 식량을 원조하고 있나요?

최 최근 국제적으로 현금원조 원칙을 수립 해나가려는 경향이 있어 호주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현금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물형태의 원조는 식량원조협약 가입국들의 7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해 현물원조가 지배적인 추세라 볼 수 있지요. 특히 프랑스와 덴마크는 현물형태로 원조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스위스는 분유를 현물형태로 원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90% 이상의 식량 원조를 현물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70% 이상을 현물원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밀가루, 콩, 해바라기 기름 등의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의 현물 원조는 충분히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조의 방식이며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단기기간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2016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식량원조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회원국 대표들은 긴급원조가 필요한 국가와 지역, 필요 물품 리스트, 구호 방식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류애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현금·현물 지원 방식의 적법성보다는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빵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규범들을 위주로 검토하였던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

했던 분위기였지요. 회원국들은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우리나라의 관심(옴저버로의 참석)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저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및 식량원조를 위해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앞으로 국내, 국외 투 트랙으로 식량 원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조약가 입절차 완료를 위해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수원국을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수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원조 전문성을 가진 전문국제원조기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원국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농민에게도 보람 있는 식량원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ODA(공정개발원조) 사업과 연계를 한다거나, 쌀 이외의 현물 원조 방안, 수원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량원조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정책 설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우리나라의 식량원조협약 가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 국내 쌀 재고량 증가의 부담을 덜고, 대외 원조 확대로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

았던 혜택을 환원하는 한편,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유럽 국가들의 수많은 역사적 과오(제국주의 침략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한 전 세계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외원조 전담조직인 ECHO를 통해 140여 개국에서 WFP, UNICEF, WHO, UNHCR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식량, 보건, 교육, 위생, 여성보호, 아동보호, 재난구제 등 제반측면에서의 다초점 원조를 시행해오고 있는 EU의 원조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러시아도 이러한 효과에 주목해 FAC에 가입한 것이고요. 이는 역사적 과오가 적응에도 불구하고 대외 이미지가 높지 않은 한국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최소원조공약을 준수하는 메카니즘 속에서 다른 국가나 기구들과의 업무조정과 협력을 통해 우호친선 관계도 형성시켜나가야 합니다.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제다자기구를 통해 현물원조를 시행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일본의 사례처럼 양자적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식량, 보건, 교육, 위생, 여성보호, 아동보호, 재난구제 등 제반측면에서의 다초점 원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긍정적 시나리오는 한국의 식량원조협약 가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사례

언론 보도사례.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한 선택(헤럴드경제, '17.2.10.)

적정 수준의 쌀 재고 관리와 쌀값 안정을 이르는 동시에 국제적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 기대

-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력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식량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12억 인구 중 42%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다.
- 사실 그동안 정부는 쌀 해외원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국내에도 굶주리는 저소득층이 있는 등 정서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쌀 재고 관리와 쌀값 안정을 이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AC 가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건 일단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가 식량 지원국이 된다는 것은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원조수혜로 가난을 벗어난 농민들이 생산한 쌀로 빈곤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언론 보도사례. 식량원조협약(FAC) 연내가입...두 마리 토끼 잡는다(농촌여성신문, '17.2.10.)

국내 쌀 공급과잉 해결하고 국제사회 책임분담·국격제고 기대

- 최근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적 식량지원 수요에 맞춰 농식품부는 연내에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원조협약(FAC)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EU·캐나다·일본·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국내에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방식으로 국제원조에 나섬으로써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한해 지원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수원국·원조물량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를 지원하여 전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기아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에 대하여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

식량원조협약 가입으로 우리 쌀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체계적인 해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며, 식량원조를 받다가 주는 최초의 국가로서 빈곤국 국민들의 굶주림을 달래고 희망을 줌

타임라인

- '13.1
식량원조협약 개정(발효: 1967년)
- '13.11
주영국대사관에서 협약 관련 정보 제공 및 가입 검토 필요성 의견 표명
- '15
쌀 관세화 시행
- '15.2
주요국이 FAC 위원회 참석 및 FAC 가입 권유
- FAC의 기아퇴치·식량안보 증진 목적 및 회원국 현황 설명, 우리나라의 FAC 위원회 옵저버 참석 및 협약 가입 권유
- '16.10
FAC 사무국 면담
- '16.11
제7차 식량원조위원회 참석
-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기아·영양실태 공유 및 회원국들의 향후 식량원조 이행계획 보고
- 현물원조 동향 등 파악
- '17.1
주요국 면담
- 주요 회원국들의 對FAC 식량원조 공약 규모 및 구성(현물·재정 기여 비율, 공여 국제기구 등) 등 제반여건 파악
- '17
관계부처 협의
- 경제관계장관회의('17.1),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7.2), 대외경제장관회의('17.3)를 통해 FAC 가입 연내 추진에 합의
- '17.2
주요국 대상 입장 재확인
- 미국, EU, 일본 등 8개 제의 공관에 국산쌀 원조의 식량 원조 국제규범 합치성 등을 확인한 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회신됨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해외 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처 발굴에 대한 필요성 증대
ODA 관점에서 우리 해외원조의 80%가 인프라 개발 등에 집중되어,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 ('16~'2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부처 합동)
- ✓ '67년 발효된 식량원조협약은 주요국 식량원조 협의체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 및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수행
국제적 권위를 지닌 협약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원조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원조방식이라 판단
- ✓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식량원조협약에 연간 460억 원(쌀 5만 톤 수준)을 공여하는 내용으로 연내 가입하기로 결정
* 경제장관회의('17.1.18),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7.2.9), 대외경제장관회의('17.3.24)



📁 주요성과

1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쌀 수급안정에 도움 예상

- * 쌀 재고량(17.2월) : 231만 톤(국산 187 / 수입 44(수입발발용 11))
- 우리나라는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매년 20~30만 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재고관리에도 상당한 비용 소요
- * 1만 톤의 연간 재고관리비용 : 27억 원 (5만 톤 : 135억 원)
- 연간 5만 톤을 해외원조할 경우 이는 초과공급 물량의 약 20% 수준이고, 1만ha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있음

2 국회에서도 FAC 가입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16.9~), 언론과 농업인 등에서도 가입에 대한 기대감 고조 및 긍정적 평가

- * 조선-동아 등 10여 개 언론보도 (“남아도는 쌀, 해외원조-생산감축으로 해결”, “식량원조협약 가입추진은 늦었지만 잘한 선택” 등)

3 식량원조를 통해 국제 평균에 못 미치는 인도적 지원 비율을 늘리고, 국가 위상 제고 가능

- * 주요국 ODA대비 인도적 지원 비율 (13) : 미국 15%, 영국10%, 일본9%, 스웨덴 14%, 스페인 13% (OECD DAC 평균 6%)
-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를 받다가 해외원조를 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는 요청이 여러차례 있었음
-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은 전체 ODA 대비 1.7%이나(OECD DAC 평균 6%), 식량원조에 연간 460억 원을 지원한다면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은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에 포함되나, 인간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행위로서 주로 식량 및 의료지원을 의미
- 또한, 전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현실 감안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 * 개도국의 기아인구 비율은 12.9%로 약 8억 명으로 추정,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2.9%) 및 남아시아(15.7%) 지역의 기아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 (FAO)



향후 보완과제

1 협약의 연내 가입을 위한 조속한 조약체결 절차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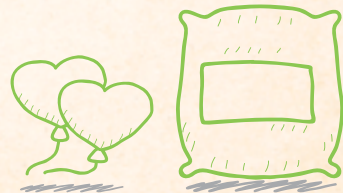
- ⇒ 현재 조약안 국문본 등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
- ⇒ 그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비준동의 등 조약가입을 위한 일련의 절차 추진 예정
- ⇒ 조약 체결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가입승인이 이루어진 뒤 UN에 가입 문서를 기탁하면 조약체결이 완료됨

2 전문원조기관 선정 등 식량원조 세부 실행계획 마련

- ⇒ 수원국 수요 파악의 전문성, 원조비용 효율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국제 전문 원조기관을 활용할 예정
- ⇒ 수원국은 식량원조의 긴급성, 부대비용, 국제협력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3 식량원조위원회(Food Assistance Committee)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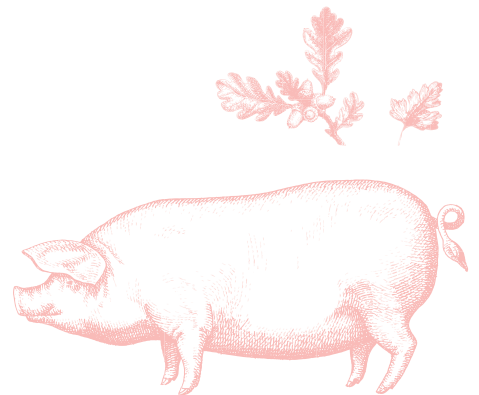
- ⇒ 제8차 식량원조위원회('17.6월)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의사 공식 표명
- ⇒ 제9차 식량원조위원회('17.11월)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승인 요청 예정(최종 승인 목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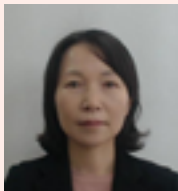
소통과 협력을 통한 농식품산업·농촌 발전

- 31.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 32. 정부3.0 3년 연속 중앙부처 1위
- 33.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34. 경영체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농업, 체질개선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거듭나다!

기본적인 농산물 생산으로는 더 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농민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졌다. 이에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시혜 과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기획조정실장이 스마트 팜과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예산 확대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책입안자

이시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정책관계자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대 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책입안자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이하 이) 개방화,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된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재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외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IT, BT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 확산, 농식품 수출확대,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수준과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들의 예산 규모는 2013년 8,959억 원에서 2016년 1조 2,131억 원으로 약 35.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식품부 예산이 6.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농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팜 확산 등 ICT 융복합 예산 지원은 2013년 12억 원에서 2016년 493억 원으로 약 41배 확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시설 원예 스마트 팜 시설 보급 사업과 축사 시설 및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고, 2016년에는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 신축 사업(100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연이어 2017년에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35억 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했지요.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 예산도 2013년 3,871억 원에서 2016년 5,821억 원으로 약 50% 확대됐는데요. 특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용자)' 예산이 2013년 3,871억 원에서 2016년 4,61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신규로 도입됐습니다.

일례로 2015년 도입된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육성(15년 15억 원 → '16년 34억 원),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15년 360억 원 → '16년 400억 원),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15년 636억 원 → '16년 650억 원)이 그것이지요. 2016년에는 할랄식품 산업 육성(95억 원)과 우유 수출 확대 지원(27억 원) 등의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예산은 2013년 648억 원에서 2016년 765억 원으로 약 18% 증가했는데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지원(13년 172억 원 → '16년 222억 원),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13년 149억 원 → '16년 179억 원) 등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14년에는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14년 149억 원 → '16년 179억 원), 2015년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14년 127억 원 → '16년 255억 원) 등을 신규로 지원했습니다.

미래 성장산업화 기반을 위한 지난 4년간의 예산 확대를 외부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책관계자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
획조정실장(이하 박)** 농식품 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화, 수출 확대, 스마트
팜 확산, 조직화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 것
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의 6차산업화는 부가가치 제고와
농촌형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정투입에 따
른 효과가 큰 정책입니다.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시장 대응력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팜 확
산의 경우 고려하던 농업현장을 고려해 조금
더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수출 확대의 경우도 가
공식품과 함께 원료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 여건상 농식품 예산의 외적 규모 확대
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식품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
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 소규모의 농가가 다수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생산 측면에서의 경영효율성과 유통 측면

에서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체
계적인 조직화와 규모화는 지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전문화·규모화된 농가의 비중 확
대를 고려할 때 농업경영체의 경영위험관리
를 지원할 수 있는 재해보험 및 수입장보험
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농가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재정 투입이 지속되어야겠지요.
반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 사업은 줄여야
합니다. 농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도 안 되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최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 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
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
또 다른 분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예산의 외적 증가만큼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집행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집
행과 성과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장의 체감도 및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
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
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지속
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농업 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단순 제어형

태의 스마트 팜 확산에서 나아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IoT
를 활용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경쟁력있는 선도업체와 유
망 품목을 집중 육성(미래클 프로젝트, 글로벌
브랜드 등)하고, 수출유망 품목 발굴과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농산물 중심에서 한국형 스마
트 팜 등 농기자재, 브랜드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농업의 6차산
업화 성과를 확산하여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컨설팅
도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안테나숍
등 수출 지원, 규제 완화 등 단계별·유형별 맞
춤형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1인 가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간편식, 기능성
식품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종자, 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과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자수출과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 미생물, 곤충 등 농생명 소재 산업
육성, 반려동물 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신규도입(15년 도입)

6차산업 지구조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4: 시범 → 15: 127억 원 → 16: 255)

예시) 영동 포도 와인 6차산업화 지구는 와인 제조업체 43개를 중심으로 와인생산, 관광상품(와인로드) 개발,
공동 레스토랑 운영, 양조용 종자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90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매출액/방문객: (14) 41억 원/42만 명 → (16) 47/45 (14.6% ↑ / 7.1% ↑)

사례 2. 스마트 팜 시설보급 지원 신규도입(14년 도입)

시설원에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ICT기술 융복합 스마트 팜 확산 (14: 181억 원 → 16: 300)

* 시설원에 스마트 팜 시설보급 사업, 축사과수 ICT 융복합 사업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대에 대하여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ICT 융복합(스마트 팜 확산 등), 수출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종자산업, 동식물자원화 등) 지원

타임라인

'13

미래성장산업 육성 예산 8,959억 원,
농식품부 예산대비 6.62%

'14

미래성장산업 육성 예산 9,709억 원,
농식품부 예산대비 7.12%

'15

미래성장산업 육성 예산
1조 1,678억 원,
농식품부 예산대비 8.32%

'16

미래성장산업 육성 예산
1조 2,131억 원,
농식품부 예산대비 8.44%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우리 농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지원 확대

- ① ICT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 ②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
- ③ 농촌의 지역자원과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 ④ 식품·외식 산업 육성
- ⑤ R&D 및 신산업 육성



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 '13년 8,959억 원에서 '16년 1조 2,131억 원으로 약 35.4% 증가 2)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 주요성과

1 ICT 융복합 지원

- 원예, 축산, 과수를 중심으로 ICT융복합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팜을 보급하고, 농식품 분야에 ICT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대('13년 12억 원 → '16년 493억 원)
- * 스마트 팜(온실/축사): ('14) 60ha/30호 → ('16) 1,077/234

2 수출확대 지원

- 중국, 동남아, 할랄시장 등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유망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13년 3,871억 원 → '16년 5,821억 원)
- * 농식품 수출: ('12) 56.4억 불 → ('16) 64.7
- 주요 수출품목 검역협상 타결: ('13~'16) 대중국 김치·쌀·삼계탕 등 46개 품목
- 중국 알리바바 티몰(Tmall) 내 '한국관' 개소 이후 한국식품 입점 및 판매실적 증가
- * 한국식품 입점 브랜드 수: ('15) 162개 → ('16.9) 257개, 59% ↑
- * 한국식품 판매 제품 수: ('15) 1,552개 → ('16.9) 2,387개, 54% ↑
- * 한국식품 판매실적: ('15) 25백만 위안 → ('16.9) 37백만 위안, 48% ↑

3 6차산업화

- 6차산업 사업모델 발굴, 창업코칭, 판로개척 등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농촌자원이 집적된 주산지 중심의 6차산업지구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13년 3,871억 원 → '16년 5,821억 원)
- * 6차산업 지구: ('14) 3개소 → ('16) 13
- * 6차산업 창업자: ('14) 392개소 → ('16) 561
- * 농촌 방문객 전년대비 내국인 14.2% ↑, 외국인 97.6% ↑
- * 6차산업 지구 지정 현황: ('14) 3개소(충북 영동(포도와인), 전북 순창(장류), 경남 하동(농차)) → ('15) 6개소(강원 횡성(한우), 충남 서천(소곡주), 전남 영광(찰보리), 경북 문경(오미자), 경북 의성(마늘), 제주 서귀포(감귤)) → ('16) 4개소(강원 강릉·평창(고랭지 배추), 충남 공주(알밤), 전북 장수(레드푸드), 경남 함양(산양삼))



보완과제 및 계획

1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속 확대 필요

- ⇒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수준
- * 농식품 예산 대비 미래성장산업 육성 예산 비중: ('13) 6.6% ('14) 7.1% ('15) 8.3% ('16) 8.4%
- ⇒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성과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
- ⇒ 국회, 농업인 단체, 농식품부, 농업인 등의 협력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재정당국과 국민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설득할 필요

2 기존 지원 사업의 집행, 효율성 강화 및 건전성 제고

- ⇒ 국가 재정여건 상, 농식품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사업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미래성장 산업화에 집중 투자할 필요
- ⇒ 보조사업 운용·연장평가, 통합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중심으로 기존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중점 투자분야를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할 계획

3 예산 확대 계획

- ⇒ 향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및 농식품 전·후방 산업으로 수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 보급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 농업의 6차산업화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단계별 지역단위 발전체계 구축과 체류형 농촌관광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



정부3.0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국가를 실현하다

농식품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감하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실행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중앙부처 내 '정부3.0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정주 과장과 상명대 김미경 교수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농식품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정책입안자

김정주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정책관계자

김미경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
상명대학교 교수

정부3.0이 무엇이고, 농식품부가 3년 연속 정부3.0 우수 부처로 선정되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입안자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이하 주) 정부3.0이란 ①정부가 갖고있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②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구현하자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책고객인 농업인·소비자 행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농축산물 가격 등 농식품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수요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가공해서 제공하고, 농촌형 고용모델, 농축산물 직거래, 귀농·귀촌, 도시농업 등 정책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정부3.0 민간자문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부3.0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관계자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경) 자본주의 4.0과 세계화3.0 등 지속적인 사회모습의 진화는 더욱 풀어나기 어려운 공공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웹의 진화와 정책생태계가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정책지식생태계의 활용은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집결시키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태동했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4개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관협치에 기반한 개방적 정부생태계를 지향하면서 현실 문제에 주목합니다. 정부3.0은 과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3.0 시행 이후 농식품부 성과라고 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 지난 2015년 10월 진행된 '제3차 정부3.0 현장포럼'은 행사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완주군 등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석해 정부3.0 시행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농촌 현장을 방문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전북 완주군 후정리의 공동생활홈으로 2016년 국민 디자인단 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농촌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것인데요. 실제 방문한 공동생활 홈은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위생 등 삶의 질 개선과 높은 정서적 만족감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지역 맞춤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은 소형버스와 택시를 활용해 농촌주민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3.0 주요 성과와 앞으로 '정부혁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경 정부3.0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정부·유능한 정부·투명한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략별로 성과는 우수사례의 개발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의 변화는 고객을 구체화하고 수요에 대한 증거기반의 확인으로 국민 관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절차의 간소화, 서비스의 통합화 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능한 정부의 경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증거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이 확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부서 간, 기관과 외부와의 협업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확산됐으며 특히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장려하고 창조경제를 연결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방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식품부가 계속해서 우수부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현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까요. 또한 향후 농식품 분야의 혁신모델은 무엇입니까.

경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정부 3.0 일하는 방식'을 국정과제 등 주요 과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국정과제 평가 시 내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식품 분야가 계속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관장 중심의 민·관 소통 플랫폼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다수의 기관이 협업하는 업무 중심으로 영상회의 활용을 지속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지속 발굴도 필요합니다.

현장사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금요 농정 소통채널 운영'



1. 금요 농정신문고

현장 애로·민원 등을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듣고 답변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개선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시 피해 농가 농신보 지원 확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정책 개선사항 발굴·개선 조치



2. 금요 농정 브라운백 미팅

주요 농정현안·정책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주제 : 기능성식품 수출 활성화, 6차산업 정책방향, '17년 통상전망,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성식품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17.2.28)', '6차산업화 개선방안'(17.3.2)' 등 수립

⇒ '금요 농정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의 간극을 좁혀 '협치농정' 구현 및 '국민 농정시대'에 부응



농식품 분야 정부3.0 3년 연속 중앙부처 1위에 대하여

정부3.0

정부3.0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 혁신 노력으로서,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개혁을 의미

타임라인

- '13.11.25
농림축산식품부 정부3.0
민간자문단 구성
- '14.3.12
정부3.0 성과를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성과급과 연계
- '14.10.16
농림축산식품부 정부3.0
중기 실행계획 수립('15~'17년)
- '15.11.10
'15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 '15.11.23
'15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 '16.2.23
'15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표창 수상
- '16.11.29
'16년 국민디자인단 추진
우수과제 선정
- '16.12.2
'16년 영상회의 활용 '우수'기관 선정
- '16.12.12
정부3.0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 '17.2.6
'16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 노력으로
 - ① 서비스 정부 :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② 유능한 정부 :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
 - ③ 투명한 정부 :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것



주요성과

1 서비스 정부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기여

- 대중교통복지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형 맞춤형 교통모델(일명, 천원 택시)'을 만들고, 지자체로 확산(농식품부 지원 '14년 12개 → '16년 30개, 지자체 자율 지원 확산 '14년 9개 → '16년 94개)
- 농산물의 가격, 요리법, 효능, 손질법, 보관법 등 18개 기관 23개 사이트에 분산 관리되는 콘텐츠를 통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여 '농식품정보누리(푸드누리; www.foodnuri.go.kr)'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 국민이 정책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반려견, 농촌관광, 고품질농산물, 도시농업 정책을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2 유능한 정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빅데이터 활용,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농업·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민간 부분과 협업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 농업·농촌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업 경쟁력 및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SKT, KT, 전문가 그룹이 협업)
- 농업관련 행정정보, 정책·통계정보, 공간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현장점검, 동물질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
- 농정포럼(농업인 단체), 농정신문고(민원해결), 브라운백미팅(전문가), 농정토론회(주요현안) 등 국민·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3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유도하고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 35개 공공도매시장, 농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개별 관리되던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통합, 고품질로 개방하고 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창업을 지원*
- * 맞춤형정보·교육·창업공간·창업컨설팅·홍보 지원,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공유대회' 우수활용사례 선정(파밍)('16.11.11)
- 8개 기관, 9개 증명서류*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축산물품질·인증 정보를 '축산물거래증명일원화서비스'로 통합
- * 도축검사증명서(검역본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브루셀라예방접종확인서(농식품부), 혈통등록증명서(한국종축개량협회), HACCP인증서(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G마크인증서(경기도), 황성한우품질인증서(황성군), 친환경축산물인증서(식약처)

보완과제 및 계획

1 AI 등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에 첨단 기술 접목 확대

⇒ 과학기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측능력 강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정책 수립·집행에 활용하고, 국민참여 채널을 확대하여 체감성과 높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 운영

2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도시지역의 소비자, 농촌지역의 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전달할 필요

3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 농식품 관련 기관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융합형 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등의 맞춤형 지원 확대로 창업 활성화

4 다수부처 분산정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창출

⇒ 한식문화와 제품 연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농촌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품질 개선, 불량식품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정부3.0



급격한 농정패러다임 변화,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아름 과장과 공주대 행정학과 류충렬 초빙교수가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두 사람은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정책입안자

정아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정책관계자

류충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 이전의 현장 또는 학계 상황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평가를 하신다면요.

정책관계자 류충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류)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은 주로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건의가 들어오면 그 고충을 해소해주는 수동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림 분야의 피규제자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건의된 과제 중심으로 개혁대상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농식품부가 수동적 규제 현실화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현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6차산업과 식품산업 활성화 등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정책 관계자 입장에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의 의의와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타 부처와는 다른 농식품부의 규제개혁 특성을 꼽는다면요.

류 규제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는 강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목표 달성에 적합하지, 정도가 과하지는 않은지, 규제 여건 변화에 적정한지 등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해야 하지요. 이것은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변화, 융복합화, 국제경쟁 등의 변화에 현재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했던 이유입니다. 현재 농식품분야는 6차산업과 융·복합화, 농업 범위의 변화, 외부 자본의 허용 정도, 규모화·전문화 등 농정 패러다임 자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분야만큼 규제환경이 급변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이 많은 분야도 드물지요. 때문에 규제로써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라고 하면 우선은 강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개혁은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농식품부도 규제 완화 또는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요.

정책입안자 정아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이하 정)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용인의 농도원 목장은 유제품 가공공장을 건립하고자 했지만 공장설립에 따르는 의무인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도로 확보에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시에는 진입도로 확보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유제품 가공공장은 성공적으로 설립됐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만 보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6차 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됩니다.

류 먼저 농식품부가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 포럼’부터 2015년 ‘규제개혁 공모’, 2017년 ‘농식품 규제개선 포럼’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향후 더 많은 개혁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간의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농지 활용 규제, 브랜드하우스 막걸리 등 주류 산업, 목장의 유가공 제도 등의 규제개혁도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가 지향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이나 모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야 하겠지요. 이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성과를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개선 필

요사항 검토에도 꾸준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정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제가 과연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지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요.

시급한 분야부터 규제정비 작업단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의된 과제에 답하거나 현장을 찾는 것만으로는 규제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6차산업과 융·복합 추세에 따라 규제 정비 시 타부처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타부처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가공 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산업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 없이는 규제개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농식품부가 목장형, 농장형 등 다양한 6차산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맞춤형 규제정비 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와 전문가 간 소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겠지요.

류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개혁은 일정한 한계를 갖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 주체이기도 하지만 규제자이기 때문이지요. 규제자는 간혹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규제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나 개선과제 제시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피규제자 또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장사례

사례 1. 수원 솔마당, 대표 김주평



제1호 하우스 막걸리 제조 면허 획득

- 음식점에서 하우스맥주처럼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 생산·판매
 ⇒ 9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의 손님이 줄어 돌파구를 찾던 중 발효실을 갖추고 직접 막걸리를 만들었으나 양조면허 없이 술을 팔 수 없고, 대형 양조장에 맞는 탁약주 시설기준만 있어 하우스 막걸리 제조·판매가 불가하였음, 주세법 시행령 개정(16.2)으로 하우스 막걸리 제조 면허를 받아 새로운 경쟁력 확보

사례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전 회장 이수범



1cm 꼭지 수박 유통으로 노동력 및 비용절감

- T자형 꼭지를 남기기 위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유통과정에서 꼭지 보존을 위한 노동력 절감 및 작업속도 향상
 ⇒ 꼭지없는 수박 유통 시범사업(15.4) 및 꼭지없는 수박 전면유통(16.3)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MOU체결

* 하루 매출 2,000만 원인 매장에서 10만 원 비용 절감
 **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과실중도매인연합회,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단체 참여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에 대하여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농식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하여 농업인 등 피규제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등 성과 확산

타임라인

'13.3.7

'13년 농림수산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13.5.30

농업·농촌·식품산업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선 과제
추가 발굴 및 개선계획 마련

'13.12.31

'13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 부처 선정

'14.5.22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개최

'14.9.3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표

'14.12.31

'14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 부처 선정

'15.5.21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협의회 개최

'15.6.15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15.7.9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

'16.2.22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16.5.18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표

'16.12.31

'16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 부처 선정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현장포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규제개혁 현장점검' 등 민관 참여를 통한 규제개혁 추진



1) 'T'자형 목지 수박 대신 목지 짤은 수박 유통' 개선 후 모습 2) '목지 짤은 수박 유통'

📁 주요성과

1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비하여 경제활성화 기여

- 새 정부 출범 4년간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자본·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176건 발굴·개선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요 개선과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9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들녘경영체 육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

-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 → 400ha로 확대하고, 법인이 직불금을 수령 가능토록 개선
-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기업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취득 허용('14.12)으로 과학 영농 지원 가능

3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정비

-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제도를 도입,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조, 유통, 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
-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업진흥지역(8만 5천ha)의 해제·완화('16.6)에 따른 6차산업 활성화 등 2조 2,878억 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4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 귀농인에 대한 비닐하우스 자금 지원 요건을 면적 660㎡, 농지 임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농경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선, 부부 농업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보완과제 및 계획

1 스마트 팜, 식물공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 필요

- ⇒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 신산업 육성을 위해 '先 허용, 後 규제'를 원칙으로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

2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지속 발굴·정비

- ⇒ 규제개선 T/F(월 1회), 규제개혁 현장포럼(반기별),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연 1회) 등 현장·전문가의 규제개혁 요구를 적극 반영

3 타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다수 부처가 연계된 규제 정비 필요

- ⇒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입지규제 완화 등 기재부, 국토부, 식약처 등 타부처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4 규제비용 관리제를 적극 추진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도입 억제

- ⇒ 규제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큰 폐지·완화 규제는 적극 발굴하고 신설·강화 규제는 신중하게 도입



정보와 데이터로 과학농정을 실현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개별 농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향후 농업인 자격 확인 및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김재형 과장과 서울대 이태호 교수는 수지와 통계로 보다 효율적인 농정을 실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정책입안자

김재형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과장



정책관계자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모든 것이 데이터화 되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농정 또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해당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가진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책입안자 김재형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과장(이하 김)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이를 기반으로 2009년 4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등록제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3년간의 도상연습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등록제도의 도입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장기 농업발전 전략인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국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정보 관리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현황 파악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과학 농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관계자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이하 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정책 담당부서인 농식품부가 개별 농가의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쉽게 비유해보자면, 과거의 정보 수준은 옆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흑백 TV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총천연색 HD TV를 매일 우리 집 안방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직불제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농업부문에서는 개별 농

업경영체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정부는 등록된 경영정보 데이터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에서도 효율성이 향상됐는데요. 지역별, 농지별 품목정보 제공으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의 현지조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국 과수원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예찰 및 방제 등이 추진됐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사례 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우리 농업이 쌀 중심 농업에서 다양한 밭작물 중심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농가의 경영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농업 정책도 중앙 집중적이고 평균적인 것에서 지역 중심적이고 특성화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일종의 빅 데이터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다양화와 지역농정의 특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농업형태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특히 6차 산업이나 ICT 첨단농업 등 새로운 경영정보에 관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정책의 육성을 위한 농업 현황자료로도 개발, 제공되겠지요.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기초자료들을 통해 향후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해당 정책의 발전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 저는 평소 '정보 없이 지원 없고, 데이터베이스 없이 정책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농업경영체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정보를 정부에 스스로 제공해야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해서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농업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소중한 정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과 정부의 소통에 기여함으로써 농정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앞으로 주요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주기적 품질관리 등으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농지별 품목이나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정보 등록은 물론, 등록된 정보의 현행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지요. 또한 등록정보의 활용분야를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농

업발전계획 수립이나 특화품목 육성 등도 등록정보를 활용해 보다 적합한 농정을 펼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농업경영체 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김 새로운 농업형태에 대한 기초자료와 농업정책의 육성을 위한 농업 현황자료 개발 및 제공이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는 6차산업과 ICT 첨단농업 등 경영 정도에 대한 관리, 제공 등 알맞은 정책을 만드는 데 유용한 기초 정보가 될 것입니다.

농업 현황에 대한 자료 역시 읍, 면, 동 단위의 세부적인 농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정책에 관해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사실에 입각한 정책만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사실이나 거짓에 기초한 정책은 농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농업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우리 농업정책에서 '정

치적인 고집'이나 '포퓰리즘적 억지'를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농업경영체 데이터를 확충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확대에 보다 수요자 편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접 정보를 설계·조회할 수 있는 '비정형 검색' 기능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계열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농업관측 및 농업재해지원 업무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필요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단위 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으로 지방농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자체보조금 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지방농정을 지원하고, 지방농정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사례

사례 1. 농업경영체DB를 통해 과수 화상병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5.5월 안성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즉시 농업경영체 DB에 구축되어 있는 전국의 사과·배 재배농지 정보를 검역본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에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긴급 예찰 및 방제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시에는 대책수립을 위해 재배현황 파악에만 최소 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농업경영체DB 구축으로 농가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방제비용 등 총 1,29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

사례 2. 농업경영체DB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업인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인의 '농업'증사 여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함으로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농업인 편의성이 향상

연간 70만여 명(연금 34만, 건강 36만) 농업인 편의가 증진되었고 약 43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발생



경영체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경영체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

경영체DB 확충 및 활용도 제고란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개별 농가의 농업경영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각종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

타임라인

'04

농업·농촌 종합대책
- '소득안정계정'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제시

'07

시범사업 실시
(9개소, 4,506명 등록)

'08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방안 확정

'09.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보완

'14

데이터 기반 농정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DB 현행화 추진
- 경영체등록과 직불사업신청 통합 및
등록정보 일체 갱신

'15~'16

정책자금 관리 효율화를 위해
경영체DB와 개별농림사업(102개)
연계·통합

'17~

경영체DB를 활용한
지방농정강화 지원

농정방향 및 정책추진

-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 ✓ 통합·관리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사업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1) 경영체DB 활용 모습 2) 과수 전염병 발생·확산 예방

주요성과

1

경영체DB 확충

총 163만호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를 통합·관리

- 매년 약 2,000개소의 경영체 등록·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정보를 접수·처리 하는 등 농업인 편의향상 지원
- 신뢰도 높은 경영체 등록정보 관리를 위해 국토부, 행자부 등 타기관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오류 정보를 상시관리 등 품질관리를 추진

2

경영체DB 활용

경영체DB를 활용하여 비농업인, 보조·융자금 부당지급을 사전 차단하는 등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 제고

- 경영체DB와 농림사업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사업이력 관리, 유사·중복지원 방지 등 정책자금 관리 효율성 제고
- * 통합·연계 실적(누계): ('13) 5개 개별사업 → ('14) 22 → ('15) 63 → ('16) 102

경영체 DB의 직·간접 활용으로 처리비용 절감 등 각종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

- 병해충 예찰·방제, 주산지 설정, 통계조사 등 농업 현장조사를 위한 모집단 지원으로 행정비용 감소에 기여
- * (통계청)귀농통계, (검역본부)과수화상병예찰, (방역본부)가금류농장조사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 자격 증명대체 등 농업인 편의성 향상
- * (복지부)맞벌이 부부 증명, (고용부)외국인 고용쿼터 배정, (한국장학재단)농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세청)법인세 감면 등

3

경영체DB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 향상
- * 총 이용자 가입현황('16년 기준): 22,240명
- 지역별·품목별 농업경영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 를 구축·운영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 를 통해 자신의 농업경영규모에 해당되는 정책사업 지원정보를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
- * 행자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자부장관상 수상('15.11.28)



보완과제 및 계획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수요자 Needs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직접 정보를 설계·조회할 수 있는 '비정형 검색' 기능, 연도별 시계열 분석자료 제공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기능 강화
- ⇒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서비스」 를 통해 지원 가능한 농림사업 목록 확대 추진
- * 수혜가능사업 확인 서비스: ('15년) 18개 사업 → ('16) 54 → ('17) 76

2 농업관련 기초자료 필요 분야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 ⇒ 농업관측 및 농업재해지원 업무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연구기관 등에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 제공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농업·농촌 현황 및 시사점 제시 등 다양한 농정 아이디어 발굴

3 지역단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이용으로 지방농정 강화 지원

- ⇒ 기존 지자체 시스템 연계, 지자체 조회서비스 구축, 신규 지자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농업경영체DB 실시간 연계 서비스 구축
- ⇒ 농업경영체DB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방농정 지원 확산





2016 경관사진공모전 일반 우수상 수상작
이강주 "작업"

III

농특! 農talk!

- 1 농심 (農心)
- 2 신토불이 (身土不二)
- 3 한마디 한마당

III-1 농심 (農心)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정책기자단에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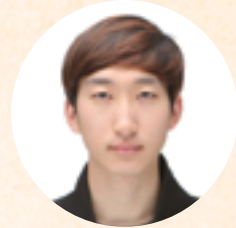
정책기자로 농업현장을 누비다

본격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학교에서 농학과 식품경제를 전공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은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정보 공유부터 농식품부, 농정원, 농관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단순히 농업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농업현장' 자체를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박람회나 정책 관련 기사를 쓰려면 해당 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해 기사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저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업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재배기술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을 만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블로거 활동으로 친분을 쌓

게 된 농장주의 초대로 농장 견학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식품자원경제학과 농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졸업 후에도 식품과 농업 쪽으로 진로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농업 전공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농가와 소통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과 경제를 분석해 앞으로 미래의 농업과 식품 발전에 선두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의 보릿고개와 통일벼를 지나면서 현재의 농업·농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산업화로 1차 산업은 2차, 3차 산업에 밀리게 됐고 인구마저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꾸준히 줄여서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엔 농업과 식품산업이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승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자단

“
‘미래’라는 식물을 위해
‘현재’라는 과도기를 겪은
‘휴’이 되기를

”





로컬푸드형 농가 레스토랑 꿈꿔



장은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자단



“

지역 대표 특산물과
6차산업화로
농가 소득 높이고
도농상생이
이뤄져야 합니다.

”

고령군 SNS 기자로 고령군 관광홍보에 주력하다 지난 2016년 농식품부 블로그 주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딸기와 감자, 수박, 메론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해 각종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먹을거리 생산 외에도 농식품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가 더 높은 부가 가치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다 보니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 미래 계획은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도시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마케팅하면서 진정한 6차 산업을 경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형 농가 레스토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령군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나라 대가야라는 역사와 문화, 근교농업을 결합한 특색 있는 지역 음식을 개발해 고령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6차산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농촌지역을 탐방하면서 한국의 농촌과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렴하지만 질 낮은 가공품이나 농산물을 찾기보다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선호하는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농업도 이런 구조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6차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가 실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가 원하는 것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나 생산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할 때에는 도시지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것을 판매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이나 전통과 경관을 지키는 농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II-1 농심 (農心)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정책기자단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창업농이 농산업을 바꾼다



류진호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농업이라는 분야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습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농수산대학에서는 일정 기간의 실습 기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진행되는 이 실습 기간은 농수산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겪는 과정입니다.

그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2학년 때 진행된 실습과정을 통해 농업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1년간의 실습을 미국에서 진행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창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업농에게는 확실히 좋은 장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실습농장에서 현장 교수님들과 하는 수업도 소중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농업을 단순한 업무나 몸으로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산정보와 판매 정보를 데이터, 시스템화합니다. 판매와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숫자 하나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

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는 마인드야말로 변수가 많은 농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창업농으로서, 전남 고흥에서 유자 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다른 과일들처럼 저장성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존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호도는 낮지만 겨울이 오면 선호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또 유자의 경우에는 해풍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해서 한반도 남쪽의 바닷가를 따라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과 판매 이외에도 유자즙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500잔 이상을 마시는 커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되고 있음에도 내수보다는 오히려 수출량이 더 많은 것이 유자차입니다. 저는 유자가 일반인들에게 커피처럼 일 년 내내 아무 곳에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매김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큰 그림을 그리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



효율적인 지원정책, 농촌 살린다



이혜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

농가 소득 안정화를 통해
농업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던 고3 수험생 시절, 아버지가 한농대 졸업 후 농업에 정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도 고민의 폭을 넓혀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축산을 배워 보다 전문적으로 소를 키워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주로 논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소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대에 입학해 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축산을 배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와 구제역의 발생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몇 년째 전염병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구제역이나 시에 걸리면 모두 살처분해서 매몰하는데 왜 그 많은 사체들을 바이러스 전파 방지라는 명목으로 매몰해 환경 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제역 걸린 소나 시 걸린 닭이어도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살처분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미래의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됐으면 합니다. 농

업 현장에서 펼쳐지는 노동은 정말 힘든데 반해,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아 어렵습니다. 농촌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젊은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촌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몸이 불편해서 요양차 오는 등, 농사를 생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를 빼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주고 싶어도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일은 정말 힘든데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니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업은 정말 3D 직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농촌에도 교육과 문화 등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고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많아졌으면 합니다.



III-1 농심 (農心)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정책기자단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바라



안다섬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어느 날 중학교 도서관에서 상록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라는 작가의 말은 도시에 살던 제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농업에 대한 궁금증은 열정으로 바뀌었고 농업계 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제 꿈은 농심을 가진 농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1학기 때 실습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정해 실험 후 발표를 하는 과제였는데요. 당시 저는 연꽃 씨를 가지고 다양한 토양과 환경에서의 발아율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도중 결과들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나타나 기분이 들떠있던 어느 날, 온실에 갔는데 연자가 하나 빠고는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들이 모두 연자를 물어 갔다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변수를 생각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하고 당시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었

습니다. 실수도 열정으로 녹여서 지금은 저의 꿈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오미자 농사를 시작하고 유통과 판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발효효소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변 농가들을 모아 발효사랑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천연발효식초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 농업인으로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혼자 전전공공하는 농업·농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농부가 아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의 무지개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농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오늘은 일상이지만 내일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은 경험입니다. 오늘의 경험으로 내일에는 진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 저는 오늘도 또 배우고 있습니다.

“

땀방울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나의 오늘과 내일

”



농촌체험 통해 농업 발전 목표



오범석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
청년 농업
경영인으로서
미래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
”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한국농수산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해 견학을 다녀온 뒤 ‘앞으로 농업을 이어갈려면 이곳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진학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취직해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면서 살길 바라셨지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영농사업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한국농수산대에서 배운 것 중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황을 이용한 작물 병충해 관리입니다. 오미자는 흰가루병과 각지벌레 겨울철 전지에 따라 과의 품질이 달라지는데 황을 이용하면 흰가루병과 각지벌레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품질의 오미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도 황을 이용한 기법으로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영농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같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산마늘과 돌배 품목에도 새롭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들 너무 많은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지만 저와 부모님의 생각은 한 가지 작물만

하는 것보다 여러 작물을 재배해봄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더 안전한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년 농업경영인’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기존의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다수라 젊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 사람들은 청년 농업경영인으로 들어와 기존 단체에서 느끼던 부담감을 줄이고 단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농들과 다양한 농업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함께하면서 우리 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인으로써 다양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래에 체험가공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낙농업과 작물을 결합해 치즈 체험도 하고 오미자 요거트나 돌배 요거트 등을 만들어 보는 등 작물 수확 체험과 치즈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체험 등 농촌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체험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III-1 농심 (農心)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정책기자단에게 물었습니다.



텃밭으로 삭막한 도시에 온기 전해

대학에 진학할 때 농업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면서 농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산업적 약자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농업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농업은 뿌리 산업이며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이 들어 농업과 관련된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농업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농촌은 다시 활기를 찾을 희망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YAFF)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가기 어려운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농식품업계의 다양한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봤던 수직 농장과 품종 개량 등의 연구 활동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농식품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품

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저의 계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사해 미래 농식품 유통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농식품 유통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혁신을 통해 생산자는 많은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는 도시농업을 통한 생산 부문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체장애인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텃밭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래에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텃밭을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을 도시형 장터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김지현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미래 농식품 유통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땀 흘린 만큼 성장하는 농업의 가치



채지혜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 브랜드를 만드는
인재가 되고 싶어요

”

주말마다 아버지를 따라 조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니가 일군 거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땀 흘린 만큼 성장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관련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미래기획단 역시 전공공부나 현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미래기획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는 ‘농식품업계와 청년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였습니다. 월마다 월별미션을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농업 관련 박람회나 축제를 찾아다니면서 습득한 지식을 블로그에 정리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배웠던 지식을 다시 되새기고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되어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콘텐츠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해 청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월평균 2,304명의 방문객들이 제 블로그를 찾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미래기획단을 통해 여러 현장에 방문하면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땀이 있었구나.’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농업을 알리기 위해 많은 농민들이 SNS를 시작하고 팜핑, 팜스테이 등 여러 분야에도 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우리 농업을 위해 힘쓰고 싶다는 열정이 더욱 샘솟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농업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지만, 향후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가공품 수출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앞으로 국내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수출이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수출성공 사례를 익히고 우수사례를 우리 농식품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III-1 농심 (農心)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정책기자단에게 물었습니다.



미래 만들 청년 농업인에 지원 필요

전 평소 유통을 활용한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들을 찾아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농산물 유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공부하면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를 알게 됐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농식품 유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생각했던 농업은 농부들이 힘들게 논밭에서 일해 수확한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운반하는 그런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뭔가 촌스럽고, 힘들고,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 유통 분야에 대해 알면 알수록, YAFF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의 농업에 대한 생각이 매우 근사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농업은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 내는 글자 그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가장 미래지향적인 산업임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YAFF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미래인재 육성 교육’은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6차산업을 잘 활용한 천안의 배 농장 ‘어룡농원’과 최신 물류시설을完비한 인천공항 물류 시설, 동남권물류단지 방문은 농업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인 짐 로저스와 조지 소로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산업 분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농식품 분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농식품 분야에 젊은이들이 뛰어들어서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aT의 YAFF처럼 미래 성장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열정을 무기로 장착한 젊은이들이 농업분야에서 역량을 펼치고, 우리 농식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강훈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농업은 미래 성장 동력, 젊은 인재들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야





농업, 미래에 더 주목받는 산업 될 것



박한희

2016 농식품미래기획단 YAFF



“
젊은 농업인 육성,
농촌에서
더 많은 가능성
발굴하는 길
”

도시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지내다 보니 문득 ‘농촌도 장점이 있고 도시보다 나은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발전 정도가 다를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던 곳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대학교 전공을 농업경제학과로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전공에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농업-농촌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게 됐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YAFF입니다. YAFF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면서 농업의 가능성에 대해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YAFF를 주관하던 aT가 농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위한 기관이라면, 농어촌공사는 하드웨어를 맡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이나 실제 수리시설 개발과 유지관리 등 농업 발전 및 농민들의 복지

를 위한 인프라 시설 조성을 주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아직까지는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이 없지만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다원적 기능을 갖고 도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 발전을 보여주는 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업을 죽어가는 산업, 뒤쳐지는 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언제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나 농업 관련 산업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저와 같은 젊은 인재들이 많아진다면 농촌은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기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III-2 신토불이 (身土不二)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농산품을 우리 국민이 추천합니다.



#영동포도 #나인
#우리나라에서도 나인이
#달콤해

영동포도와인지구에서 생산한 포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 와인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산팥 #우리팥 #천안
#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
#호두과자제 들어간대요

천안의 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해내는 국산 팥!
덕분에 호두과자에서 우리팥을 맛볼 수 있어요!



#건마감자 #복아
#건식으로 너무 좋아
#먹기 편해요

YAFF 강훈, 김지현이 추천한 복아.
청년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꼬마 감자들 귀엽고 맛있어요!



#삼계탕 #수출도 해요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9개국
#한국 대표 식품

한국 대표 식품인 삼계탕과 한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래요.
EU수출도 준비 중이에요!



#친환경사과 #디톡스 주스
#6학년농장 #성공적
#대기업플러스

DMZ플러스의 친환경 사과로 만든 주스를 추천해요. 직접 방문해서 베짖이 체험학교 등 농장도 체험해볼 수 있대요!



#국내는 100% 콩으로 만든 장
#간장 고추장 된장
#대가야육식품

블로그 기자단 장은희가 추천한 신토불이 정신의 대가야육식품의 국내산 콩으로 만든 간장, 고추장, 된장. 지역농산물만을 가공해 만들어요!



#등대지기 아재와 아짐
#강릉농 #해독주스 #유래
#신뢰

농수산대 졸업생 안다심이 추천한
등대지기 아재와 아짐의 해독주스.
보기만 해도 유쾌한 가족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해독주스래요.



#제주도 #애플망고
#달고 맛있어요

YAFF 강훈이 추천한
제주도의 애플망고.
새콤달콤 맛있어요.



#솔마당 #막걸리
#대양한 하우스 막걸리
#제주도 면허 업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우스 막걸리 제조 면허를 취득한
수원 솔마당.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를 마셔보세요.



#HSFLOWER #체험관광
#ICT로 농장 케어
#꽃도 체험도 일석이조

체험 관광을 운영하여 작물 생산부터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확체험도 함께하는
무농약 농장입니다.



#우리밀 #우리밀가공식품
#라면, 건빵, 곡수 등
#전사 체험관

전국 최초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
설립 후에 우리밀 상품화 및 체험활동을
통해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더블기
#관동카페 #쿠키, 너츠 등
#고탄백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식용곤충 홍보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III-3 한마디 한마당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오범석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편문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경관을 지키는 농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농촌을 지키는*
*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블로그기자단
장은희

꾸준한 국내 농업의 발전을 통해
*농민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라는 *식물*을 위해
‘현재’라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은
*‘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이승하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내일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꿈*을 이룹니다.
부족함을 아는 자가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갖고 노력하는 농부들 화이팅!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고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안다섬

2016 경관사진공모전 대학생 최우수상 수상작
신보경 “자연 그속으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살처분뿐인 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안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는
마인드야말로 농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가 소득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이혜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류진호

2016 YAFF 우수회원
박한희

농촌이나 농업 관련 분야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저나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를 바꿔나가고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식품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2016 YAFF 우수회원
채지혜

2016 YAFF 우수회원
강훈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면
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설(農說) '농업·농촌의 내일을 말하다'

발행 |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 2017년 5월

편찬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제작 | 폼폼디자인컴퍼니 fmmfdesign.com
02.514.7866